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내학술회의(2004. 4. 7) 발표논문집

학술회의 종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국내학술회의(2004. 4. 7)발표논문집

통 일 연 구 원

< 행사 일정 >

13:30 ~ 13:50 등 록

13:50 ~ 14:10 개회식

개회사 : 박영규(통일연구원장)
축 사 : 최송화(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격려사 : 정세현(통일부 장관)

14:10 ~ 16:10 제1회의 <정치·외교·대남 분야>

사 회 : 강성윤(동국대)

발 표 :

- ◆ 「김정일 정권 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전망」
정영태(통일연구원)
- ◆ 「김정일 정권 하 북한외교」
허문영(통일연구원)
- ◆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
최진욱(통일연구원)

토 론 :

- ◆ 유호열(고려대), 강원식(관동대), 홍용표(한양대)

16:10 ~ 16:30 휴 식

16:30 ~ 18:30 제2회의 <경제·사회·문화 분야>

사 회 : 최완규(경남대)

발 표 :

- ◆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박형중(통일연구원)
- ◆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사회변화」
서재진(통일연구원)
- ◆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문화예술」
임순희(통일연구원)

토 론 :

- ◆ 박순성(동국대), 김병로(아세아연합신학대), 신울(명지대)

18:30 ~ 만찬

개 회 사

박 영 규
(통일연구원 원장)

바쁘신 가운데 통일연구원 개원기념 학술회의에 참가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감독기관이지만, 감독과 지도보다는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자 애를 쓰시는 인문사회연구회의 최송화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사로 분초를 다투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으로, 오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 오신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연구원이 창설된 1990년대초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등 반세기를 지배해 왔던 국제냉전구조가 해체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일대 전환기를 맞던 시기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국내외정세 속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연구원이 문을 연지, 올해로 어언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화자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도 크게 발전했고, 무엇보다도 연구원 발전의 원동력이자 연구원의 존재이유인 남북관계 발전에서 큰 도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현재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급 회담이 정례화되고 있고 각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이처럼 남북이 통일로 다가가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이 걸음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쪽은, 교류·협력을 통한 우리의 영향을 경계하고 있는 북한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딛는 발걸음의 한 쪽 주체인 북한의 실태에 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는, 적절한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일 뿐 아니라 북한연구의 학문적 당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김정일 정권이 성립된지 10년이 흐른 지금, 과연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북한의 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대립되는 견해가 있음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변화의 개념에 관한 이해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변화를 긍정하는 쪽은 작은 시내가 큰 바다를 이루듯이 조그만 변화도 그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변화를 부정하는 쪽은 본질적 내용의 변화가 중요한데 북한은 아직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김일성 사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북한 변화를 분야별로 짚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의 향후 진로를 진단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문제에 대한 이같은 국내외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연구원은 개원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한의 분야별 변화에 관해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 정부의 정책 입안에는 물론이고

북한연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회의의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최 송 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바쁘신 가운데 뜻 깊은 통일연구원 개원 13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통일연구원을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셨으며, 또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도 막중한 국정 대사에 임하고 계시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념행사를 함께 축하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훌륭한 발제와 사회, 토론을 준비해주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박영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1년 4월 9일에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통일과업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해온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통일연구원은 민족통일에 관한 제반문제점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행하였으며 이에 바탕해서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러한 통일연구원의 연구업적을 통해 우리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연구원이 이러한 국가적 기여를 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전임 연구원장님들을 위시한 우리나라의 많은 통일관련 전문가들의 또한 민간차원에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통일연구원의 발전을 기도하고 계시는 박영규 원장님, 또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안보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디만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간단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남북간의 협력관계의 틀이 견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틀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진전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제반 요건을 조성해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달성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과 냉엄한 국제정치의 논리를 냉철하게 진단·분석하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족의 숙원과제인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통일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일연구원은 신입 박영규 원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과 목표 아래 정책각오를 심화시키고 통일정책을 국민여론과 접목시키는 역할에 매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추진에 기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통일과 북한관련 연구에 세계적인 hub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일 정권 10년의 총체적인 분석과 향후의 전망을 논의하는 오늘의 학술회의는 통일연구원의 이와 같은 진일보한 위상의 정립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학술회의는 인문

사회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의 실현을 위한 연구분석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시 한번 통일연구원의 개원 13주년을 축하드리고, 오늘 의 논의를 통하여 향후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의 관점이 구축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학술회의 가 매우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학술회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합니다.

격 려 사

정 세 현
(통일부 장관)

존경하는 박영규 통일연구원장님,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먼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통일연구원 개원 13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3년 전 통일연구원 초창기에 정열을 쏟았던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 및 북한 연구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 개원기념 학술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북한 정권이 걸어온 길을 분야별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평화변영시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일성 주석 사후 10년의 전반부 5년동안이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한 내적 통제와 안정을 모색한 시기였다면, 후반부 5년은 변화와 대외 관계개선을 추구한 시기로 규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89년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북한 대외무역의 60-70%를 차지하던 사회주의 시장을 붕괴시킴으로써 '9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경제난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플루토늄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단절, 김일성 주석의 사망, '95년부터 3-4년간 지속된 자연재해 등은 북한의 상황

을 몹시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단속과 폐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환경에 봉착한 북한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체제와 관련된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98년 이후부터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햇볕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이 추진된 지난 6년 동안 우리의 주도하에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져온 성과가 오늘날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나 내적 조치의 내용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개혁 개방 초기 또는 '90년대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북한이 실리, 실적, 실력이라는 이른바 『3實主義』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 외부 개방을 위한 실험과 탐구는 그냥 흘러버릴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추세와 방향성을 가진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해야만 할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의 변화는 먼저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불러오고 중국에는 정치·군사분야에서의 변화까지 불러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경제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의 요구에 결코 느긋할 수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의 걸림돌들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북한은 핵문제 등 WMD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숟가락으로 먹든 저가락으로 먹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든지 간에 입에 들어가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던 김일성 주석의 소위 『우수좌수론』은 앞으로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좌수론』이 이미 1955년에 제기된 것인데 비해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은 사실 1962년에야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북한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그리고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면서 북한에게는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전문가적 분석과 논의를 통

해, 보다 수준 높은 북한 인식의 틀을 정립하고, 또 적실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연구원의 개원 13주년과 이번 학술회의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례 -

♣ 제1회의

- 「김정일 정권 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전망」…………정영태
- 「김정일 정권 하 북한외교」…………허문영
-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최진욱
- 제1회의 토론

♣ 제2회의

-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박형중
-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사회변화」…………서재진
-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문화예술」…………임순희
- 제2회의 토론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전망」

정 영 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정권하 정치군사체제 특성과 변화전망

I. 문제제기

2004년 북한의 신년사에 해당하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선군’이다. 무려 43차례나 되풀이 강조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선군정치’를 의미한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군을 최우선시하며 군을 앞세워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는 명목상에 있어서나 실질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군의 최고 가치는 곧 국가의 최고 가치며, 군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선군정치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선군혁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선군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일성 시대에도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군사를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군정치’라 정의하면서 군이 중심이 된 정치체제가 공식적으로 표방된 적은 없었다. 다만 정권구축 초기에 ‘항일빨치산’ 출신의 군부가 당·정·군 핵심요직을 차지해 온 적은 있지만 이것조차도 점차 완화되면서 군부는 군사고유의 영역에 머물도록 해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군을 핵으로 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를 공개적으로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김일성 시대와는 다소 다르다.

본 연구는 김정일이 구축하고 있는 선군정치 체제가 갖고 있는 권력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선군정치 체제의 배경적 분석, 권력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차례로 분석 평가하게 될 것이다.

II. 북한의 선군정치의 배경

1. 선군정치의 개념: ‘혁명 군사정권’ 정치로의 변화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라고 하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김정일 동지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 북한은 “정치방식이란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체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정치방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위력과 정치제도의 공고성에서 근본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사에서 미해결로 남아있던 이 중대한 문제가 우리 당의 선군정치 방식에 의해서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선군정치 방식은 바로 군사선행의

1)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월 호, pp. 17-18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 높이는 정치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시대의 가장 위력하고 이상적인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다”²⁾고 밝혔다.

이러한 정의를 요약해 볼 때, 군의 중시와 강화, 그리고 혁명의 기둥으로서의 군대역할 등이 선군정치의 핵심이다. 군 중시와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건국과 망국의 악순환으로 엮어진 수천 년 인류국가 흥망사를 꿰뚫어 보시고 건국정치의 법칙처럼 되어오던 선경후군(先經後軍) 정치의 역사적 교훈과 군력의 의의를 부차시하여 사회주의를 잃은 지난 세기 90년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피의 교훈을 총결산하신 데 기초하시어” 선군정치 방식을 내놓았다고 주장한 것은 경제에 우선하여 군사를 앞세워야 한다는 ‘선군후경(先軍後經)’ 정치방식의 필요성³⁾을 제기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군을 무시하고 경제를 우선시 할 경우 당장의 경제적 결핍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체제보위를 담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선군후경 정치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경제난에 대한 지도부, 특히 김정일의 책임회피 성격이 더 강하다.

반면 혁명의 기둥으로서의 군대역할을 의미하는 선군정치의 필

2) 『중방』 1999. 7. 22.

3)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관계,” 『국가전략』 7권 3호 2001년 가을(통권 제 17호) 참조

요성이 체제보위 차원에서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군대를 김일성의 군대에서 김정일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 이를 그의 정권 공고화에 적극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기관지 노동신문(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 사설)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김정일 동지의 군대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⁴⁾고 강조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북한은 점차적으로 선군혁명 사상의 성격을 혁명이론으로 구체화하면서 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계급 대신 군대를 내세움으로써 군대의 역할을 제고해 왔다. 이는 북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군대의 주도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은 물론 인텔리 계층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칭해 오기는 하였으나 군대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 계급관에 기초한 혁명관을 고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2003년 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느 때, 어디에서나 노동계급의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고 보는 것은 선행 이론에 대한 교조주의적 관점이며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우리 당은 어떤 기성이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되지 않고 선행이론에 대한 온갖 교조주의적 태도와 수정주의적 왜곡을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이며 온 사회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함으로써 ‘선군후로(先軍後勞)’정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후로’의

4) 『노동신문』, 2002. 4. 25.

정치는 군대가 혁명주체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정권을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는 ‘혁명 군사정권’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2. 선군정치의 대내외적 배경

가. 대내적 배경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심화되면서 당의 가치와 권위체제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당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으로 인하여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없게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정치적 불신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청년들은 조선노동당 입당을 기피하는가 하면 ‘당 일꾼’ 보다는 대외 상업, 행정 등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부문에서 일하려는 실리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할 뿐 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물질주의까지 팽배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의 정치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통제해 나가는 통치기제가 점차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군대를 우선하는 정책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난은 하루아침에 치유

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일단 정부일꾼'들에게 돌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신 김정일은 체제보루인 군대를 우선 챙기는 데 앞장서고 이에 대한 성과적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정권 이양기에 군대의 지위와 역할이 제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군부의 독자적인 일탈현상을 막기 위하여 군부를 포용하는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 역시 일찍부터 권력을 구축해 왔다고 하나 군사 지도권에 있어서는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단계적으로 최고 군사권을 이양 받기는 했지만 그의 군사 지도권에 대한 정통성은 아버지 김일성과는 달리 상당히 결핍되었던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군사를 우선하는 정책을 내세워 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를 통해서 군의 일심단결을 도출해내어 안정적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의 정론⁵⁾에서 “총대를 잡은 무적 강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온 사회가 총폭탄 결사 수호정신의 일치를 이룬 조선의 일심통일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단결은 선군을 신념화하는 단결이고 우리 단결의 기둥은 총대를 잡은 군대이며 우리 단결의 기본정신, 기본구호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이다”고 주장한 것은 “혁명의 수뇌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인 만큼 김정일

5) 『로동신문』, 2004. 1. 22.

용위를 위한 군사적 노력이 곧 선군정치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나. 대외적 배경: 대외적 ‘피포위 의식’

미국 소재 친북 학자로 알려져 있는 한호석(미주평화통일 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제국주의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 포위의식에 근거”한 정세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⁶⁾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의 정세관은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동구사회주의의 붕괴, 독일의 흡수통합, 미국의 걸프전 압승, ‘핵 문제’로 인한 전면적인 미국의 압박, 그리고 경제난과 같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북한이 ‘피 포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이 반혁명적 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에 공공연히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와 그 추종분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⁷⁾

6) 한호석 “최근 북(조선)의 정세관과 정세 대응에 관한 담론 분석-1997년 상반기”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인터넷』 <http://www.onekorea.org/research/t18.html>, pp. 2-4.

7) 『중방』, 1999. 8. 14.

북한은 폐쇄적 사회다. 이는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현대 개방사회와는 달리 주민이동이나 통신수단이 극히 결핍된 상황에서 주민들간의 교류나 의사전달 체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북한주민들은 당국이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교육하는 것에 무비판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당국이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의 정세관은 정권차원을 넘어서 일반 주민들의 의식 차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깊숙이 침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은 “정치 군사적 압력과 끈질긴 경제 봉쇄, 비렬한 사상문화책동”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제국주의’의 공격과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우려는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정세를 인식하는 실질적인 의미체계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은 그대로 좌절 또는 후퇴로 귀결되기보다는 ‘제국주의’의 포위공세에 반격을 가하고, 그 반격을 통해 포위공세를 뚫고 나가기 위한 전투적인 역공 전략적 대응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한호석의 주장⁸⁾은 일면 타당하다.

북한의 역공 전략적 대응은 김정일의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 방식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군대를 권력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황장엽은 김정일이 언제나 군대놀이를 했고, 군의 병기라든가 기술에 관하여 늘 관심을 보였고, 군대를 장악하려는 의욕도 강했으며 무엇 이든 설득하기보다는 폭력으로 단번에 해결하려 해 왔기 때문에 군

8) 한호석, 앞의 글, pp. 2-4

대에 의거해서 군대를 존중하고, 그것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 해왔다고 증언하였다.⁹⁾ 김정일 스스로도 그의 힘이 ‘군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솔직히 밝힌 일이 있다. 김정일은 평양을 방문한 남한 언론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내 힘은 군력에서 나옵니다. 내 힘의 원천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두가 일심단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군력입니다. 외국과 잘 되려고 해도 군력이 있어야 하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내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야 합니다.”¹⁰⁾고 피력함으로써 군사력의 중요성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즉 김정일은 대내통치를 위해서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군사력이 결정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와 반제 자주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투쟁의 시대”이며 “지난 기간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의연히 간고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은 겹싸인 난관을 대담한 공격전으로 뚫고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여 왔다”¹¹⁾고 함으로써 대내외 정세에 대한 북한의 수세적 대응이 아닌 공격적 대응을 밝혔는데, 이러한 공격적 대응은 군사적 수단을 중시하는 <선군정치> 방식의 채택으로 이행되고 있다.

북한은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자면 마땅히 군사가 중시되어야”한다고 전제하면서 “선군정치

9)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322.

10) 『조선일보』, 2000. 8. 14

11) 『중방』 1999. 7. 23.

방식은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방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 북한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위력한 정치”인바,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정치, 일석다조의 현명한 정치”¹³⁾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선군정치의 기능: 군부의 충성유도를 통한 군부통제

김일성 사후 보도된 김정일의 공식활동 중에서 군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6년 한해만 보더라도 김정일의 총 공식행사 참석 43회(1996.11. 24. 현재) 중에서 군 관련 행사 참석이 14회, 군부대 현지지도가 17회나 된다. 2003년도의 경우 군 관련 활동은 63회로서 총 공개 활동회수 92회 중 68%를 차지하였다. 북한당국도 “경애하는 장군께서는 초인간적인 의지와 정력으로 주체 83(1994)년 8월부터 올해(1999년) 5월까지 만도 무려 12만 350여 리의 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오셨다”¹⁴⁾고 하면서, “탁월한 선군혁명 영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역세계 키워주시고 혁명적 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로 만남을 뚫고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

12) 「중방」 1999. 7. 22.

13) 「중방」 1999. 7. 13.

14) 「중방」 1999. 7. 22.

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희세의 걸출한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거장”¹⁵⁾이라고 함으로써 군사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후 확인된 여러 차례 대규모 승진인사 중 대부분이 군 관련 인사였다. 현재 북한군의 장성규모가 1400여명(한국 4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군에 대한 비정상적 우대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김정일은 북한군부로부터의 충성유도 노력으로 권력서열 상승조치를 단행하여 호위사령관 이을설, 총정치국장 조명록, 총참모장 김영춘, 사회안전상 백학림 등이 1994년 7월 김일성 장의위원 명부에서 각각 77위, 89위, 88위, 53위에서, 1996년 7월 김일성 사망 2주기 추도회에서 각각 11위, 12위, 13위, 30위로 꺾충 뛰어 올랐다. 최광 장의위원 명단에서는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이 한자리수인 6위, 7위, 8위로, 백학림은 24위로 진입함으로써 권력의 최전면에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동당 창건 55돌 기념행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주석단 10위 권내에 국방위원은 서열 1위인 김정일을 포함해 6명이나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열 3위로 자리 메김 되고 있는 조명록(미국 방문)을 포함하게 될 경우 주석단 대부분이 국방위 인사로 채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상장, 대장급 주요 군부인사들 역시 각종 행사 참석명단에서 비교적 상위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은 북한 인민군에게 ‘화려한 넥타이나 매고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정치 신사가 아니라 혁명의 장군, 인민의 장군’

15) 「중방」, 1999. 2. 05.

인 ‘위대하고 걸출한 장군’으로 비쳐지도록 하여 군부의 충성을 유도해 오고 있다¹⁶⁾ 김일성 3년 상을 치를 때까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어떠한 공식추대행사를 치르지 않았지만 최고 사령관의 직분으로 군부대 현지도도를 포함한 군대관련 공식행사를 중심으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김정일에 대해서 최고 사령관에서 점차적으로 ‘장군님’으로 호칭하는 빈도를 높여 나갔다. 최고 사령관은 군 통수권 상의 최고 직책을 의미하는 기능적 의미만을 담고 있으나 북한에서 ‘장군’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군대 계급적 의미에 더하여 김일성과 같은 혁명적 정통성을 지닌 ‘존경받는 지도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일성 생존 시에는 ‘장군님’이라는 호칭이 김일성 자신의 독점물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김정일에 대한 ‘장군님’ 호칭은 김일성의 군사 카리스마가 전이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장군식 정치 제일론’을 전면에 내걸고 군부의 충성을 유도해 오고 있다.

Ⅲ. 선군정치 체제의 제도적 특성

1. 권력구조적 특성

북한은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99.1.1.)」¹⁷⁾에서 “지난 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가 굳건해지고 우리식의 정치체제가

16) 「평양방송」, 1999. 5. 13.

17)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중.평방」, 1999. 1. 1.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빛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혁명적인 국가기구체제가 정비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의 국가정치체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계승 성 있는 정치체제이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체제”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식의 정치체제’, ‘혁명적인 국가기구 체제’, ‘강위력한 정치체제’가 바로 군사중시의 국가기구체제이다. 실제로 북한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군사중시 국가체제를 일컬어 “무적의 군사력에 의거해서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하고 경제발전과 나라의 부흥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식의 정치체제”¹⁸⁾라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중시 정치체제는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통솔 지휘할 수 있게”¹⁹⁾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크게 강화시킨 국방위원장체제로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권력구조의 핵, 국방위원회 위원장

1972년 북한헌법에서는 국가주석 중심의 유일지도체계를 법제화하였으나 1992년 수정된 북한헌법은 주석의 군사부문과 관련한 권한을 배제하여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정하였다. ‘92년 북한헌법은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것은 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즉 동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회는 ”

18) 「중방」, 1999. 7. 13.

19) 「중방」, 1999. 7.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헌법 제3절 제111조)이 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헌법 제3절 제113조)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그리고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헌법 제3절 제114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최고 임무와 권한을 지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직은 김일성에서 출발하여 김정일에게 이양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8년 9월 5일 수정 보충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기존의 최고군사지도기관에 더하여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이라는 사실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위원장에 재추대 되었다.

이상에서 북한 헌법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 유일지도체계에서 서서히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단계적인 권력분산 노력이 있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김일성 주석 유일지배체계에서 국방위원회 신설로 군사 관련 최고 지도권을 김정일에게 우선적으로 이양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 자신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 되어 이를 중심으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도록 해 놓았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북한 권력의 핵심은 역시 ‘군력’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그의 권력 공고화 초기에는 ‘군력’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유지할 필요성에 직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양분되는 형식적인 역할분담 권력구조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능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헌법 기본내용 학습 관련 간부용 ‘학습제강’²⁰⁾은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제고된 지위와 권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가기구체계상 헌법규정순서에서 국방위원회가 종전의 네 번째 순위에서 두 번째 순위로 승격시켜 규정하고 있다. 순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국방위원회의 지위가 실제로 상승된 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98년 헌법에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이라고 그 지위가 규정된 것은 우선 권력의 관할범위에서 볼 때 국방위원회가 일체에 대한 지휘통솔권 뿐만 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 전반에 조직지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권력의 내용 면에서 볼 때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과 행정권을 모두 다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의 상설적인 최고 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실제상 북한정권의 중추적 기관으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이러한 법적 지위의 중요성은 국가기구 체계가 국방기구를 기둥으로 하는 군중시의 기구체제로 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이를 두고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중시, 선군 령도 사상이 구현된 독창적인 우리식의 국가기구 체계”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헌법에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규정하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내용에 대하여」(간부용 학습제강),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 87, 1998) pp. 22-24

고 있는 것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과 관련하여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많다. 김영남이 김정일을 재 추대(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회의)하면서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²¹⁾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먼저 국방문제를 “단순한 군사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 외교, 사회생활 등 민족의 생활영역 전반에 비끼게 되는 거대한 창조사업으로 민족번영과 사회진보를 이룩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지향하는 국사 중의 최대국사”²²⁾로 인식하고, 이러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국방위원장의 지위는 당연히 “그 어떤 국가수반 직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혁명의 최고 중책”²³⁾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방위원회는 ‘군력’ 중시의 기구체계 상 중추적인 상설국가 최고기구이며 이에 대한 최고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위원장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도

21) 「조선중앙통신」, 1998. 9. 5.; 「로동신문」 1998. 9. 6.

22) 「중방」, 1998. 11. 15.

23) 「중방」, 1998. 11. 15.

록 규정됨으로써 상임위원장의 국가 대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권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임에 의한 대표권”²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상임위원장은 결국 국가의 ‘얼굴마담’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형식상의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위탁하여 공개적인 대내외 국가행사권을 수행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체제 전부분의 실질적인 지도권을 행사하는 형식상 양분된 역할 분담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중앙당으로의 권력 집중 완화

북한권력의 원천이며 최고 중핵으로서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도적 핵심으로 기능해 온 것이 노동당이다. 북한의 1992년, 1998년 수정헌법 제 11조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철학사전』에도 노동당은 “정치조직 가운데서도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령도적 역량”²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이 수령 개인의 당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북한의 독재체계를 흔히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또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로 지칭해 왔다. ‘수령의 독재’는 ‘당의 독재’로 구현되고 있다. 수령이 국가사업 전반을 혼자서 장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내용에 대하여」(간부용 학습제강), p. 24

25)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46

약 지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 조직을 통해서 수령이 국가와 사회의 전반사업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당은 행정·입법·사법기관을 지도 통제하는 최고지도기관이다. 북한은 하급 당이 상급 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당 전체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고, 당중앙위원회는 수령에게 복종하는 철저한 중앙집권식 당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령은 당중앙위원회의 총비서로서 당 전체에 대한 지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당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집행기관이 아닌 순수 지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회의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국과 비서국이 그것이다. 정치국은 지도기관의 성격을 띤 중앙위원회 축소기관에 불과하지만 비서국은 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비서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당중앙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다. 비서국의 지도로 당중앙위원회 제 부서들은 당중앙위가 결정한 정책에 따라 전당을 움직여나간다.

이들 집행 부서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제기할 정책 안들을 작성하며 당중앙위는 이 정책 안들을 심의할 뿐이다. 또 당정책 안을 작성하여 최고지도자에게 건의하고 비준을 받는 것도 이들 각 부서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해 나가는 것은 비서국 성원들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중앙위원회에서는 총비서와 비서들이 중앙위의 사업을 지도하며,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책임비서와 비서들이 도당위원회 사업을 지도하고, 군당위원회에서는 군당책임비서와 비서들이 군당사업을 지도하게 된다.²⁶⁾ 이와 같이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 최고 형태의 정치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각 부서들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들을 비서국 산하에 설치해 놓았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노동당 중앙위 제 5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로 선출되고, 이듬해 2월 개최된 당 중앙위 제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당 중앙’으로 호칭되기 시작하였다.²⁷⁾ 이때부터 김정일은 당 내부 사업 지도서와 당 조직, 부서, 직능조직 등을 통해 당 사업체계를 대폭 수정해 당 조직을 짊 조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강화했으며, 특히 조직지도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 또 중앙과 지방에 대한 검열사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신이 간부사업을 직접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다.²⁸⁾

따라서 김정일은 그의 권력장악을 조직지도부를 통해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직지도부를 강화하고 여기에 권력을 집중시켜 이를 직접 관장해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황장엽은 “조직부가 사실상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중앙당 부서들의 서열은 조직부, 선전부, 국제부 순이었고 과학 교육부는 경제부들 보다 뒤였다. (...) 특히 조직부는 김정일의 직속 부서로서 다른 부서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하던 막강한 조직이다. (...)

26)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pp. 86-89

27)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1999) p. 76

28) 1974년 10월의 당 제 5기 9차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던 신경완의 증언, 정창현, 앞의 책, p. 143 재인용.

선전부도 김정일의 직속이라고 하지만 조직부보다는 신임을 덜 받았다. 각급 당조직들은 전부 조직부가 관리하고 각급 당위원회의 간부의 임명도 조직부가 관장하고 있었다.(…) 조직부와 선전부는 김정일에 직속되어 있어 비서나 부장이 없는 조직이었다.”²⁹⁾ 조직지도부는 본부당, 군사부분, 행정부분, 전당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각 부분은 제 1 부부장이 맡고 있으며, 이들 조직지도부의 4명의 제 1 부부장은 실제로 다른 부서의 부장 보다 더 강한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본부당은 김정일을 제외한 중앙당의 모든 간부들의 학습을 조직하고 당생활을 주관함으로써 중앙당 성원들의 당생활을 장악하고 있으며 김정일 직속조직으로 되어 있다. 조직지도부 군사부분은 인민무력부와 북한군 총정치국이 관장하는 군대내 당 조직선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여단장 이상의 군사간부들의 1개월 중앙당 강습을 조직하고 있다. 조직지도부의 행정부분은 김정일에게 독자적으로 제의서를 올릴 수 있는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으로 개칭), 검찰소, 재판소, 국가검열성 등의 주요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 조직지도부의 전당부분은 본부당과 군사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당의 조직생활을 관장하고 있다. 지방당이나 국가기구 내 당조직, 사회단체 내의 당조직 등은 모두 전당부분의 관리대상이다.³⁰⁾

이와 같이 김일성 생존 시 북한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김정일이 조직 비서 겸 부장으로 있었던 노동당

29) 황장엽, 앞의 책, pp. 190-191

30) 이종석, 백학순 공저,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서울: 세종연구소, 2000), pp. 25-26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는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당의 영도와 통제를 실현하는 데서 김정일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던 가장 핵심적인 부서였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조직지도부의 사명으로는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김정일의 유일사상체제 및 유일지도적 체제확립, 북한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 주민들의 당 생활 장악 및 통제, 당 간부대열과 정체 당대열의 정비, 확대, 질적 향상, 당, 군, 보안 등 체제수호 기구의 고위층 인사권 주관 등이 지적된다. 조직지도부는 조직 비서 겸 부장인 김정일의 지도 밑에 5명의 제 1부부장들과 10명 정도의 부부장들, 과장 및 부과장, 책임지도원, 부원들 등 약 3백 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합과, 당생활 지도과, 검열과, 간부과, 당원 등록과, 신소과, 통보과, 사법, 검찰, 주권기관 담당부서 등의 주요 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를 관장하면서 북한의 모든 권력이 이곳에 집중되도록 하여 스스로가 ‘당 중앙’으로서 김일성 다음의 제 2인자로 북한의 전권을 통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제 2인자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집중 구조를 용인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일은 아직까지 그의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후계자를 결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조직지도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그와 같은 제 2인자의 생성이 가능한 당 권력구조를 억제하여 그를 대체할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통제 차원에서도 김정일 권위체계에 도전할 수 있는 제 2인자 또는 집단생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온 것이 사실이

다. 귀순자 현성일의 증언³¹⁾에 따르면, 김정일은 북한 고위층이 측근과 비측근 사이뿐만 아니라 측근 상호간에도 엄격한 상호 감시와 통제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그의 측근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일과의 운명공동체 사상의 조성을 위한 것에 불과 할뿐이며 만일 김정일의 신임이 지나치게 큰 나머지 방자해지거나 측근인물 주위에 추종세력이 집결되어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김정일은 가장 경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은 한때 자기의 김일성 종합대학 동창생들을 대거 당 조직 지도부의 요직에 기용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창관계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세력이 될 소지가 있어 거의 전부 지방으로 추방되었거나 좌천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간부만 되면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고위층 간부들 사이에 동향, 동창 등 개인적 관계로 한자리에 모여 앉거나 단순히 우정을 나누거나 간단한 기념품을 주고 받아도 무조건 종파주의자, 가족주의자, 지방주의자 등의 정치적 오명을 쓰고 당의 유일적 지도체계수립에 대한 도전행위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반당적 행위로 낙인찍히게 되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측근 간부에게는 사적인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 처리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 또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는 한 가족 성원이나 친척이 절대로 함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율이 세워져 있다. 김정일이 간부들에 대한 이러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온 것은 그 자신에게 도전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 2의 개인세력 등장을

31)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제 1권 1호 (서울: 북한조사문제연구소, 1997) pp. 40-41 참조.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김정일은 국가·사회전체에 대한 중앙당의 획일적 통제 기능을 다소 약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군대에 대한 역할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재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의 역할과 자율성의 강화는 중앙당으로의 권력집중을 배제한 당·군 관계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Ⅳ. 북한의 주요 군사권력기관의 역할 확대 양상

1. 북한군대의 기본 지휘·통제체계

형식상 북한군 지휘·통제체계는 국방위원장(최고사령관)→ 인민무력부 → 총참모부·총정치국·보위사령부·후방총국 → 예하 부대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 구성상 인민무력부는 참모지휘부서, 당정치지도 부서, 정보 보위부서, 후방담당 부서로 분류된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와 예하 대대까지의 참모부를 참모지휘 부서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과 예하 대대까지의 정치부 당 정치지도부서로,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와 예하 대대까지의 보위부를 정보보위 부서로, 인민무력성 후방총국과 예하 대대까지의 후방부를 후방담당 부서로 각각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군사지휘체계 하에서는 인민무력부장이 국방위원장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부터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直屬機關으

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나 1992년 헌법의 수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 개편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군사 업무의 집행기구로서 국방위원회 산하기관이 되었다.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정무원에서 내각으로 개편하고 부를 성으로 바꾸면서 인민무력부 역시 인민무력성으로 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북한군의 '다원화 병영체제'에서 규모나 병역수로 보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지위와 역할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담당했었다. 인민무력부의 군사행정책임자는 인민무력부장이며 그 밑에 5명 정도의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군사편제를 두었다. 1994년 김일성과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의 사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민무력부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김일성, 제1 부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오진우), 당중앙군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당시 상무위원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였음),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인민무력부가 총정치국장의 직무와 분리되었으며 그 지위도 현저히 낮아졌다. 인민무력부장은 총참모부도 직접 지휘하지 않고 분리되어 후방사업만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인민무력부 총참모부는 인민무력부 뿐만 아니라 북한군 전체 무력에 대한 '전시 작전군'을 행사하고 있는 핵심 최고 참모부로서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기능과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인민무력부 총참부 총참모장은 북한군 전체 무력의 총참모장으로 되며, 역대 북한에서 주요 인물로 내정되어 왔다. 제 1부 총참모장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제 1국인 작전국이 겸임하며 1995년 김정일이 "인민

무력부 총참모부 작전국장은 나의 작전국장”이라고 할만큼 중요직책이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는 크게 총참모부 참모부서와 총참모부 직속부대로 구분된다. 총참모부 참모부서는 약 20개 이상의 ‘국’ 단위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국’은 부, 처, 과, 실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총참모부 직속부대는 북한인민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거나 최고사령부의 작전임무 수행을 직접 보좌하는 각각 다른 병종의 군부대들로 혼성 군단급 병역에 속한다.

총참모부 직속부대는 군단급 영역에 속하지만 임무수행의 성격과 부대구성의 특성으로 군단 지휘부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군단급 정치부와 보위부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참모부 직속부대들에 대한 군사작전 및 군사행정 업무는 작전국이 직접 지휘통제하며 군사기술적 지도는 총참모부 각 국들이 진행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군의 실질적인 지휘체계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가 인민무력부를 상부기관으로 하는 수직적 계선조직이라기 보다 수평적으로 상호 견제하면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에게 직보하는 독립적인 층성조직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즉 김정일은 군사적으로 강제로 장악하는 선(총참모부서)과 당조직을 통해서 장악하는 선(총정치국), 그리고 비밀경찰을 통해 장악하는 선(보위사령부)을 수평적으로 분리하여 북한군대를 지휘·통제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대 당 조직과 정보 보위조직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사회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 군대 당 및 정보 보위조직의 특성

가. 군대내 당 정치조직: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

북한군의 최고 당 지도기관은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로서 군대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고 노동당의 영도를 실현한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며 필요시 소집되며, 인민무력성, 호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 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으로 개칭), 국가안전보위부의 당 및 군사책임자 등의 기본임원들로 구성된다. 당위원회의 회의를 집행하는 것은 인민무력성 총정치국이며, 노동당 총비서가 회의 결정권을 갖는다.

북한은 인민군내 당 정치조직을 두어 ‘인민군당위원회’의 결정지시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민무력성 총정치국과 예하 군단 및 군중사령부 정치부, 호위사령부 정치부, 평양방어사령부 정치부, 인민보안성 정치부,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인민무력성 총정치국의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은 군 당조직의 최상위에 있는 집행기관으로서 당결정심의기구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직접적 운영기관으로 된다. 그 동안 총정치국은 중앙당조직지도1부 제 13과(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지도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³²⁾ 따라서 군총정치국은 직제상 인민무력부(성) 산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산하의 군내 당 정치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군 총정치국 밑에는 군중사령부, 집단

32) 북한이탈주민 김정민씨의 증언

군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정치부가 있고, 하부 말단 전투단위인 중대에는 당 세포비서(중대 정치지도원)로 구성되는 중대 당 세포비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인민군대 내 모든 정치부들에는 노동당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청년사업부, 간부부, 당원 등록부, 근로 단체부, 3대 혁명소조 지도부(1933년경 해체), 3방송 및 문화기재 관리부 등 당 조직 전문부서들이 있다. 그리고 연대급 이상 각 부대 당 정치 책임자는 정치위원이며 대대와 중대는 정치 지도원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군대내 노동당 정치조직과 당정치 군관들을 통하여 군대를 철저히 장악·통제하며 노동당의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군대 안의 당정치조직을 통하여 전체 장병들에게 정신사상교육을 강화하여 사상적 통제를 실현하고 있다. 인민무력성의 총정치국과 각 상급정치부의 선전선동부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군인사상교육 방향과 지시를 근거로 분기별, 월별, 주별로 군인사상교양계획을 작성하여 하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당 정치조직들은 간부 임명권과 인사 이동권을 장악하고 수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진급 및 인사이동을 진행함으로써 군을 통제하고자 한다.

군사지휘관들은 군사사업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처리할 권한만을 가지게 되나 당 정치조직들은 사람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정치위원은 해당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입니다. 군사지휘관이 부대를 군사적으로 책임진다면 정치위원은 부대를 정치적으로, 당적으로 책임집니다. 정치위원이 군사지휘관 보다 군사칭

호는 좀 낮을 수 있으나 사업을 책임지는 데서는 군사지휘관과 같습니다³³⁾라고 하여 정치위원과 군사지휘관의 동등한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부문에서 당의 우위가 인정되는 북한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부대의 당의 대표인 정치위원의 권한은 군사지휘관의 그것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군대 당조직의 사상교육 활동을 더욱 강조하여 군 당조직 기능의 중요성을 부각해 오고 있다. 권력서열 측면에서도 현재 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 중앙당 비서들 보다 김정일 다음으로 권력실세로 부상해오고 있는 것도 군대 당조직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전협정 조인 50주년을 맞아 2003년 7월 26일 단행한 군 장성급 인사에서도 ‘정치일꾼’ 3인이 포함되었다. 상장에 오른 이태원과 심상대는 북한군 내에서 정치위원이며, 지영춘은 군의 정치사업을 총괄하는 총정치국 부국장이다.³⁴⁾

나. 군 정보보위 조직: 보위사령부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군대 안에 조직되어 있는 독립적인 방첩기관으로서 사령관은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장엽 씨는 “보위사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33) 조선로동당 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63

34) 「조선일보」, 2003. 7. 27.

원래는 비밀경찰이었으나 지금은 드러 내놓고 군의 중대에까지 보위지도원이라는 것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두 독립해서 김정일에게 직속되어 있습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들 보위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군대 안의 반당, 반혁명, 반국가 분자들을 색출 검거
- ②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방첩임무를 수행
- ③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시 경호임무를 담당
- ④ 군대안의 주민등록사업 담당
- ⑤ 국경, 해안에 대한 경계근무 담당
- ⑥ 일반 범죄자 색출 처리³⁵⁾

각 군 단위의 예하 군단 및 병종사령부, 사단, 여단, 연대에는 각급 부대 보위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대와 중대는 보위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말단의 소대, 분대에는 0번으로 불리는 2명의 정보원들이 있어서 이들은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보위군관들에게 일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 인민군내 보위군관 교육 및 양성은 인민무력부 보위 사령부 인민군보위대학 제 885군부대에서 이루어지며 호위 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도 보위사령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놓았다. 북한은 이처럼 인민군 안의 세밀한 정보보위기구체계를 통하여 장령에서 신입병사에 이르기까지 미행, 도청, 감시, 동향분석을 진행하며 사소한 문제도 미리 비밀리에 탐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위부는 일종의 비밀경찰 조직으로서 정치일군, 당일군

35) 최주환, “북한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계 및 활동”, 「북한조사연구」제 1권 1호 1997, pp. 47-48.

을 제외한 군대 행정기관 일군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일군, 당일군들에 대한 비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행정기관에는 보위부 또는 담당 보위지도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정치기관에는 보위부나 보위지도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당적 통제에 있어서는 보위부도 예외가 아니다. 보위사령부 내에 당위원회를 두고 있어 이를 통해 보위부에 대한 당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보위사령부의 당위원회는 총참모부 내의 정치기관의 지시를 받는다. 보위부의 당 조직은 보위부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총참모부 정치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³⁶⁾

3. 총정치국과 보위사령부의 역할 확대

가. 총정치국의 역할 확대: 군 당기구 우위의 당적 영도 구축

군 총정치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지도를 받는 인민무력부 내 노동당 조직의 정치기구로서 인민무력부에 대하여 당적 영도를 실현하며 예하 부대들을 조직·사상적으로 지도·통제하는 군대의 당권력 정치기구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총정치국은 인민군대 내의 하부말단 전투 단위인 중대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당지도기관과 정연한 당정치조직을 가지고 군인들을 조직 및 사상적으로 군대를 지도·통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군사행정, 군사기술, 간부임명 및 인사이동 등 거의 모든 문제에 대

36) 위의 글, p. 57.

한 결정권을 가지고 군대 집단 자체를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정치국은 연대급 이상 군부대들에 정치위원을 파견하여 이들이 노동당의 '전권위원'으로 부대의 모든 문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통제하고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총정치국은 비록 인민무력부의 조직 구조상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후방총국과 수평관계에 있지만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상위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제 2 노동당'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의 군사중시 국가 체계상 총정치국의 역할은 '제 2 노동당'이 아니라 '제 1 노동당'으로 지칭될 수 있을 정도로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생존 시 북한정치체제에서 권력의 3대지주로 당·정·군을 꼽는다. 그런데 북한의 당·정·군은 수령 1인의 영도에 따라왔으며 당·정·군의 최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온 독특한 독재체제를 유지해왔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 1인이 노동당에 의한 1당 독재를 추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당·정·군의 관계는 당을 우위로 하는 획일적 유일지배체제이다. 당 우위의 획일적 지배체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의 당·군 관계와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는 군 중시 체제를 대대적으로 앞세우면서 인민군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들어 일부 분석가들은 당 우위의 당·군 관계에서 군 우위의 당·군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대조직에서 군대 당 조

직 우위의 당·군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군대 당 조직의 사상교육활동을 더욱 강조하여 군 당 조직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권력서열 측면에서 현재 군 총정치국 국장인 조명록이 중앙당 비서들 보다 김정일 다음으로 권력실세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군대 당 조직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군대조직에 대한 중앙당의 획일적 통제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당 우위의 당·군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현재 군대 당 조직의 최고기관인 총정치국은 획일적으로 중앙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권력이 중앙당으로 집중될 경우 중앙당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만한 대안세력이 없다. 북한에서 군대를 정치적으로 지도·통제해온 것은 군대의 군총정치국을 포함한 군대 당조직이었다. 군총정치국은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직지도부 부장이었던 김정일이 당 조직을 통해서 군대를 정치적으로 직접 지도·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 자신의 유일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에로의 이러한 권력집중은 또 다른 제 2의 권력자의 생성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인 조치로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대권력을 중앙당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분리시켜 군대권력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군대권력과 당중앙의 권력을 수평적으로 위치시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은 당중앙위원회 산하 기구, 특히 조직지도부의 직접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기보다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김정일

이 군을 직접적으로 지도·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사정책을 비롯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중앙당 정치국이나 비서국의 역할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기존 구성원들의 사망으로 결원이 되어도 이를 채우지 않은 결과 현재는 김정일 1인 위원회라 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정치국도 김정일 사망 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빈번하게 개최되었으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소집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치국 위원, 비서, 관계기관 간부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도 김정일 사망 전에는 빈번하게 개최되었으나 지금은 개최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도 98년 헌법 개정으로 크게 격상된 국방위원회에 흡수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³⁷⁾ 그나마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비서국 산하의 조직 지도부, 간부부, 군사부 등이 제도적 메카니즘을 통해 인민군내 정치조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민군내 정치조직은 군 전반의 정치사업을 관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과거처럼 중앙당의 결정이나 지침을 직접적으로 이행한다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명령과 지시를 직접 이행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서가 아니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

37) 이종석, 앞의책, pp. 21-22

로서 군을 직접 지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앙당 조직지도 부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시사한다.

오히려 정치군관의 위상과 역할이 군대 밖 사회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김일성은 당 간부를 정치군관으로 등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김정일은 당 간부를 정치군관으로 등용하는 일은 갈수록 적어지고 정치군관을 군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등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실제 김정일이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여 군권을 장악한 이후인 1992년 항공사령부 정치위원이었던 원응희를 보위사령관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단 보위부장 80% 정도를 정치군관 출신으로 임명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⁸⁾

군대의 사회적 역할 또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997년 4월경부터는 협동농장, 철도, 각 공장기업소가 군부대에 위탁 경영되는 현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인근지역 중대 이상의 부대가 공장기업소를 1개씩 맡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중좌나 상좌급 군관들은 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 상주하면서 농장관리에 관여한다. 각 작업반에는 대위급 군관 1명이 배속되어 농장원 개개인의 출퇴근 확인, 파종, 김매기, 퇴비 등 농장내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간섭하고 관장하고 있다. 철도 운영의 경우, 각 지역마다 5-10명의 군인(소좌나 중좌급 군관 1-2명, 그 외 하전사)들이 주둔하면서, 매표, 승하차 질서, 화물적재 등 철도업무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있다.³⁹⁾

38) 김창근, “북한 당장군 권위관계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9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79-183.

39)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와 총정치국을 포함한 ‘국방기구’를 중앙당 기구에 비해서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은 ‘국방기구’ 중에서 군대의 당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조직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당사업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사회주의 건설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조성되고”있으며 “지금 사회의 당일꾼들이 군대 정치 일꾼 보다 못하다”고 질타하면서 “군대의 당 사업방식”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 바 있다.⁴⁰⁾ 이는 김정일이 중앙당 ‘책임일꾼’들에게 ‘군대안의 당을 배우라’는 메시지로서 군대식의 당 사업 혹은 대중운동을 고무시키려 한 것이다. 동시에 김정일은 군대의 정치·사회적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나. 보위 사령부의 지위 제고와 역할 확대

북한군은 당적 통제 외에도 정보 보위조직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북한군 정보보위 조직인 인민군 보위부들은 일종의 군대 비밀경찰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군을 이중으로 단속·통제해 오고 있다. 북한군 보위기관들로서는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 보위국, 평양방어사령부 보위부가 지적된다.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는 1980년대 말까지 “인민무력부 보위국”으로 존재해 오다가 1992년 보위사령부로 승격하였다.

pp. 33-34.

40)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조선일보」, 1997. 4. pp. 306-317.

인민무력부 보위국이 보위사령부로 개편되기 이전에는 각 군부대(군단 및 군종 사령부 보위부, 사단, 여단, 연대, 대대 보위부 포함) 보위부들이 해당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해당부대 당위원회의 당적지도와 통제를 받아 왔다고 한다. 반면 보위사령부로 개편되고 난 후에는 소속 군부대에 관계없이 오직 보위 사령부 실무행정 부서들과 보위 사령부 당위원회의 당적 지도를 직접 받으며 모든 문제들을 보위 사령관을 경유하여 김정일에 보고하는 ‘일선 직보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보위 사령부는 정보 보위실무 부서, 사령부 당위원회, 사령부 후방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위부의 기구체계와 편제만 승격된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이 넓어지고 기능과 역할도 강화되었다. 보위사령부는 군대 내의 정치감찰과 경제감찰을 민간인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사대상의 직위와 직급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V. 결론

북한 당국은 ‘혁명 군사정권’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전방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혁명 군사정권’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보다 세련되게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신문⁴¹⁾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한다. “지난시기 노동계급을 내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정치의 어길 수 없는 공식처럼 인정됐으나 오

늘의 현실에 맞을 수 없고 혁명의 주력군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가 횡행하는 오늘, 혁명군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노동계급도, 다른 어느 집단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늘시대에는 마땅히 마치고 낮위에 총대를 세우고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혁명군대를 강화하는 힘을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선군정치 방식 하의 ‘혁명 군사정권’의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혁명 군사정권’이 김정일 권력승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과도기조치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선군정치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공공매체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⁴²⁾는 “오늘의 선군시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혁명역량 편성에서도 기성관례를 깨뜨리고 새롭게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선군후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선군정치 추구가 과도기적인 것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전략적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이 김일성 유일체제를 지탱해 온 것⁴³⁾과 같이 김정일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고 담보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을 대대적으로 전파·보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여성들에게 ‘군인가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선군정치 찬양가의 정책적 보급,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 부각, 선군정치 주제 시·가요 창작, 선군사상을 반영한 만

41) 『로동신문』 2003. 2. 2.

42)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 2000년 2호

43)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 비평사, 1995), p. 63.

화영화 보급, '선군청년전위 열성자대회' 개최 등의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통해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 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방송보도 등을 통해서 선군혁명사상의 성격을 혁명이론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즉 북한은 선군혁명사상을 주체혁명 위업을 위한 혁명이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군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혁명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선군정치는 김정일 정권 기간 동안 그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김정일 정권 북한외교」

허 문 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정권 하 북한외교

I. 문제 제기

2002년 10월에 다시 제기된 북핵문제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유관국가들은 2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제3차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또한 제 10~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는 아직 지속되고 있고, 심화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 강경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의도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도 다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앉을 것임과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개발을 지속할 것임도 천명한 바 있다.

과연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정녕 핵무기개발을 진행할 것인가? 이같이 분석·전망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주석 사망

이후 북한이 처한 상황과 그 외중에 선택해 온 정책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김정일정권 하 북한의외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성 사망이후 지난 10 여 년 동안 김정일 통치하에서 북한이 추진해 온 외교정책은 크게 볼 때, 김정일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후원 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출범(1948.9.9)한 북한은 냉전시대에 김일성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김일성 사망(1994.7.8) 이후에는 ‘유혼관철’ 명분하에 기존노선을 고수하였다. 1) 그리고 김일성 사후 4년만에 북한은 김정일국방위원장체제를 공식출범(1998.9.5)시키면서, 「강성대국(強盛大國)론」²⁾과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³⁾을 주창하고, 로켓발사를 강성대국의 ‘신호탄’으로 강조⁴⁾하는 등 군부중시·당중심의 통치체제 토대 위에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코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하

1) ‘절대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요구하는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임’ 강조. 김정일, “혁명적 신념과 양심은 혁명기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 2. 17.)”; “과거의 김일성 노선과 0.001mm의 정책차이도 없을 것이다”, 『평양방송』, 1997. 10. 4; 『로동신문』 정론, 1998. 8. 22.

2) 북한은 강성대국의 특징을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규정하며, 강성대국 건설방식으로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으로 제시한다. “정론”, 『로동신문』, 1998. 8. 22; 『조선중앙방송』, 1998. 8. 23;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3)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4) 『로동신문』 사설, 1998. 9. 8.

나는 김정일정권의 안정성 제고에 대한 북한외교의 기여 여부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여년의 기간을 유훈통치기, 국방위원장 1기, 국방위원장 2기로 구분한 후, 김정일정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이 같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특징화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다. 특히 2004년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핵무기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북한은 안보차원에서 개발을 감행하여 실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차원에서 미국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답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외교정책의 일반적 특징

1. 구성적 특징

가. 목표: 체제유지와 공산화 통일

냉전기 북한은 국가목적(National Goals)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소목적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최대목적으로서 한반도 공산화통일 및 전 세계 공산화이다. 이 같은 국가목적 하에서 북한은 정치적 정통성·경제적 번영·군사적 안보와 같은 보편적인 목표와 민족적 통일이라는 분단국가만의 특수한 목표를 포함, 4대 외교목표(Diplomatic Objectives)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김일성시대 북한은 공산화통일에 보다 비중을 두고, 한반도

대내·외 정세에 따라 외교목표를 신축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후 '90년 한·소 수교와 '91년 소련붕괴, '92년 한·중수교로 북방삼각관계가 동요하고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은 경제난과 체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유혼통치'(94.7), '붉은기 철학'(95.8), '고난의 행군과 3대진지 강화론'(96.1),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98.3), '강성대국'(98.8),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2001.1)을 선포하며, 공산화통일 보다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정일정권 수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외교 목표에 있어서도 김정일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은 정통성(Legitimacy)·유효성(효율성, Effectiveness)·통제성(강제성, Coerciveness)·연대성(Solidarity) 등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제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 정통성이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 또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대의명분적 요인이다. 유효성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물질보상적 요인으로서, 경제난(식량난·생필품난·외화난·에너지난)과 같이 당면과제를 얼마나 잘 풀어 가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통제성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순종을 유도하고, 반발을 억제하는 강제적 요인으로서, 얼마나 체제 및 주민들을 잘

5) 허문영, “북한의 생존전략과 진로: 부문별 정책방향과 체제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 제132호 (서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9 여름), pp.179-186. 북한 정치체제의 단기 안정성(Stability)은 정당성과 통제성이, 장기 지속성(Durability)은 유효성과 연대성을 포함한 4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악하고 있는가에 의해 판단될 수 있겠다. 연대성은 정권이 외부 동맹 및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지지 및 지원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사회주의진영· 자본주의진영· 빨럭불가담진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나. 전략: 균형·편승·돌파·버티기

북한이 대외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전략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으로서, 강대국 A의 압박에 대항하여 체제생존을 위해 다른 강대국 B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뤄 대응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 미국에 대항하는 정책이다. 둘째, 편승전략(Bandwagoning Strategy)으로서, 강대국 A의 압박에 직면하여 강대국 B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동맹을 맺어 힘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경우, 강대국 A에 정책적으로 동조하여 생존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유일 초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정책방향에 동조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셋째, 돌파전략(Breakthrough Strategy)으로서, 현재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선택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강압정책에 대항하여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협상과 난국 타개를 모색하는 정책이다.⁶⁾ 넷째, 버티기전략(Muddling-through

6) 북한이 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여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행위, 94년 5월 미국이 red line으로 설정한 원자로 연료봉의 일방인출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 행위, 그리고 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여 베를린

Strategy)으로서, 현재 직면한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정책이다. 강대국의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국가도 없을 때, 내부결속을 통해 그럭저럭 간신히 버티는 정책이다.

다. 수단: 핵무기개발과 협상

수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 혹은 지렛대’⁷⁾이다. 일반적으로 수단은 정치적 차원의 협상, 경제적 차원의 교류·협력, 군사적 차원의 무력행사 및 위협, 심리적 차원의 비난, 문화적 차원의 선전·선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들어와 많이 구사하는 수단들로서는 핵무기개발 카드와 협상카드를 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핵무기개발 카드

(가) 유형

핵무기(Nuclear Weapons)는 핵탄두, 운반장치, 기폭장치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이 같은 핵무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핵분열무기(Fission Weapons)이고, 다른 하나는 핵융합무기

합의를 이끌어 낸 행위가 대표적이다.

7)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p. 226.

(Fusion Weapons)이다. 전자는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 (Atomic Bomb)이고, 후자는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열핵폭탄: Hydrogen Bomb, Thermonuclear Bomb)이다. 원자폭탄은 수소폭탄에 비해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파괴력도 상대적으로 낮다.⁸⁾

원자폭탄에는 플루토늄 폭탄과 농축우라늄 폭탄이 있다. 플루토늄 탄은 농축우라늄 탄에 비해 제조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농축우라늄탄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싼 것으로 평가된다.

(나) 개발의도: 主 협상 모델 구사, 從 안보 모델 모색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는 크게 다섯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안보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핵무기 개발이 국가안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적 방위수단을 독자적으로 개발·보유하려는 욕망을 국가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본다. 특히 주변국들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모색한다고 본다.

둘째, 「국내정치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핵무기 개발이 외부 군사적 위협뿐 만 아니라 내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추진될 수 있

8) Joshua S. Golidstein, 김연각 외 역, 「국제관계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2002), pp. 305-307;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화생방미사일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서울: 국방부, 2001), pp. 78-79.

는 바, 국내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국가안보적 차원이 아닌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으며, 군대의 충성심을 유도할 수도 있다.

셋째, 『상징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한 국가의 근대성(Modernity)과 정체성(Identity)을 형성·반영하는 상징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기, 국적 항공기, 올림픽 팀 등과 같이 핵무기, 미사일 등은 한 국가가 정통성 있고, 현대적인 국가이기 위해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징물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역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강대국들로부터 이끌어 내고자 한다.

넷째, 『경제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핵무기 개발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기술적 후진성을 탈피하고, 무기수입에 대한 대체효과와 무기수출의 증대를 통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사일의 생산기술은 다방면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섯째, 『협상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핵무기 개발이 핵 확산을 반대하는 핵 강대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아내기 위하여 정치·경제·안보적 실익을 확보하려는 협상 수단인 것으로 본다. 물론 핵무기 개발 시도 국가는 단지 협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핵무기 보유를 위해 실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간주된다.⁹⁾

(다) 개발현황: 과거(플루토늄)·현재(재처리)·미래(계획)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는 과거·현재·미래의 핵문제로 구분해서 살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실태를 시점과 상관없이 논의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핵무기 문제는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 이전에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플루토늄 원자폭탄 1~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북한이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¹⁰⁾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
- 9) 「안보 모델」, 「국내정치 모델」, 「상징 모델」은 스콧 사강이 핵무기 확산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 모델」은 홍용표 박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 「협상 모델」은 필자가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분석하기 위해 상정해 본 것이다.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1997); 홍용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7-14. 재인용
- 10) 북한은 1989년 70일간의 흑연감속원자로 가동중지를 통해 핵폭탄 1-2개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David Albright, "How Much Plutonium Does North Korea Hav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september/october 1994; 2001년 12월 미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도 북한이 1-2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sue Brief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27, 2002), pp. 6-8; 2002년 10월 국회 정보위보고서에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핵사찰이전에 7-22kg을 추출,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1~3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조선일보」, 2002년 10월 27일; 2003년 8월 의회 제출보고서에서 미CIA는 북한이 핵실험 없는 고품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 히로시마형 핵폭탄 1~2발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The New York Times*, November 9, 2003. 윤덕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역할과 전

주장하는 핵무기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과거핵무기 개발의혹 해명은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협상을 통해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합의되어있다.

현재핵무기 문제는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2000년 4월 봉인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폐연료봉(Spent Fuel) 8,000여 개와 관련된 문제이다. 북한이 2003년에 들어와 처리·완료했다고 주장하는 플루토늄 폐연료봉이 이것이다.¹¹⁾ 만약 북한 주장대로 2003년 2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모두 재처리했다면, 핵폭탄 5개 정도의 플루토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5MW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2004년 9월부터 연간 핵폭탄 1개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²⁾ 그러나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을 감시하는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협상용 발언으로 평가절하하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위기이다.

망”, 2003년도 군비통제세미나 발표문 재인용.

11)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등 동결시설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정지 조치(2002.12.22).

- 5MW 원자로 장착 연료봉 1,000여개 이동(12.26)
- 50MW 및 200MW 원자로 건설 재개 표명(12.27)
- IAEA 사찰단 추방 및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준비결정 발표(12.27)
- NPT 탈퇴 발표(2003.1.10)

12) David Albright,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Plutonium and Nuclear Weapons Stocks”, *ISIS Issue Brief* (January 15, 2003), <<http://www.isisonline.org/publications> /dprk/currentandfuture weapons >; Daniel A Pinkston and Stephnie Lieggi,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Key Concern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17, 2003, <<http://cns.miis.deu/research/korea/keycon.htm>>.

미래핵무기 문제는 2002년 10월 캘리 방북시 제기된 농축우라늄 핵탄두 개발의혹문제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9년 미 에너지성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추진을 밝힌 바 있고,¹³⁾ 2002년 11월 의회보고서를 통해 미CIA는 북한이 2001년 대규모의 원심분리기 생산에 착수했으며 2005년 경까지 매년 농축우라늄 핵폭탄 2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⁴⁾ 그러나 일부 미국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의 북한 경제사정과 기술로는 최소 1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농축우라늄 핵탄두를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⁵⁾

(2) 협상 행태

협상이란 두 당사자가 주어진 협상 조건을 바탕으로 동원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각자의 협상 목적을 달성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¹⁶⁾ 협상의 의의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13) Larry Nicksch, op. cit., p. 8.

14) Fred McGoldrick, "The DPRK Enrichment Program: A Freeze and Beyond", Policy Forum Online (The Nautilus institute, January 10, 2003), p. 23.

15) 2003년 4월, 필자와의 면담.

16) James A. Wall Jr.,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김도태,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도태·차재훈,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로 나뉜다. 하나는 ‘일반협상관’으로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여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 의미의 협상관이다. 다른 하나는 ‘특수협상관’으로서, 전술적 수단으로써 다른 수단을 통한 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협상관이다. 전자는 현대 서구국가의 협상관에, 후자는 공산국가의 협상관에 가깝다.

이 같은 협상은 여러 기준에 따라, 그 성격을 특징화할 수 있다. 먼저 협상 목적과 의제 일치 여부에 따라 진의(眞意)협상과 의사(擬似)협상으로 구분된다. 진의협상은 협상을 문제해결 및 갈등완화 수단으로 간주하며, 협상의제와 협상목적이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협상은 다른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위장협상이며, 따라서 의제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¹⁷⁾ 또한 협상대상호간 역학관계에 따라 균형협상과 불균형협상으로도 구분된다. 전자는 합의도출에 있어 상호 거부권을 갖는 경우이며, 후자는 어느 일방이 거부권을 독점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협상 중요도에 따라 중요협상과 일반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중요협상이란 협상의 결과가 체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며, 일반협상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 나라의 협상행태는 목표·전략·전술 등 3가지 구성요소를 포

홍양호,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7) 접촉유지, 폭력적 행동의 대체, 정보수집, 속임수, 선전, 제3자에 대한 효과를 위한 협상 등 협상외적 부수효과(side-effect) 또는 숨은 협상목적을 추구하는 협상을 의미한다. Fred Charles Ikle, *How Nations Negoti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63), pp. 43-58.

함한다.¹⁸⁾

(가) 협상 목표

국제협상에서 각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¹⁹⁾ ①현존 협정시한을 연장하려는 ‘연장협상’(Extension agreement) ②정전(Cease fire), 외교관계 재수립 등 비정상적 관계를 종결지으려는 ‘정상화협상’(Normalization agreement) ③영토·정치적 영향력·경제 및 군사적 자산 등을 새롭게 분배함으로써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재분배협상’(Redistribute agreement) ④새로운 제도(국제연합 등)를 창설하거나 협상국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혁신협상’(Innovation agreement) ⑤합의에 상관없이 부수효과를 얻기 위한 ‘부수효과협상’(Side-benefits) 등 이다.

(나) 협상전략²⁰⁾

협상전략은 협상자가 협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사하는 일련의

18) 협상목표·전략전술 등 모든 차원에서의 변화를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로, 협상전략전술 차원에서의 변화를 부분적 변화(partial change)로, 협상전술 차원에서만의 변화를 피상적 변화(superficial change)로 규정할 수 있겠다.

19) Fred Charles Ikle, op. cit., 이영일, 이형래 공역, 앞의 책, pp. 38-54; Graham Evans & Jeffrey Newnhan, op.cit., p. 356.

20) Dean G. Pruitt,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1983), pp. 172-185.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협상전략은 협상자 태도에 따라 4가지 기본전략, 3가지 응용전략, 2가지 위기관리전략으로 구분된다.

(1) 기본전략

문제해결전략(협력전략: Problem solving strategy, Collaboration strategy)은 합의도출 가능성이 높거나 협상의제 해결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으로서 고협력-고갈등 관계에 있는 협상자간에 선택된다. 이 경우 협상은 상호 이익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공동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동기에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다(I win, You win)’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으로서 Non Zero-Sum적 특성을 가진다.

경쟁전략(대립전략: Contending strategy, Competitive strategy)은 협상의 목적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의 입장을 타방에 설득시키는 전략으로서 고갈등-저협력의 협상자 사이에 나타난다. 이 경우 대결과 제압적 자세로 인해 합의도출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나는 이기고, 당신은 진다(I win, You lose)’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전략으로서 Zero-Sum적 특성을 띤다.

양보전략(순응·굴복전략: Yielding strategy, Accommodative strategy)은 고협력-저갈등 경우에 선택되며, 양보의 정도가 클수록 협상 성공가능성은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동기에서 자신의 목표를 상대방의 목표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당신은 이기고 나는 진다(You win, I lose)’는 태도로 협상에 임

하는 전략이다. 충돌비용이 엄청나거나, 재난이 예상되는 시한이 임박했을 때 선택된다.

무행동전략(Inaction strategy)은 회피와 무시를 통해 잠정적으로 협상을 중단시키는 전략으로서, 저협력-저갈등 경우 많이 선택된다. 이 경우 시간의 낭비가 많으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협상자가 국면전환을 위해 또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시켜 유리한 양보를 얻으려 할 때 채택한다.

(2) 응용전략

혼합전략(Mixed strategy)은 경쟁전략, 문제해결전략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복잡한 협상에서 선택된다. 혼합전략은 상대방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경쟁전략을 사용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양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해결전략을 위한 협조도 필요할 경우 사용된다.

맞대응전략(TFT : Tit for Tat strategy)은 상대방이 협조적 태도를 취하면 같이 협조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이 적대적 자세를 취하면 같이 적대자세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전략선택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스스로 행동변화를 일으키려는 협상전략이다.²¹⁾

그리트전략(GRIT: Gradual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은 화답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전략으로서, 적대관계에서 상대가 착취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양보를

21)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상호교환함으로써 상대를 화답하는 과정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수준의 첨예화를 막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다.²²⁾

(3) 위기관리전략

국가들은 각각 협상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전략을 선택하는 데, 위기상황에서는 두 전략간의 상호작용이 타협, 협상의 성격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알렉산더 조지(Alexander George)는 위기관리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²³⁾

하나는 변화의 목표추구를 위한 공세적 전략(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이다.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유형으로는 ①위협·공갈 ②제한적이며 전환이 가능한 시험적 행동 ③통제된 압력 ④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한 기정사실화 ⑤계릴라 활동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소모적 전략’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현상유지를 위한 방어적 전략(defensive

22) Charles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S. Lindskold,

“Trust Development, the GRIT Proposal and Effect of Conciliatory Act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5 (1978), pp. 772-793.

23) Alexander L. George,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in Alexander L. George(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372-93.

strategy)이다. 여기에는 ①강압적 외교 ②상대방의 위기확산을 억지하면서 ‘제한된 위기확산 시도’ ③상대방이 위기확산을 못하도록 억지하면서, 도발에 대한 ‘신중히 계산된 응징’ ④상대방의 확산억지와 능력시험 ⑤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강한 대응을 초래하는지 확인시켜 주는 ‘한계선 획정 전략’ ⑥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 등이 있다.

(다) 협상 전술

협상 전술은 협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술 및 방법을 가리킨다. 즉 협상전략이 협상의 목적에 따른 기본방침인 반면, 협상 전술은 협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술 및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상이 진행되는 한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나, 협상전술은 협상상황 또는 협상조건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월(James A. Wall)은 합리성 개념을 적용하여, 협상전술을 합리적 전술(Rational tactics)과 비합리적 전술(Irrational tactics)로 구분한다. 전자는 협상자 협상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술을 선택하여 협상상대로 하여금 협상목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전술이다. 후자는 협상상대의 반응이나 협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나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자가 최대의 협상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전술을 지칭한다.²⁴⁾

24) James A. Wall Jr., Ibid., p. 65-67. 합리적 전술 안에는 협상상대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흥정전술(bargainig tactics)과 대화의 방법 등을 통해 상대를 설득함으로써 쌍방합의를 도출

2. 유형적 특징25): 여우·고슴도치·비둘기·전갈·독사 외교

북한의 외교는 크게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체제확장적 여우외교(Fox Diplomacy)이다. 냉전기 김일성 정권이 추진하였던 외교정책으로서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한반도공산화 통일을 위해 무력·혁명·대화·위장평화 등 다양한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공세적으로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여우 외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제수호적 고슴도치외교(Porcupine Diplomacy)이다. 과도기(94년 김일성 사망 이후~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범 이전까지) 북한이 보여주었던 외교정책으로서, 체제수호를 위해 명분유지 차원에서 '3대 진지강화론'과 같은 자력갱생노선을 고수하는 동시에 실리확보 차원에서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유발하는 유인외교와 제한적 대외개방정책과 모든 국가로부터 원조를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원조외교 그리고 군중시사상에 기초한 안보외교를 적극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체제수호적 모습을 보여준 과도기 북한외교를 고슴도치외교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체제도약적 비둘기외교(Dove Diplomacy)이다. 북한은

하려는 논쟁전술(debate tactics)이 있다. 흥정 전술 안에는 위협(threat)이나 실제의 강제력(coercive)을 사용하는 공격적 전술(aggressive tactics)과 타협(conciliatory)과 보상(reward)에 기초하는 비공격적 전술(nonaggressive tactics), 그리고 강경전술(tough)과 온건전술(soft) 그리고 중도전술(neutral)을 구사하는 신축적 전술(posturing tactics)이 있다. 공격적 전술은 주로 경쟁전략의 전술로 구사되고, 비공격적 전술은 양보전략의 전술이 된다. 한편 논쟁 전술 안에는 협상구조에 대한 논쟁, 문제해결을 위한 논쟁, 경쟁적 논쟁이 있다.

25) 허문영,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 pp. 24-25.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 강성대국건설 기치 하에 기왕의 동맹국가였던 중·러와의 관계강화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원수'였던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등 전 세계 각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평화적인 모습과 더불어 체제도약 외교를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북한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전방위·실리·강성대국 외교를 비둘기외교로 불러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체제강화적 전갈외교(Scorpion Diplomacy)이다. 김정일정권은 아직 공산화통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남북연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의 대외정책이 언제든지 전갈외교로 전략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핵무기 보유 숫자는 1~2개 정도를 상정한다.

다섯째, 체제공포(또는 파괴)적 독사외교(Snake Diplomacy)이다. 김정일정권은 유효성과 연대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체제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안보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경우 핵무기 생산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핵무기 개발을 적어도 미국 본토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전략적 의미(minimal strategic meaning)를 갖는 핵무장화 수준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 경우 핵무기는 6~7개 이상 보유함을 뜻한다.

Ⅲ. 김정일정권 외교정책의 시기별 특징

1. 유훈통치기(1994.7~1998.8): 고슴도치 외교

가. 목표 : 체제유지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소련의 해체, 한국의 북방외교 그리고 국제사회의 핵사찰압력 등으로 인해 경제난 심화와 외교적 고립 그리고 안보위기의 3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김정일은 경제난과 안보난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하였다.²⁶⁾ 그리고 북한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95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선포하고, 군사중시정책을 통해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였다. 이후 북한지도부는 '97년 '총돌격전, 3대진지 강화론'을 제시하였고, '98년 '경제건설이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임을 강조하면서, 체제유지의 관건으로 경제난 해결에 적극 나섰다.

나. 전략 : 편승전략

이 시기 북한이 추진한 외교정책 특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6) 김정일, “비공개 연설(1996.12.7)”, 「조선일보」, 1997. 3. 19.

(1) 정치: 유인외교 추진

북한은 김일성 사후 주변 4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미관계 개선, 대중관계 강화, 대러관계 조정, 대일 접근·적대 병행을 통해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유발하는 ‘유인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미관계에 있어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1994.10.21)에 대해 ‘김일성 유훈’을 관철한 커다란 성과²⁷⁾로 평가하고,²⁸⁾ 대미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²⁹⁾ 김정일은 체제유지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해 김일성 유훈을 따라 전통적인 ‘반미주의’를 ‘通美주의’로 전환,³⁰⁾ 대미관계 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북한은 한·중 수교(1992.8)이후 중국과

-
- 27) 북한으로서는 기본합의문 채택을 통해 중유공급과 경수로지원이라는 경제적 실리, 연락사무소 개설합의라는 외교적 성과,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 공식적 약속이라는 안보위기 극복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28) 북한은 북·미기본합의문을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이며, 두나라 국가수반들이 보증한 무게있는 문건’으로 간주하였다.
- 29) 김일성은 1994년 신년사를 통하여 “자주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나라들 과도 선린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힘으로써 대미관계 개선 의사를 천명하였다. 「로동신문」, 1994. 1. 1
- 30) 북한은 북·미 제네바합의(1994.10.21)를 통해 대미관계를 개선하였으며, 제 뉴욕회담(1996.5.4~9)에서 미군유해공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작업을 통한 연내 공동발굴에 합의함으로써 대미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대미접근 정책 연장선상에서 식량난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와 아태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 등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추가완화 조치와 식량원조를 확보케 하였다. 이에 미국은 1996년 2월과 6월에 각각 2백만 달러, 6백만 달러분의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의 관계에 있어 다소 소원한 양상을 보였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 방문 및 초청외교³¹⁾를 강화함으로써 친선·동맹관계를 밀접하게 유지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제8차 북·일 수교협상(1992.11)이 결렬된 이후 대미협상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의 핵무장·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군사대국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일 비난의 강도를 높였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 수교교섭 예비회담을 재개(1994.8)하고, 북한은 일본 연립3당의 방북대표단과 「조·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1995.3.30)하였다.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보상금 획득과 경제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일 수교협상에 적극 임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북한벌목공의 한국 인도, 한국전쟁관련 문서 공개, 북한 핵문제 등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었으나,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대러 방문 및 초청외교를 재개하여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관계회복을 추진하였다.³²⁾

요컨대 북한은 '유인외교'정책을 통해 김정일정권의 안정적 출범과 장기 지속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31) 방중 외교의 사례: 외교부 부부장 송호경(1994.8), 부주석 이종옥(1994.10) 부주석 김병식(1995.1) 부총리 김복신(1995.1) 당비서 황장엽(1995.2) 당 부부장 이희규(1996.3),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정각 상장(1995.10) 부총리 홍성남(1996.5), 부총리 김윤복(1996.7) 등 초청 외교의 사례: 국방부 부국장(1995.3), 군사과학원 정치위원 張工 중장(1995.9), 국무원 비서장 羅 翰(1996.7), 인민해방군 가무단(1996.8) 등.

32) 방문외교: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김정우(1993.8), 외교부 부부장 이인규(1994.5)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한수길(1994.11), 당 부부장 박경선(1995.1) 등; 초청외교: 외무차관 파노프(1994.9), 자유민주당 당수 지리노프스키(1994.10), 부총리 이그나텐코(1996.4) 등.

(2) 군사: 동맹외교 지속과 대미 군사접촉 시작

북한은 전통적 혈맹인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5년 10월 25일 북한은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하였다.³³⁾ 1996년에 들어와서는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35주년(7.11)을 맞이하여 사상 최초로 중국군함을 남포항에 맞아들이는 등 동맹관계 강화에 적극 나섰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단독적인 군사접촉 외교도 시작하였다. 북한은 제1차 미군유해송환협상(1996.1, 하와이)에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박임수 대좌 등 군부 인사들을 파견함으로써 미 국방부 부차관보급 인사와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3) 경제: 제한적 대외개방정책 지속³⁴⁾과 원조(도입)정책 추진

북한은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핵문제에 따른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 나섰다.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김일성 유훈’으로 제시하고, 제반 법령 제

33) “조·중친선은 영원불멸이다”, 『로동신문』, 1995.10.25.

34)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식량원조 도입정책을,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중유 및 경수로 도입정책을, 생필품난 해결을 위해 외자 도입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허문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21-53.

정 및 투자환경 개선 그리고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다.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동 지역에 대한 외자와 해외교포자본 및 남한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1995년 5월 심천, 8월 북경, 9월 북경에서 각각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공식 및 비공식 투자유치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였으며, 1996년 9월 13~15일에는 UNIDO, UNDP와 함께 현지에서 17개국 407명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하여 2.82억 달러의 투자계약을 유치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최초로 서방국가들 및 국제기구에 식량원조를 요청하였다. 북한은 1995년 5월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 일본에 파견, 일본이 보유중인 쌀 잉여분 일정량(60~80만톤)을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쌀도 “아무런 전제와 정치적인 조건없이 원조하거나 대여한다는 제의가 있으면 검토하고 싶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으로부터 쌀 15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바 있다.

(4) 대미외교

이 시기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로 표출시켰던 대미 정면돌파 전략을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에 조응하여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을 통해 미국과 타협을 추구하는 편승(Bandwagoning)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열악한 전략적 환경 하에서 핵무기 개발로 안보위기를 정면돌파 하려던 북한은 탈냉전시대를 맞이해 안보위협 당사국과의 직접적 관계개선 및 정책적 조율을 통

해 정치·군사적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수단: 협상 중심

(1) 핵무기

1994년 10월 21일 「북·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동년 11월 1일 북한은 핵활동 동결을 선언하였고, 11월 28일 IAEA 상주 감찰단은 영변·태창 핵시설 운영중단을 발표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 15일 북한은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였고, 1996년 4월 베를린에서 제1차 북·미 미사일회담에도 응하는 등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대미 협상 :

(가) 협상목표 : 정상화·재분배 협상

김일성 사후 북한은 군부중시의 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최악의 체제위기 국면은 벗어났으나³⁵⁾ 총체적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였다.³⁶⁾

35) 북한은 '97년에 '엄중한 전쟁위험이 제거되게 되었다' 고 주장함.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 1.

이 시기 북한의 대미 협상목표는 김정일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경제제재 해제 및 지원확보를 통해 유효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군사적 체제보장을 확보함으로써 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미관계의 재편을 모색하되, 협상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생존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라 하겠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김정일정권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미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이 최고목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 출발점이자 김정일 후계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되는 ‘조국통일(공산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최고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미협상 목표는 외양상 ‘정상화협상’(Normalization agreement)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재분배협상’(Redistribute agreement)을 겨냥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 협상전략 : 문제해결 전략

이 시기 북한·미국 관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1994년 10월 제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산출된 북·미 기본합의문이다³⁷⁾. 이후 북한은 기본합의문 이행의 일환으로 미국과 1995년 12

1.

36) 식량난 가중과 만성적 경제침체, 주민의 체제이탈 현상 및 탈북자 증가, 관료의 보신주의와 부정부패 증가, 과중한 군비증강의 부담 등.

월 경수로 공급협상 타결,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 진행,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물자·자금 제공 허용 등을 도출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대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한편,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96년 1월 미군유해송환협상과 1996년 4월 미사일협상에 호응하였다. 이러한 북·미간의 직접 대화통로와 함께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7년 12월 제1차 본회담이 개최된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은 북·미간 또 다른 대화통로로 기능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199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저작을 통해 “우리는 미국을 백년속적으로 보려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대미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다) 협상전술 : 야금야금(Salami) 전술

북한은 대화와 거래를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대미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구하였다. 따라서 대미 협상전술과 관련하여서는 협상 초기에 유화적 전술을 보여주되, 협상 중반이후에는 벼랑끝 전술과 야금야금 전술을 병행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협상을 그만두겠다는 위협을 동원하면서 조금씩 양보를 더 얻어내고자 하였다.

37) 북미 기본합의문은 대북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과 북미 관계개선을 대가로 북한의 핵동결 및 궁극적인 핵주권 포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라) 협상성격 : 진의·균형·중요 협상

북한의 대미협상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체제유지를 위해 대미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진의협상적 성격을 띠고 있고, 북한도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협상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향후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협상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유신통치기 북한의 협상행태와 관련한 논의를 종합, 냉전기 협상행태와 비교해 볼 때, 지속과 변화의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측면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특수협상관을 계속 갖고 있는 데 기인한다. 북한은 협상을 투쟁의 한 수단이며, 투쟁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회담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협상초기 경쟁전략을 구사하고, 강경한 공격적 전술을 지속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1980년대 후반이후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상황에서 겪었던 체제위기의식과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의 공세적 한반도 적화혁명전략을 수세적인 체제생존전략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협상행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해 진의협상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협상후기 문제해결전략과 타협전술을 구사하는 혼합전략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 평가

유신통치기 북한은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그리고 안보위기의 3중고를 겪는 가운데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인해 북한 정권 50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북한 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3대진지 강화론'을 명분차원에서 내세우되, 동시에 실리확보 차원에서 주변 4국의 대한반도영향력 확대경쟁을 유발하는 유인외교와 균 중시의 안보외교 그리고 모든 국가로부터 원조를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원조외교를 적극 수용하였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심고리'임을 인정하여 대미 편승전략을 적극 수용하였고, 이런 맥락에서 문제해결전략과 야금야금(Salami)전술을 대미 협상에서 구사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외교정책은 생존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공격을 가하지는 않되 자신에게도 일발의 타격력을 갖고 있음은 은근히 과시하면서,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고슴도치와 비슷하다 하겠다.

이 같은 북한의 외교정책은 내부체제결속에 먼저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정통성 및 통제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원조도입 정책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유효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그리고 대미 관계개선을 통해 연대성 제고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 성과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 성과라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국방위원장 1기(1998.9~2001.1) : 비둘기 외교

가. 목표 : 체제 도약

북한은 「강성대국(強盛大國)」³⁸⁾기치 하에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출범시켰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특징을 사상강국·정치대국·군사강국·경제강국으로 규정하며, 강성대국 건설방식으로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상강국·정치대국·군사강국'은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명실상부한 '강성대국'이 될 수 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사상강국 및 정치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북한은 각종 상징조작과 사상사업의 강화를 통해 김정일정권의 정당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북한은 로켓발사를 강성대국의 '신호탄'으로 강조하는 등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98.9.5)하였으며, 김일성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세계혁명의 원로수령'으로 칭송하고, 김정일을 '혁명의 계승자'로 부각시키는 등 우상화작업을 지속하였다. 또한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을 내세워 군부중시체제를 지속하는 한편 제10기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중앙조직 개편 그리고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99.3.7)와 지방조직 정비를 이룩

38) 「로동신문」 '정론', 1998. 8. 22; 「조선중앙방송」, 1998. 8. 23.

하였다. 이는 김일성 사망과 경제파탄 상황에 따른 리더십 부재와 혼란 방지 및 체제관리를 위해 군이 국방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케 하고, 이 기반 위에 정상체제로 진입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강국 건설과 관련,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내부체제 공고화 및 적화통일 수단강화 그리고 대미협상 수단확보 차원에서 군사력 증대정책과 군부 우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로켓 발사('98.8.31)를 통해 중·장거리 유도미사일 개발능력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김정일의 총비서 추대 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 중앙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참여한 점과 제8차 헌법개정 시 국가주석을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은 정상체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대 및 군부 우대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군사문화의 확산을 통한 '전사회의 군사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강국 건설과 관련하여, 북한은 정치우선주의와 사회주의 방식 고수를 주장함으로써 그 한계를 노정하였다.³⁹⁾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과 함께 외부자원 도입정책을 전개하였으나, '97년-6.8%, '98년-4% 내외 등 9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4대난(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39) 북한은 전민에 '경제 정상화 총력' 을 촉구하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에 서는 '사상이 먹는 문제에 우선' 한다는 사상교양 강화를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9. 4. 15; 「평양방송」, 1999. 4. 13.

건설』 노선⁴⁰⁾을 역설하는 한편, 특수경제지대 설정 등 경제개방 관련조항추가와 개인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범위 확대를 통해 북한식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향후 북한은 개혁·개방에로의 적극적 정책전환보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수와 주변4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경쟁을 유발시키는 기존의 「개혁없는 개방정책」을 강화시킨 「주체형 대외개방」 또는 「소극적 개혁·적극적 개방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략 : 편승·균형 이중전략

(1) 정치 : 전방위의교

북한은 '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 강성대국건설 기치 하에 대외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2000년 7월 북한은 구소련시대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를 북·러관계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무너진 북·러관계를 복원하였다. 중국과의 관계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례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나아가 2000년 10월 조명록 군총정치국장을 미국에 보내 클린턴 대통령과 대화케 한 후,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을 방북 초대하여 대미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다.

40)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1998. 9. 17.

이 시기 북한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하였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을 민족적 영도자⁴¹⁾로 부각시키는 한편,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경제희생의 기회⁴²⁾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대미·일 관계 정상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군사 : 선군외교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외교전략을 ‘선군외교전법’, ‘선군외교전략’으로 규정한다.⁴³⁾ 북한은 1997년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인민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10월 7일 『조선중앙방송』정론을 통해 ‘先軍後勞’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8년 4월 25일 『로동신문』사설을 통해 ‘선군혁명령도’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10월 10일 사설을 통해서 ‘군사중시사상’이 김정일 정치방식임을 강조하였고, 10월 20일 『조선중앙방송』 논설을 통해 ‘선군정치’라는 용어로 최종

41)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을 ‘21세기 태양’, ‘통일대통령’으로 호칭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인 김정일 위원장을 향한 6월 김대중 대통령, 7월 푸틴 러시아대통령, 10월 강택민 중국국가주석 등 ‘별’들의 방북을 유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을 확고히 각인시킬 수 있다.

42) 식량난과 경제난을 국제지원과 비랑끝 외교를 통한 식량지원 강요정책과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통해 임시 변통해 온 북한은 국제기구 및 중국의 원조 피로와 비랑끝 외교의 역기능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해외원조가 격감될 경우, 김정일의 권위가 위태로워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북한은 단장기 대책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여,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으로부터 최대한의 실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박영규, 『김정일정권의 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58-61.

정리하였다.

이후 1999년 6월 16일 『로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선군정치가 김정일정권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3) 경제 : 실리외교

북한은 정치·사상적 변화 없이 경제·사회적 변화를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선군혁명·강성대국 건설 전략이 김정일의 21세기 전략임”을 공언하면서, 실용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전주민들에게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예컨대 “혁신적 안목, 진취적 기상”⁴⁴⁾, “새로운 관념에 의한 문제 해결과 시대 요구에 따른 경제발전 방침”⁴⁵⁾, “21세기에 맞게 사고방식, 일하는 자세, 생활기풍 등을 새롭게”⁴⁶⁾등을 강조하였고, 보수적 인물로 알려진 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조차 간부들에게 “새 세기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상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고, 또한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 전면적 부흥의 해”, “21세기를 영광스러운 김정일 세기”로 빛내어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⁷⁾

44)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2001. 1. 1.

45) 『로동신문』, 2001. 1. 9.

46) 『로동신문』 정론, 2001. 1. 9.

47) 김정일 생일 중앙보고대회, 2001. 2. 15.

(4) 대미외교

미국의 대북정책 본질에 대해 아직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경수로 사업 지연과 1999년 금창리 핵개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반발하고 나섰다. 그 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냉전시대의 균형(Balancing)전략을 병행하여 안전판을 확보하는 한편, 편승 전략을 지속하여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확보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수단 : 주 협상·중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개

(1) 핵무기 : 개발재개 가능성 시사

북한은 1996년 하반기부터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⁴⁸⁾ 그리고 1998년 3월 6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은 “지금 우리의 해당부문에서는 언제 들어 올지 알 수도 없는 경수로를 믿고 우리의 자립적인 핵동력 공업을 계속 희생시킬 수 없으므로 제재완화요, 경수로 건설이요 하는 미국 측의 빈 약속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원래 계획한대로 나가자고 요구해 나서는 형편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0년

48) 「로동신문」, 1996. 9. 20, “조·미 기본합의문이 파기될 경우 마음 편히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자체의 자금과 기술, 원료에 의거해 자립적인 핵동력 공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2월 3일 조창덕 부총리를 통해 “우리의 핵 동력기지 건설의 동결로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이미 수백억 kW의 손실을 입었다. 만약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한 압살정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우리 식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1998년 4월 17일 북한의 파키스탄 Khan Research Laboratory에 미사일 기술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양국에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동년 8월 미국은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고, 9월 24일 IAEA 총회를 통해 대북 핵사찰 이행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후 1999년 5월 미국은 금창리 현장조사단을 파북, 현장 검증케 하였다.

(2) 협상

(가) 협상목표 : 정상화·재분배 협상

이 시기 북한의 대미 협상목표는 여전히 김정일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경제제재 해제 및 지원확보를 통해 유효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군사적 체제보장을 확보함으로써 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관계개선과 대중·러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강화를 통해 대미관계의 재편을 모색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협상 목표 성격 또한 여전히 ‘정상화협상’(Normalization agreement)을 표방한 ‘재분배협상’(Redistribute agreement)이라 할 수 있겠다.

(나) 협상전략 : 정면돌파·무행동·경쟁 전략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북미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몇 년간은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때로는 동시에 협상카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면돌파의 외교전략과 공격적 전술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첫번째 사례로서,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은 1998년 8월 21일~9월 5일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양국간 현안인 핵동결합의 이행, 4자회담 및 미사일협상 재개, 지하핵의혹 건설문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핵합의 이행, 미사일협상 및 4자회담 재개를 일괄타결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8월 31일 다단계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함으로써 정면돌파 외교전략과 공격적 전술을 구사하였다. 두번째 사례로서, 북한은 1999년 5월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미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1999년 9월 7~12일 베를린 북·미 고위급협의를 통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를 도출함으로써 대미 접근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⁴⁹⁾ 세번째 사례로

49) 미행정부는 1999년 9월 17일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 상품의 미국내 수입과 미국 상품의 북한 수출이 대부분 허용되고, 민간 및 상업용 자금의 송금과 여객 및 화물운송이 가능해졌다. 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1999~2000」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68. 한편 북한은 1999년 9월 24일 외무성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발사 중단을 공표하였다. 이 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선은 양측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회담을 지속할 것이며 바람직한 회담분위기를

서, 1999년 9월 25일 백남순 외무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관계개선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신의있게 호응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대미 관계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네번째 사례로서, 북한은 미국과의 차관급회담을 지속하여 2000년 1월 22~28일 베를린회담을 통해 2월 말 최종준비회담, 의제·일정 제반문제 확정, 1개월 후 고위북한관리의 워싱턴 방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한편, 1월 28일 조건없는 미군유해 송환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협상자세가 불만스러운 경우 무행동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전환할 경우, 문제해결전략을 다시 구사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미국과 2000년 3월 8~15일 고위급회담 준비회담을 뉴욕에서 개최하였으나, 고위급회담의 구체적인 의제 및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하였고, 5월 24~30일 로마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핵협상 및 미사일협상 재개에 합의하였다. 결국 북한은 2000년 1월 베를린회담을 통해 합의한 고위급회담의 연기에서 나타나듯이 대미 접근의 속도를 일단 늦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미 접근을 다시 가속화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10월 12일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①양국관계의 적대관계 종식, ②평화보장체제 수립, ③경제·무역전문가 상호교환, ④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⑤테러반대, ⑥미 대통령의 방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10월 23일 올브라이트 미

조성하기 위해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1180호(1999.9.30).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는 급속히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북한은 대미협상이 불균형 협상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경쟁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부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2001년 1월 20일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엄격한 상호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변화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미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는 2001년 3월 9일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강경한 대북정책 6원칙, 즉 ①한·미·일 정책 공조, ②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 지지, ③북한정권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 ④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⑤대북 검증과 점검, ⑥북한의 무기확산 활동 주목 등을 발표하면서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결과 6월 6일 부시 대통령은 대북정책 검토의 완료와 함께 ①핵관련 제네바 합의 이행 개선, ②북한 미사일 검증가능한 규제 및 금수, ③재래식 군비태세 등을 의제로 그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제재완화, 기타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입장에 반발해 오던 북한은 6월 13일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의 접촉에 호응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북한은 6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재개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다. 이

담화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제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로, 특히 재래식 군비(상용무력)에 관한 문제는 주한미군철수 전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미 기본합의문과 공동성명 이행의 실천적 문제가 의제가 되어야 하며, 경수로 제공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 협상전술 : 강경전술

북한은 한국전쟁시 미국의 만행에 대한 공식 사죄와 피해보상 요구, 전민족적 반미투쟁 촉구,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시험 비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보상,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촉구하는 등 대미 비난공세 및 새로운 대미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강경전술 구사의 모습을 보였다.

라. 평가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북한당은 사상·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사상 및 정치강국과 군사강국 건설에 있어 상당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강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치우선주의와 사회주의방식 고수로 인해 그 한계를 노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 정치적 전방위외교, 군사적 선군외교, 경제적 실리외교를 추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됨에 따라 편승전략과 더불어 구 동맹인 중국 및 구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전략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대미 협상에 있어 정상화협상을 표방한 재분배 협상을 추구하였고, 문제해결전략과 더불어 정면돌파·무행동 및 경쟁전략을 사안에 따라 구사하는 혼합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 지향적이었던 점과 '제국주의적 원수'였던 미국 및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자본주의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섰다라는 점에서 체제도약적 비둘기외교로 일컬어질 수 있겠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외교정책을 통해 정치적 관계개선을 이뤄 나갔다는 점에서 정통성 강화의 성과와 구 동맹국가들과 군사적 관계도 효율적으로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연대성 강화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유효성 제고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급격한 대외개방으로 인해 통제성 제고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부시행정부 출범이후기(2001.1~): 전갈 외교와 독사 외교

가. 목표 : 체제 수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되던 북·미 관계개선은 부시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이후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계획의 취소로 인해 주춤거리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1월 20일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출하였다. 이후 부시행정부는 3월 9일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등 대북정책 6원칙을 발표하고, 6월 6일 제네바 합의이행 개선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같이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과 대북 강경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나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체제수호적 자세를 취하였다. 2001년 6월 18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미 대화재개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고, 김정일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7월 24일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따라 대미 관계개선이 저지되고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⁵⁰⁾ 그리고 2002년 1월 31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함께 신 북방삼각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EU 대표단을 초청하여 유럽관계도 적극 개선해 나갔다. 2001년 7월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임

50) 「로동신문」, 2001. 7. 28.

을 천명하였고,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차원에서 모스크바를 방문,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국제문제 공조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9월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의 양자 정상회담을 마무리함으로써 북·중·러 삼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 또는 친선적 동맹관계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⁵¹⁾

나. 전략 : 돌파 전략

북한은 제2차 서해교전(2002.6)에 대한 유감표명 이후 「경제관리개선」 조치(7.1)를 통해 대내 경제개혁을 진행시키고, 「특구」 확대지정(신의주: 9.12, 금강산: 10.23, 개성: 11.13)을 통해 대외 경제개방을 강화하고, 대러 정상회담(8.20~24)·대일 정상회담(9.17)과 대남관계 진전을 통해 대미 접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효성 제고와 연대성 강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북한의 정책 변화는 전술적 변화로 폄하기에는 큰 변화이고, 본질적 변화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북한의 정

51) 신북방삼각관계는 냉전기 북방삼각관계와는 그 성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북방삼각관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일방적 경제지원 중심의 군사적 동맹관계 특징을 지녔다. 그러나 신북방삼각관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의지, 중국의 사회주의 대국 건설의지, 북한의 경제강국 도약의지와 같이 실리에 기초한 상호교류 중심의 경제적 협력관계 특징을 보다 많이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MD 추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안보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변화는 전략적 변화로 규정할 수 있는 데, 이는 기본적으로 1998년 9월 헌법개정과 더불어 출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선택한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00.6.15)은 이 같은 전략적 변화의 현실적 발현이고, 북·러/북·중 및 북·일 정상회담(02.9.17)과 각종 개혁·개방조치는 이의 적극적 추진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1) 정치 : 전방위 정상외교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전방위 정상회담을 통해 대외관계를 넓혀 나갔다. 2002년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비공식 방문(8.20~24)’,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경협 확대 및 한반도·국제정세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⁵²⁾ 북한은 대러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일 협상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지원 확보를 통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부작용에 대처하려는 것 같다.⁵³⁾

북한은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2차례 정상회담(9.17, 평양)을 통해 4개항의 『평양선언』⁵⁴⁾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대일 관계개선 및 수교를 통해 대미

52) 1차회담(2000.7.17, 평양), 2차회담(2001.8.4, 모스크바)

53)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 개보수 지원 및 전력공급을 기대할 것이며, 대러 교역(2001년 1억1천만 달러)의 70% 이상이 러시아 극동지역과 이뤄지기 때문에 공급물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이 지역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54) ①2002년 10월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②일본의 역사적 사죄와 경협(무상 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협의, ③일본 국민 생명 및 안전관련 현안 적절한 조치(김정일 위원장 일인 납치 구두사과), ④한반도 핵문제

협상기반을 구축하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자본·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일 수교시 일본이 지불할 보상금은 50억~1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원했다. 북한은 2002년 9월 미국 대표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평양 대동강변에 나포되어 있었던 푸에블로호를 남포항으로 이동시켰다 한다. 그리고 변화된 북한의 개혁·개방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서둘러 각종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완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경제개선조치와 신의주특구 지정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러시아는 부시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악의 축에 대한 인식도 바꾸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억제정책에서 선제타격정책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평양협상에서 심각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예측한 바 있다.⁵⁵⁾

(2) 군사 : 선군외교 지속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선군정치를 대외적 측면에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는 불패의 정치'로 설명하고 있다.⁵⁶⁾ 예컨대 1994년 전쟁의 일촉즉발 위기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것이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김정일의 선군정치 산물이라고 북한은 주장하였다.⁵⁷⁾ 또한 외교전의 배경

관련 합의 준수(미사일 시험발사 보류 연장 의향 표명)

55) 「러시아의 소리방송」, 2002. 9. 29.

56)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pp. 80-88.

에는 정치군사적 힘이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 외교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인 외교이며 배짱과 담력으로 맞받아 나가는 강경한 외교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⁵⁷⁾ 그리고 김정일정권 출범이후 확대된 수교국가 수 등 외교정책 성과와 “적들을 초강경으로 제압”한 것 또한 김정일의 ‘선군외교전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강조하였다.⁵⁹⁾

(3) 경제 : 신사교 외교⁶⁰⁾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⁶¹⁾지침』(2002.7.1)은 개혁·개방을 통한 자본주의의 수용이라기보다, 상황에 떠밀려 채택한 사회주의 강화책으로 판단된다. 자본주의경제로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과 사적 소유의 전면화가 있어야 하나, 여전히 가격

57)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01. 10. 9.

58) “선군정치는 우리시대 반제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신문』, 2001. 10. 9.

59)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02. 4. 22.

60) 소극적(추동적) 대내개혁과 한정지역의 적극적(대담한) 대외개방.

61)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 용어를 1985년 최초 사용, 2001년 두번째 사용하였다. ①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한다 ②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해 나간다 ③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방법을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간다. “최고인민회의의 내각보고”, 2001. 4;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 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자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 방법을 해결하는 것”, 김정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2001. 10. 3. 박형중, 『정책건의서』(서울: 통일연구원, 2002) 재인용.

제정국 가격결정과 집체 소유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고 나선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이 지속되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적제를 도입하는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시장경제의 도입, 개혁개방정책의 선택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다만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분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9.12)한 것은 대담한 개방과 자본주의 실험 조치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총 6장 101조)을 채택(9.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발표하였다.⁶²⁾ 그리고 어우야(歐亞)그룹 양빈(楊斌)회장(중국계 화란인)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였다.⁶³⁾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중국의 경제개방 경험(홍콩·상해·심천)과 북한의 경험(나진·선봉/금강산)을 선별 수용한 「북한식 개방모델」로서, 자본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개방 완충지대(국제사회-신의주특구-북한 내륙)'로 구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0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⁶⁴⁾하며, 상해 포동(上海 浦東)이 '90.6부터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해 온 점에서 유사하고, 단둥을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深圳) 특구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북한의 신의주특구 추진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양빈 장관은 '중국이 발표 사흘 전에 신의주 특구를 알았다'고 밝혔

62) 「조선중앙통신」, 2002. 9. 21.

63) 「조선중앙방송」, 2002. 9. 25.

64) 중앙직속기관 설정,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

는 바, 북한은 신의주특구 개발 최종결정과정에서 중국과 사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⁶⁵⁾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는 2년 전(2000.5)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신의주 특구' 구상을 듣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시장 부족을 이유로 '38도선 특구(개성)'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⁶⁶⁾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작년 평양 방문시(2001.9) 군사거점인 단중 인근에 서방자본이 진출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주 등 평양이남지역 특구 개발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⁶⁷⁾ 그리고 양빈 회장이 선양 본사에서 북한방문 출국직전(10.4) 중국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체포이유는 탈세·주식투기·부동산불법 개발 등이 거론되나, 실제로는 중국과 사전협의를 없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의 타임지는 외국인 투자와 자본주의 실험장으로 선택된 신의주 특구가 유경호텔과 같은 또 하나의 거대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⁶⁸⁾

한편 현재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4귀(邊)生 通漁腹 必生 戰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초반 우상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98년 우하 금강산 관광을 허용함으로써 개방에 대한 적응과 그 경제적 이득을 체득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좌상 및 좌하를 모두 개방하여 '변방 귀퉁이 개방전략'을 통해 외자유치를 이뤄내고, 이 지역을 철도로 연계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러시아와 일본의 자본

65) 양빈 기자회견 (9.23, 평양), *South China Morning Post*, 2002. 9. 30.

66) 「朝日新聞」, 2002. 9. 29.

67) 「조선일보」, 2002. 10. 10.

68) *Time*, 2002. 10. 7.

을, 「신의주 특별행정구」(9.12)에 중국과 서방 자본을, 「금강산 관광지구」(10.23)에 한국 민간기업 자본을, 「개성 공업지구」(11.13)에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 자본을, 경의선·경원선 철도현대화에 일본·러시아 자본과 협력을 이끌어 내 북한경제를 회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대내적 경제개혁을 진행시키고, '4변 특구'지정을 통해 대외적 경제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유효성 제고를 위해 현실 추동적 개혁과 더불어 '4변 특구(나·선지구·신의주·금강산·개성)' 개방을 통해 부족한 물자공급과 외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대미외교 : 이중전략에서 돌파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은 유효성 제고를 위해 현실추동적 개혁과 더불어 북한의 4모서리 지역(나·선/신의주/금강산/개성)을 개방,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사회주의원칙 고수, 홍콩식 개발)와 철도연결(서해선, 동해선)만 되면, 3년 지나면 잘살게 된다'고 대대적으로 강연회에서 선전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⁶⁹⁾

또한 연대성 강화를 위해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강화를 통해 기반을 다지고, 대일 관계개선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대미 접근

69) 「조선일보」, 2002. 10. 9.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2000년 11월경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미사일 문제해결과 관계개선도 추진하였으나, 미국 대선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다. 이에 북한은 북·일정상회담(02.9.17)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북·미정상회담(03년 예상)을 모색하는 수순으로 전술적 변화를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은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대내 경제개혁을 진행시키고, 「특구」 확대지정을 통해 대외 경제개방을 강화하고, 대러·일·미 관계개선과 대남관계 진전을 통해 유효성 제고와 연대성 강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북한정책의 전략적 변화에 대해 각국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미국은 ‘최근 일부 분야에서 긍정적인 사태 발전이 일어나고 있으나, 안보 분야에선 거의 변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⁷⁰⁾

이같은 전략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1998년 9월 헌법개정과 더불어 출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선택한 「강성대국 건설」 노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98년 9월 이후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남북정상회담(00.6.15)은 이의 현실적 발현이고, 북·일 정상회담(02.9.17)과 각종 개혁·개방조치는 이의 적극적 추진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우리로서는 ‘사회주의 관리체계의 개선’(경제개혁)의 시작이 2000년 말부터 시작되었다는 「조선신보」의 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¹⁾ 2000년 말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매우 낙관적인 시

70) 바우처(Richard Boucher), 국무부대변인 일일브리핑, 2002. 9. 27.

71) 「조선신보」, 2001. 1. 24.

기였는 바, 북한의 '개혁·개방'이 주변 정세의 긴장완화 및 대외원조 확보 가능성 증대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경제강국 건설'(경제난 극복)을 위해 주변정세를 안정시키고, 외부경협을 얻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 크다. 다만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 제기와 중국의 양빈 체포는 향후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정책과 대외관계 개선정책이 북한 의도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은 최근 북한이 추진해온 외교정책과 협상행태에 있어 어떤 변화와 지속을 의미하는가? 북한은 외교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강압정책에 대항하여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돌파전략(Breakthrough strategy)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98년 강성대국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대중·러 관계강화를 통한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과 대미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편승전략(Bandwagoning strategy)의 이중전략에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목적 및 외교목표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우선순위에 있어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번 핵개발 계획 시인을 통해 비록 단기적으로는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이를 경제난과 안보난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카드화하여 유효성과 연대성을 제고하여 당면과제인 김정일정권의 지속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북한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가목적에 있어 우선순위가 다시 변할 가능성은 있다.

다. 수단 : 핵무기개발 시위와 협상 병행

(1) 핵무기

앞에서 논의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볼 때, 2002년 9월 북한은 ‘중심고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심과 양보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 확보 차원에서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 단계 농축우라늄 핵무기개발 계획은 『협상모델』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을 거쳐 2004년 3월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천명하고 실행하고 있는 핵무기개발 정책으로 인해 현 단계 북한 외교의 특징은 체제강화적 전갈 외교라 할 수 있고, 향후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장차 단기 북한 체제극대강화·장기 북한 체제자기파멸화의 독사 외교로 변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협상

(가) 협상목표 : 정상화협상(대협상)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장기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난과 안보난을 반드시 해결하여 유효성을 제고하고, 연대성을 강화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심고리’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²⁾ 따라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아내

기 위해 2003년 경수로발전소 완공지연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 문제를 중심으로 큰 담판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농축 계획은 바로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 내, 협상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받아내려는 카드로 준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은 단순히 미국의 확실한 증거에 의한 억박에 밀려 어쩔 수없이 시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것으로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없이는 김정일체제가 장기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한 상황에서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전제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협상전략 : 맞대응·위기관리 전략

2003년 상반기 북한은 공세적 위기관리전략(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차원에서 대미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동결 해제선언을 통해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전투기의 북방한계선 침범(2.17) 등으로 정전협정 무효화 가능성을, 지대함 미사일 실험발사(2.24, 3.10) 등으로 미사일 모라토리엄 폐기 가능성을 각각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양자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은 북경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비공식적으로 미국에게 통보하였고, 백남순 외상 또한 평양

72) 김정일은 1997년에 이미 ‘미국을 100년 숙적으로 보려하지 않는다’ 고 언급하고, 대미 관계정상화를 모색한 바 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7. 8. 4.

방문 미 의원단에게 재처리 완료를 언급함으로써 북·미 협상이 균형 협상과 중요협상임을 주지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과 플루토늄 핵무기 보유의 흑을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용으로 일단 활용하되, 정권유지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김정일정권 붕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 확보차원에서 핵무기개발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⁷³⁾

북한은 새 세기 들어와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임을 주장하고, ‘변화된 현 정세와 자신들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취해진 ‘대담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정책변화를 방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반도에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문 4개 조항중 미국이 준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⁷⁴⁾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 선전포고로써 북·미 공동성명과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핵무기 전파방지조약과 북남 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한 것’으로 주

73) 한호석은 북한이 핵무기개발활동을 5단계로 진행할 것이며, 8월 현재 3단계까지 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①5MW급 실험용 흑연감속로 재가동 ②50MW 및 200MW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재개 ③폐연료봉 8000여개 재처리작업 완료 ④추가 핵탄두 제도 ⑤기보유 핵탄두 지하핵실험 실시 및 핵무장 선언, 한호석, 앞의 글, pp. 10-13.

74) 북한 주장의 미국 위반근거

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협상에 의해 대미관계를 풀기
 원함을 천명하고 있다.⁷⁵⁾ 북한은 ‘억제’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자주권과 생존권의 위협을 제거’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되, 협상에
 의해 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그 전제조건으로는 자주권 인정, 불가
 침 협약, 경제발전 협조 등 3가지를 강조하였다.

(다)협상 전술 : 시인 전술 및 강경·지연 전술

2002년 북한은 부인(否認)외교 또는 시치미·묵살 외교를 포기하고, 시인
 (是認)외교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
 이즈미 일본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측의 최대 현안인 일인 납치범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납치된 일본인들 가운데 선별해서 일본을 방문케
 하였다. 또한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상은 켈리 특사 방북시 미국측의 최대 현
 안인 핵개발 의혹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였다. 이 같은 태도들은 북한이 현안들

조항	합의 내용	위반 내용
1 조	경수로발전소 2003년 완공	기초구덩이 판데 불과
2 조	정치·경제관계 정상화	적대정책·경제제재 지속, 「악의 축」으로 공격
3 조	핵무기 불사용 담보	핵선제공격 대상화
4 조	비핵부품(터빈·발전기 등) 납입후, 핵사찰	즉각 사찰 일방 주장

- 75) 켈리 방북직후 북한은 미국 대표단 태도에 대해 ‘심히 오만하고 압력
 적’ 이었다고 비난하면서도, 대미 대화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또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우
 리늄 농축프로그램 시설에 대해 국제사찰허용문제를 검토할 것이며, 미국
 이 협상을 거부하더라도 지미 카터 전대통령 등 명망있는 정계인사들의
 중재를 환영하며, 대화에 의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New York
 Times*, 2002, 11, 3.

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자세를 갖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2002년 9월 켈리 방북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직면하게 되자, 북한은 대미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반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대미 대화의 원칙적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양태를 보임으로써 경쟁전략과 강경전술을 구사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등 군사전략, 미 고위 관리의 북한 관련 발언, 을지포커스렌즈(UFL) 한·미 합동군사연습, 주한미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또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반미 분위기를 고취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6월 24일 한국전쟁 51주년에 즈음하여 20만 명이 참가한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와 반미시위행진을 10년만에 개최하는가 하면,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48주년을 맞아 반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제조건을 단 대화에는 절대 응할 수 없으며, 부시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중지하고, 최소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취했던 수준에 도달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⁷⁶⁾

또한 북한의 대미 입장을 분석하면 우선 북한은 현재 미국에 대해 협상의제의 재설정을 주장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대미 협상에 임하려는 '시간벌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핵문제에 대응하여 경수로건설 지연에 대한 보상을 제기하고,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반MD 및 러시아 입장을 지지

76)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2001년 8월 8일 외무성 대변인의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하고, 재래식군비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함으로써 의제 재설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대화에 임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미 대화 의지는 불변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입장은 미국 테러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북한은 대중·러 관계 긴밀화를 통해 대미 관계 개선과의 균형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미 관계 악화에 대비한 견제 장치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인 일방공습인 외과수술식 선제공격을 당하는 것만은 피하면서, 2004년 11월 미 대선에서 부시행정부의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평가

남북정상회담이후 급진전되던 북·미 관계개선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오히려 다시 근본적으로 대결구도로 돌아가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 중국·러시아는 물론 일본 수상과도 전격적으로 만나는 전방위 정상외교를 추진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대내 제한적 개혁과 대외 개방을 적극 모색하는 신사고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강하게 추진해야 함을 북한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계 패권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파악하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강하게 등장하자, 북한은 체제생존 및 수호차원에서 농축우라늄 핵 개발계획 시인이라는 돌파전략을 과감하게 다시 선택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맞대응·위기관리 전략을 강조하면서, 대미 관계정상화를 협상목표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 하의 미국과 관계개선 및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강경 및 지연전술을 병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북한의 외교정책은 핵무기 개발을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강화적 전갈외교(핵무기 수자가 아직은 미미함)이라 칭할 수 있겠다. 전갈외교는 북한의 유효성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통제성과 정통성 또는 안보적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체제공포적 독사외교 양태를 띠게 되면, 비록 단기적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체제절대강화의 효과를 맛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효성과 연대성 약화로 인해 체제파괴적 살모사외교가 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I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김정일정권 하 북한외교를 크게 유형화시켜 보면, 유혼통치기에는 체제방어적 고슴도치외교를, 국방위원장 1기에는 체제발전적 비둘기외교를 전개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이후에는 체제강화적 전갈외교를 거쳐 현재는 체제강화적 독사외교를 표방하는 한편, 체제도약적 비둘기외교로의 전환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전망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때, 이는 체제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대성 약화와 유효성 저하에 따른 체제파괴적인 살모사외교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과 한반도 전역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의깊은 관찰과 대응이 요청된다.

이 같은 김정일정권 하 북한외교를 목표·전략·수단 순으로 분석·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교목표와 관련하여, 김정일정권은 체제유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었다. '90년 한·소 수교와 '91년 소련붕괴, '92년 한·중수교로 북방삼각관계가 동요하고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은 경제난과 체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유혼통치'(94.7), '붉은기 철학'(95.8), '고난의 행군과 3대진지 강화론'(96.1), '제2의 천리마 대진군운동'(98.3), '강성대국'(98.8),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2001.1)을 선포하며, 공산화통일 보다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정일정권 수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외교 목표에 있어서도 김정일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성과를 살펴볼 때, 비록 서방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수교와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이뤄냄으로써 수교국가의 질과 양에 있어 큰 발전이 있었으나,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지연됨으로써 연대성 제고에 있어 본질적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성 제고에도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전략과 관련하여 90년대 북한외교의 중심고리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북한은 냉전기에는 중국, 소련과 동맹을 맺어 대항함으로써 대미 균형전략을 추구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한·소/한·중 수교 직후)에는 핵무기 개발과 NPT 탈퇴선언으로 돌파전략을 선택하였고,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 이후에는 편승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금창리 핵의혹 압력을 전후하여 8월 30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에 의한 돌파전략을 선택한 후,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냉전시대의 균형(Balancing)전략을 병행하여 안전판을 확보하는 한편, 편승 전략을 지속하여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확보하려는 이중전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1년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북한 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견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정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북한지도부로서는 유효성과 연대성 제고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근본적인 해법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됨을 인식하고, 핵무기개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돌파전략을 선택한 것

으로 평가된다.

외교수단과 관련하여 정리해 볼 때,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협상을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외교 목표와 전략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앞에서 5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북한의 경우 이 모델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카드를 김일성 시대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방어 및 공산화통일을 위한 「안보 모델」차원에서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8년 김정일정권 공식출범 전후에서는 대미 협상을 위한 「협상 모델」차원에서 구사한 것으로, 2001년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 모델」 및 「안보 모델」차원에서 전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2003년 이라크전을 전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보 모델」에 주력하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연료봉 재처리 주장 및 실물 제시 가능성 등 다소 과장되게 강조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 주변국가들의 압력가운데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을 강조하면서 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이 핵무기문제를 「협상 모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무기개발 실태와 관련,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과연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우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낮은 수준의 플루토늄 핵무기 1~2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과거핵무기 개발과정에서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 플루토늄 5~9Kg을 재처리해서 핵탄두를 만들었을 가능성과, 기폭장치 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을 것으로 전제할 평가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도 예상 대비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공표한 대로 재처리를 완료했다면, 11월 현재까지 총 6~7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2004년 9월 경

에는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 처리를 통해 1개를 추출하여 총 7~8개가 되고, 2005년에는 5MW 원자로의 1개뿐만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핵탄두 2~3개를 추출하여 총 10~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010년경에는 중국의 핵능력과 비슷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⁷⁷⁾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곤충인 전갈(scorpion)에서 독수리와 싸울 수 있는 방울뱀(snake)으로 변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핵무장화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지금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거듭 유념해야 한다.

현재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구조적 차원에서 유효성 저하(경제난 심화)와 상황적 차원에서 연대성 약화(외교적 압박증대)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제1차 및 제2차 6자회담에 응하게 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2002년에 선택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4귀생 통어복 필승전략'으로 칭할 수 있는 '특구 개발'사업이 모두 난관에 처함으로써 경제난이 심화되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북한 → 일본 → 한국 및 대만)을 우려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봉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 통해 단·중기적으로 대미관계 개선 및 대중관계 강화로 경제난과 외교난을 해소함으로써 김정일정권 보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 및 철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77) "Fast Facts :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ISIS Fact Sheet* (January 20, 2003), <http://www.isis-online.org/publications/dprk/fastfacts.html>.

그동안 북한은 북·미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김정일정권 및 사회주의체제 보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안(미국의 적대정책 포기⁷⁸)와 북한의 핵계획 포기)과 동시 행동원칙(상호 불안감 해소 및 신뢰 구축)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3자회담(2003.4, 북경)에서 「단계적 패키지」(Step by Step package) 해결을 제안하였고, 6자회담에서 4단계 일괄타결 방안을 제의하였다.⁷⁹⁾

향후 6자회담이 지속될 경우, 북한이 취할 협상행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협상관에 있어, 북한은 협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으로 보는 특수협상관을 지속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성격과 관련하여, 이번 3차 6자회담은 향후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가 김정일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위장협상인 의사(擬似)협상을 벗어나 정권생존 확보를 위한 진의(眞意)협상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선 핵무기개발 포기·후 체제보장을 고수하고 나설 경우, 북한은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대북 경제·정치적 지원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중국의 배려를 의식하여 6자회담에는 임하되 의사협상을 지속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지원이 없고 5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경우, 북한은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78) 북한은 적대시정책 포기의 징표로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외교관계 수립, 타국과의 경제협력 방해안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조선외무성대변인 담화, “6자회담에 임하는 원칙적립장 (2003.8.16.).

79) 「연합뉴스」, 2003.6.27.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 시위를 단행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3차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버티기 전략(Muddling-through strategy)을 취하면서, 협상의 주도권과 실리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을 밀어부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에 의한 협상 거부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여 상호거부권 보유의 균형(均衡)협상이 되도록 애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중요(重要)협상임을 주지시키려 할 것이다.

협상전략으로, 북한은 협상상황에 따라 혼합전략(Mixed strategy)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3차 6자회담이 개최되기 직전까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전략(Contending strategy)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대응전략(TFT strategy)을 당분간 구사하되, 3차 6자회담이 본격 진행될 경우, 초기에 그리트전략(Gradual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strategy)과 문제해결 전략(problem solving strategy)을 선택할 것이며, 협상막바지 국면에 유효성·연대성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실리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양보전략(yielding strategy)도 과감하게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전술로는, 제3차 6자회담 개최 전까지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강조하는 흥정전술(Bargaining tactics) 가운데 위협·위압을 사용하는 공격적 전술(Aggressive tactics)과 타협·보상을 강조하는 비공격적 전술(Non-aggressive tactics)을 병행할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면 설득하려는 논쟁전술(Debate

tactics)을 구사할 것이며, 초기에는 협상의제와 관련한 협상구조 논쟁전술(Structural debate tactic)을 펼쳐 북한의 협상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되, 점차 경쟁적 논쟁(Competitive debate tactic)과 문제해결 논쟁(Joint problem solving debate tactic)으로 전환하여 최대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미국이 경제제재 해제와 정권안보를 문서에 의해 보장할 뿐 아니라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확신할 때, 양보 전략(Yielding strategy)을 대담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는 여전히 카드를 최대한 세분화시켜 단계적으로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야금야금(Salami Slicing)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재래식 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 의제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완강히 버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

I. 서론

김정일 정권 10년간¹⁾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전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북한은 이념과 당,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이념의 붕괴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진단하였으며, 이념의 강화를 책임지는 당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특히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며 군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대내정책의 일관성과 달리, 북한은 대외정책 및 대남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3-1994년 북핵위기시 북한은 소위 ‘통미봉남’ 정책하에 미국과의 교섭에 전념하면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외국의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1998년 김정일의 공식승계 이후 서방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남한과의 당국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미

1) 본 고에서 ‘김정일정권 10년,’ ‘남북관계 10년’의 기간은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200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으나, ‘악의 축’ 발언 등 부시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오히려 악화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최근 핵위기의 와중에서는 ‘민족공조’론을 들고 나오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남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본 고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 10년간 북한의 대남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북한의 ‘민족공조’론 논조 변화를 분석하고,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남북관계 10년을 평가한 후,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남정책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민족공조 논조의 시기별 변화

김정일은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가 같은 사람들의 집단으로, 같은 지역에서 살아도 핏줄과 언어가 다르면 민족이라 할 수 없고, 해외에서 살아도 동포들은 다 같은 조선민족이라고 말하였다.²⁾ 북한의 ‘민족공조’론의 기원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민족대단결’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10년 ‘민족’에 대한 북한의 논조는 시기별로 변화되어 왔다.

2) 스탈린이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통성, 문화생활의 공통성 등 4가지를 민족의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김정일은 반박하였다. 김정일,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화, 1960.10.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 체제수호와 공식 승계, 1994-1998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김정일이 공식승계하는 1998년까지 북한의 ‘민족’은 과거의 ‘민족대단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즉, 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통일방안의 3대원칙의 하나로서 ‘민족대단결’론을 제시한 이래,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1993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등에서 ‘민족대단결’론을 유지하여 왔다.

‘민족대단결’론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는 논문에서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주창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고수와 통일위업 완수를 강조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대단결은 “민족전체가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단지 1990년 이전에는 통일 3대원칙의 하나로서 거론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내용”으로서 북한의 대남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준거개념으로 사용되었다³⁾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민족’에 대한 강조는 더욱 강화되었음을 1997년부터 연이어 나온 김정일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김태일·전상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3-04.

1997년 6월 19일 발표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체제위기의 현실을 감안, 계급문제 해결보다 민족성을 부각하면서 민족주의가 체제의 중요한 이념적 좌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체제수호와 공식승계의 명분축적을 위해 강경일변도의 대남공세 대신 민족주의 기치아래 대남정책을 다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8월 4일 발표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세칭 「8·4노작」)에서 김정일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일성의 통일노선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건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대외관계 개선을 주장하였다. 즉 남한에게는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4월 18일 “온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세칭 「4·18서한」)은 「8·4노작」을 통해 언급된 김일성의 1948년 연석회의 주도 내용을 보다 정교화시켰다. 「4·18서한」에서 김정일은 「민족대단결 5대방침」 제시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3원칙에 대응하고, 김정일의 통일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였다. 5대방침은 민족자주, 애국애족, 남북관계 개선, 반외세, 내왕·접촉·대화·연합 강화이었다. 비록 「5대방침」이 조건부 대남유화정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

의 논문과 한가지 다른 점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대신,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폐지”라는 간접적 표현방법을 구사하였다.

요컨대 북한이 「10대강령」과 「5대방침」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맥락에서 이며, 반미·반정부 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세적 의미의 통일전략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체제위기 속에서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실리 추구, 1998-2002

1998년 김정일의 공식승계 이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 속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는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계기로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즉 시급히 필요한 식량과 외화의 획득을 위해 기존의 전투적인 대남전략보다는 유연한 대남전략을 전개하여왔다.

‘민족대단결’ 역시 통일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반외세적·반정부적인 것이었으나, 통일전선전술의 개념을 확대하여 남한 자본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의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편승하여 실리차원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대북 비료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회담(1998.4.11-4.17)의 수용과 금강산관광사업 시작을 시작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남한정부에 대한 불신과 서해교전 등으로 북한의 태도변화가 대남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마침내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감한 대외관계 확대에 나서고 남한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메시지 및 현금제공에 고무되어 남북관계개선에 나서게 되었다.

2000년 남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5개항의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자주적 통일, 남북한 통일방안의 유사성 인정, 당국간 대화 개최, 남북경제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김정일 답방 등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민족자주통일선언으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것을 온세상에 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강조하였다.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통일의 방법과 형태 및 남북협력에 대한 당국간 공조의 가능성을 열었다.

2001년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긴장되면서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공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3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강경발언을 한 것 등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북한이 화합하여 통일하려는 것을 달가워하진 않는 미국의 ‘반통일정책’으로 규정하고, 남북, 해외 전 체동포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⁴⁾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민족공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2002년 2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문제와 테러

4) 『평양방송』 2001. 4. 3; 4. 19.

문제 등에 대한 한미협력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국제 공조에 대하여 반발하였다.⁵⁾

3. 핵위기 돌파, 2002 - 현재

2002년 핵위기 이후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보다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민족공조가 남북통일의 맥락과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해서, 핵위기 이후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미를 위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북핵 위기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아닌, 미국과 ‘조선 민족’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반미·반전을 위한 민족공조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선군정치와 우리민족제일주의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2004.1.19)에서 “올해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민족제일주의 고취, 미국의 민족 이간 책동에 맞서 민족공조 실현,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반미성전, 6·15 공동선언의 철저 구현, 선군정치 지지 등 5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또한 남한 당국과 정치인에게 ‘민족공조의 길’에 들어설 것을 촉구하

5)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테러 전쟁에 동맹국으로서 가능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관계를 기존의 대북 공조 뿐 아니라 테러문제 등 범지구적인 차원에서까지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인터넷 연합뉴스』 2002. 2. 20 (2004.2.26 검색).

는 등 공조의 대상에 남한정부를 포함시킴으로써 과거 통일전선전술과 차별성을 보였다. 13차 남북장관급회담(2004.2.3-6)에서 한국이 ‘우리 민족끼리’이념을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보도문에 삽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의 김영성단장은 ‘민족공조에서 기본은 책임있는 당국자 사이의 공조’이며, 당국 공조를 높은 단계로 이끔으로써 민간급 공조를 추동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조의 주요 과제로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측 입장 지지와 남북경제협력을 남북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킬 것을 지적하였다.

요컨대,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당국간의 공조까지도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노골적으로 한국의 반미를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으로 규정하고, 정상회담부터 줄곧 미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미 이간을 부추기고 있다. 남한의 탄핵사태 역시 친미보수세력이 한 일이며 미국이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미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Ⅲ. 김정일 정권 10년 남북관계 실태와 평가

1. 분야별 남북관계 실태

김정일 시대 10년의 대남관계는 동결상태에서 시작되었다. 1993-1994년 북핵위기가시 북한은 소위 ‘통미봉남’ 정책 하에 미국과의 교섭에 전념하면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김

일성 사후 조문과동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는 1995년 15만 톤의 대북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말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헌법개정 및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는 지속되었으며, 1999년 서해교전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비정부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출범하는 등 부분적 진전을 보이던 남북관계는 2000년 정상회담으로 극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다양한 후속회담이 개최되고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4년 2월까지 총 13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성사되어,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당국간 회담이 정례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두차례(2000년 9월과 2001년 4월)의 특사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남북 국방장관회담, 남북군사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등이 이어졌다.

남북경협 역시 정상회담에 힘입어, 2000년에는 대북 비료지원, 위탁가공교역 확대 등에 따라 4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3년에는 거래성 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비거래성 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지원 등으로 7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부터 2003년 말까지 총 9억달러의 지원이 이루어졌다.⁶⁾ 남한정부 차원의 지원분야는 긴급구호성 식량

6) 정부 차원에서는 6억 2천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민간 차원에서는 2억 8천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지원과 병행하여 1999년부터는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비료지원도 이루어졌다.⁷⁾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철책과 지뢰가 없는 지역이 탄생하였으며, 금년 중 철도와 도로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1998년 이전에는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이 간혹 이루어졌고 직접 상봉은 제3국에서 일년에 10여차례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1998년 이후 정부차원에서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003년 9월까지 8차에 걸쳐 8,051명의 가족과 친척들이 상봉하였다. 한편 항구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은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제의하였으며, 면회소 설치 장소문제는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마침내 면회소 설치에 합의하였다. 동부지역에는 금강산지역에 설치하고 서부지역에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설치키로 하였고, 남북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차례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금강산 지역 면회소 부지 선정, 규모, 착공식, 면회소 설치를 위한 건설단 구성 등에 합의하였다.⁸⁾

7)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지원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업분야,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긴급구호에서 점차 지속적 협력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지원방식은 정부차원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부터 대북 직접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8)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었느냐는 2003년도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서 '이산가족상봉'이 48.1%를 차지함으로써 '남북정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 역시 1998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다. 1997년 1천 명 수준이던 방북자수가 1998년 3천명을 넘어섰고, 2003년 1만 5천명을 넘어설때까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인원은 2003년 말 까지 총 1,283항차 592,221명(외국인 등 1,802명 포함)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1999년 이전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나, 1999년 62명이 방문한 데 이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0년 706명, 2001년 191명, 2002년 1,052명, 2003년 1,023명이 방문하였다. 특히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시 북한 ‘여자응원단’이 대거 참석, 남한주민의 이목을 집중케 하였다.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 방북을 계기로 언론·방송분야 교류는 급물살을 탔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2000년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평양교예단」,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8.18-24), 「금강산 가극단」 등의 서울 공연과 「춘향전」 평양공연이 있었고, 체육 분야에서는 2000년 「제1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 금강산 개최, 「통일탁구대회」 평양 개최,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9.15), 「전국체전 성화」 금강산 채화(10.1) 등이 있었다. 비정부 차원의 민간단체 행사도 매우 활성화되어, 2000년 10월 민간단체의 「노동당창건행사」 참관 이후 농민, 청년학생, 여성단체 등의 대규모 남북공동행사를 통한 남북주민간 접촉 및 부문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상회담(23.9%)과 ‘금강산관광(10%)’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가

김정일 정권 10년간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남북관계의 외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운 점을 남겼다.

가. 군사적 긴장완화 미진

첫째, 지난 10년간 북한은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대남접촉에도 불구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접촉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2000년 6월 개최된 정상회담 당시에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논의는 되었지만 북한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를 감축하는 데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한은 전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경의선 철도복원과 도로건설을 위한 제한된 협의만 하였다.

북한은 남북간에 군사회담을 하더라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남북간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이유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이유는 경제협력 문제는 남한과 풀어나가되 군사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북한의 협상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두차례 서해도발 및 핵 개발은 우리 국민들의 인보불안감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⁹⁾ 특히,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은 당시 진행 중이던

월드컵 행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음은 물론,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젖어만 있던 많은 국민들의 대북 경계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북한정권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답변(57.7% 대 58.6%)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38.9% 대 38.8%)이 1998년과 2003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매우 높다(8.8%),’ ‘다소 높다(42.3%),’ ‘별로 없다(30.1%),’ ‘거의 없다(17.1%)’라는 대답이 나오는 등 50% 이상이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남남 갈등

북한이 의도하였던 하지 않았던, 북한의 대남 관계는 남한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에서 많은 진전을 가져왔지

-
- 9) 남북한간에는 군비통제와 군축을 위한 많은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의지만 있다면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군축에 대한 주요 원칙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협의하고 이행할 기구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또한 남북한은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와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인사 교류와 정보교환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의 단계적 군축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전성훈, “안보의식,” 최진옥 외, 『남북관계진전과 국내적 영향』 (통일연구원, 2003), pp. 165-168.

만, ‘대북 불법송금’ 이나 ‘퍼주기론’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60% 내지 65% 정도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계층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¹⁰⁾ 여론조사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에 안주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는 정치적 논쟁 속에 빠져 실종되었다. 국민설득 작업을 소홀히 하였으며, 보수적 시각을 표명하면 ‘반통일세력’으로 치부 이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갈등이 확대되어 갔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을 ‘4·13총선’ 직전인 4월 10일 발표함으로써 통일문제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의혹을 받았고 총선결과는 ‘여소야대’로 나타났다.

10) 포괄적 내용의 정책은 다수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정책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수의 하위 내용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지지하여 합의를 이룬 구성원내에서도 일부는 모든 내용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몇 가지의 내용만을, 또 다른 일부는 극소수의 내용만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똑같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지지하는 열정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생각에서의 합의가 반드시 행동에서의 합의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곧 어떤 생각에 동의한다 해서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실행에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떤 정책에서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런 합의내에서조차 많은 개인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북한과 화해협력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나 지원하는 조건이나 방식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때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쟁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에서 부분적으로 합의가 깨어지기도 한다. 때때로 합의는 매우 포괄적일 수도 있고 또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그 참여자의 일부 혹은 많은 부분이 이탈할 수도 있다. 이교덕, “합의기반조성방향,”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p. 255.

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 미흡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하였는가 하는 데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남한의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대남 적화정책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대남 적화와 관련된 노동당규약 전문이 수정되지 않았고, 2회에 걸친 ‘서해도발’은 이러한 비난을 합리화시켜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교류협력이 북한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남한의 변화에 비해 북한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보다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이 남북 교류의 본질이며, 북한주민은 제한된 사람들만이 남한의 방북인사를 영접함으로써, 일반주민과의 접촉은 불가능하였다.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총 37,572명(연평균 약 7,514명)의 남한주민이 북한을 방문한 데 비해, 2,011명(연평균 약 402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남한주민들의 방북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방북단들이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미국과 남한의 보수진영을 비난하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자중지란을 보이기도 하였다.

Ⅳ.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전망

1. 북핵 위기의 배경

북한체제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탈북자의 증가, 탈북자의 왕래 등으로 인한 외부 사조 유입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증대하여 왔다. 여기에 당·정일군들의 부패와 핵위기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은 북한체제의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억압체제, 외부와의 단절, 계급정책에 의한 인사로 인한 지도부의 응집력, 반외세 증오 등으로 북한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개혁·개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시도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개혁이란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과감한 기득권의 포기과 다른 부분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북한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희생을 할 용의가 있는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예컨대, 당적 지배, 국가 계획경제, 성분에 입각한 인사제도, 물자배분, 지역별 자립체제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등은 모두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북한은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체제를 관리·운영하여 왔으며, 이러한 원칙에 대한 변화 조짐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개혁은 수령제의 포기과 법치주의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일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성공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권안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혁·개방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근본적인 개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강성대국'을 앞세우며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왔다. 일본의 배상금이 경제회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배상금은 대부분 현금도 아니고 지급되는 데는 10-15년 정도가 소요된다. 더욱이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딜레마이다.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보존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대중·러관계 복원, 대서방외교관계 확대, 대남관계 개선, 대일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무엇보다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난, 외교적 고립, 안보불안 등 총체적 위기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대미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은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여 왔다. 핵이 없는 북한은 주변국 누구도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국제적 미아’로 전락하고, 남한으로부터 흡수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북한 지도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한은 대미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것이며, 안전을 보장받을 장치가 없다고 믿고 있다.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안전보장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핵무기 보유의 양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남북관계 전망과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

가. 전망

향후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북핵 위기의 해결 방법과 북·미관계

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를 철저히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켰다. 2001년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장관급 회담을 돌연 중단하면서 남북관계를 동결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불변인 상태에서 2001년 9월 이후 장관급 회담에 응하였고, 2002년 4월 특사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복원을 결정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남북 대화가 어렵다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인다.

향후 북·미관계는 소강상태, 악화, 진전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현재와 같이 6자회담이 계속되는 등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으나, 북핵 위기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남한의 의도와 경제지원이라는 실리 및 민족공조의 명분을 추구하는 북한의 의도가 맞물려 남북관계는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분야는 북·미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이 고수될 것이다.

두 번째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이다. 핵문제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선택적 제재, 경제제재 확대, 외교·군사적 압박의 순으로 북한을 압박하려 할 것이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등 PSI 참가국을 확대하여 대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제재의 효과를 노릴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마약, 위조지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남한으로부터의 주요 돈을 봉쇄하

기 위하여 남한의 협조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남북경협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민간단체의 방북,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 내지 연기될 것이다. 인도적 지원도 최소화될 것이다. 대북 압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남북관계는 정치·군사·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긴장상태에 빠질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경우이다.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북·미관계가 개선의 궤도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1993-1994 핵위기시에도 핵문제가 돌출되고 제네바합의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 영향력을 배제하고, 핵포기를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김정일 정권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받는 것이다. 이는 곧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고자 미국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이며, 남북관계는 새로운 유형의 경쟁관계에 돌입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경제회생이 가능해진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교류의 효용성은 감소될 수도 있다. 북한은 오히려 공세적으로 통일문제를 주 이슈로 제기할 수 있으며, 북·미관계 진전 후에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요 이슈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간교류에 나설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미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개혁·개방 보다는 군사력을 통해서 경제지원을 받고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하여 왔다. 북한의 핵협상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

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쉽사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 핵 없는 북한은 국제적 미아라고 북한의 지도부는 믿고 있다. 남북경협이나 외국과의 경협, 경제지원도 북한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 남북관계가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주변환경이 안정과 평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화해의 분위기를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

북·미관계의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관계 개선 노력은 다목적용으로 보인다. 우선 식량과 비료 등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은 북한에게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하여 통일지도자로서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북한의 적극적 대남 접근은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핵위기 속에서 북한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유지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분단체제에서 일방이 타방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거나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 수립의 당위성을 ‘남조선 해방’에서 찾고 있는 북한에게 이러한 목표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김정일의 확고한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강력한 정치지도자로서 남조선 혁명의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세계사적 변화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목표달성에 난관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술적 변화를 보여 왔다. 즉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과거와 같은 군사적 방법은 역부족임을 알고 있으며, 남한에 대한 물질적 열세와 한미동맹체제라는 장벽을 돌파하기 위하여, 남한에 대한 정신적·이념적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앞세워 미국과 맞서는 ‘주체의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남한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 갈등 및 보수진영의 약화이다. 핵개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게 남북관계의 진전은 가장 중요한 외교적·경제적 지렛대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남북관계의 개선은 경제적 지원획득과 대미 협상력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남한내 보수파의 세력 약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향후 남한내 선거 및 정치행사 등을 통해 남한내 보수파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각종 스포츠, 문화예술 축전 등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통일의 열기 속에서 남한내 보수진영을 친미사대주의·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여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교류사업을 통한 선전선동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북한은 지난 몇 년간의 교류협력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미녀 응원단’ 등 남한 방문단을 통해 남한사람들에게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의 열정’을 느끼게 하며, 방북인사들에게는 친절과 교양사업 등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에도 불구하고 남한사람과 접촉하는 북한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대부분 대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남한의 일부 방북인사들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친북발언과 반미발언, 남한의 보수층에 대한 비판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안내원들은 방북인사들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면서도 이전의 방북단에 대하여 비판을 함으로써 남한의 방문단간 이간을 노리고 있다.

2003년 5월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1998년과 비교할 때 2003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지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1998년 37.2%에서 2003년 52.5%로 증가한 반면, ‘경계’와 ‘적대적’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은 54.4%에서 39.7%로 크게 줄었다. 북한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붕괴’하거나 ‘그럭저럭 생존’할 것)이 1998년 89.2%에서 2003년 54.6%로 줄어든 반면에 ‘개방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은 4.7%에서 42.3%로 높아졌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하여도 ‘핵무기 보유’(11.2%)보다는 대미협상력의 제고(40.4%)와 ‘체제위기극복수단’(45.5%)이란 해석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셋째, 북한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크고 작은 방북단으로부터 공식·비공식 경비 이외에 뒷돈은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장관급 회담은 핵문제나 정치문제와 같은 본질적 토의 보다는 식량·비료 등 대북지원 협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한·미갈등을 조장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가상 적으로 상정하는 한미동맹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한 후에,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작년 6월 주한미군이 110억 달러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을 밝히는데 대하여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라고 맹비난하였다. 북·미갈등의 와중에서 한국에게 ‘민족적’ 입장에서 분명한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V. 결 론: 대북정책 추진 방향

김정일 10년의 대북정책은 전술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북한을 상대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북인식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경제적 파탄과 남북의 국력격차를 주목하며, 현 북한의 지도부를 개혁지향적인 집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주변환경이 우호적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개혁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북한정권과 지도자의 부도덕성과 호전성 등 부정적 측면이 과소평가되면서 남한 내 정서적 혼란과 한·미간 정책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

대, 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지도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 지도부의 개혁의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북한의 변화 지체나 약속 불이행이 곧 우리의 정책실패로 직결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북 협상 명분과 품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강자의 아량’ 혹은 ‘큰형님 론’ 등 비외교적이고 감상적인 접근이었으며, 남북관계를 열어가기 위해 북한과의 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¹¹⁾ 대북포용정책의 주요 논리요소 중의 하나가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미 북한은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북한 변화’의 증거를 발견하고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전개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이 대북정책의 실패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를 과소평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자체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마찰을 최소화하고 더 빨리 진전시켜야 한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대북정책에서는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조급증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북 비밀 송금도 바로 조급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핵문제는 핵비확산 규범에 저촉되는 국제적인 사안임과 동시에 한국의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11) 박형중, “여론조사결과와 실제갈등 양상간의 괴리,” 최진욱 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대한 안보 사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북협상에 있어서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압박 수단을 포기하기 보다는 북핵 포기의 유도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정책에서 국민적 합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남북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남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 확대, 정책추진의 투명성 제고, 초당적 협력, 통일교육 강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이 군사대화를 조속히 그리고 진지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관계개선이 되어야 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통념이었으나, 남북한 긴장의 핵심은 결국 군사적 대치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진정한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반세기의 남북 분단사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전망하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 보이며, 이는 특히 핵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이 체제위기의 가장 현실적 극복방안으로서 보다 과감한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에 임하고자 결정할 때, 비로소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라는 교류협력의 목표에 충실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남

한내 갈등을 감수하고도 추진해야할 대북정책은 없으며, 북한문제로 인한 한미갈등이 초래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1회의 토 론

◆ 사 회: 강성윤(동국대)

◆ 발 표:

- ◎ 『김정일 정권 하 정치군사체제』…………정영태
- ◎ 『김정일 정권 하 북한외교』…………허문영
- ◎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최진욱

◆ 토 론:

- ◎ 유호열(고려대학교)
- ◎ 강원식(관동대학교)
- ◎ 홍용표(한양대학교)

토 론

유호열(고려대)

- 선군정치가 일종의 체제 수호·보위 혹은 정권이양기의 과도적 특징을 뜻하며, 정박사님 분석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해서 강화될 것이라면, 과연 북한에서 군의 역할 및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선군정치를 통한 군의 실체에 대한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군부가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과도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하게 되고 김정일이 타협의 산물로서 선군정치를 등장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충된 견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 논문의 내용 중에 혼선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당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중앙당의 속성상 절대권력자에 대한 견제의 차원에서 당이 오히려 군을 키운다고 분석되고 있다.

- 실제로 선군정치 10년 동안 북한의 구체적 경제, 외교, 대남 등의 정책과 선군정치의 상관성,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체제유지·보수적 특징을 갖고 있는 군이 과연 향후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원식(관동대)

-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두 가지 국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과연 그 두 가지 목표가 상호 병립할 수 있는 성격인지 의문이 든다. 체제유지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특징을 가지는 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시기에는 체제 발전의 방도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였으며, 현재는 체제 유지의 차원에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 외교의 유형화 부분에서 김정일 시대의 외교 목표를 체제 방어적 '고슴도치 외교'에서 체제 발전적 '비둘기 외교', 체제 강화적 '전갈 외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과연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라는 목표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외교가 여우에서 고슴도치, 비둘기, 전갈, 독사, 살모사 등으로 변화가 능수능란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진면목은 무엇인지?

- 전체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북한의 외교 과정이 ‘고슴도치-비둘기-전갈’ 유형으로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 결국 북한외교가 국가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뜻하는 것인가?

홍용표(한양대)

-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취급해왔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견해에는 사실 그 이전부터도 북한은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를 보다 중요시해왔다고 본다. 이는 우리측의 입장에서 한미공조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점으로 연결된다.
- 한미공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민족공조의 당위성도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민족공조에 무게를 두고 정책에 임해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올바른 대북정책과 바람직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양자 혼합이라는 애매한 대안이 아닌, 최소한 어느 쪽에 상대적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셨으면 한다.
- 그간 남북간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져 교류·협력이 증진되고 남북간 긴장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적 대화가 미진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지 못했다. 북한측이 군사대화

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대화를 요구할시 북측이 대화 중단을 선언할 우려가 크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군사대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중단을 우려하여 계속해서 지금의 대화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 논문에서 제시한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미관계의 소강·발전·악화 중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남북대화가 긍정적인 발전보다는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 봤을 때,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평화적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실제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대북 공격가능성에 불필요하게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 수립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태(통일연구원)

- 실질적으로 북한의 정권 권력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 김일성 시대의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

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당이란, 당중앙위원회의 당임. 전반적으로 일반사회에서 당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난으로 인해 그 권위를 잃었다고 보여진다. 중앙당으로서의 역할은 완화되는 반면, 군대 자체에 있는 당의 역할과 위상은 높아졌다. 군대는 내부의 당을 비롯한 모든 조직이 그래도 가장 충성적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당이라는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정치가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분야 중에서 군대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체적 차원에서 군이 중시되고 있다.

-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 군부는 보수적이면서 충성집단이다. 따라서 군이 새로운 독립적 권력으로서 등장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협상한 결과로서 선군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김정일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장 가까이 두면서, 동시에 군조직·정치조직·보위조직들 사이의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권구축기와 정권공고화 과정에 있어서는 권력자가 군을 활용하나 정권안정화에 들어서면 서서히 군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군이 본연의 지위로 돌아가게끔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허문영(통일연구원)

- 북한의 '공산화 통일'과 '사회주의체제 유지'라는 양대 목표에 있어서 목표 자체의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3대혁명역량(북조선 사회주의 혁명 역량, 남조선 혁명 역량, 국제 혁

명 역량)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 변화가 나온다고 본다. 즉, 목표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목표 비중의 변화에 따라 그 전략이 변화를 가져온다.

최진욱(통일연구원)

- ‘민족공조’를 ‘교류협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류협력과 북한이 얘기하는 민족공조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중 택일하라고 몰아붙이지만, 이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공조는 반외세적, 배타적인 공조의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북한이 군사대화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민족공조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정종률(중앙경제사회연구소)

- 정영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 주체사상에 있어서 혁명의 주체세력을 노동자, 농민으로 역사발전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선군정치에서 군대가 혁명 주체세력이라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혁명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인가? 이것이 주체사상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영태(통일연구원)

- 주체사상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혁명의 성격에 대한 강조점이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 혁명의 기본과제는 반제국주의 혁명이다. 외세가 집요하게 공격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두철미한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와 달리 혁명의 본질이 대외적·체제적 차원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체세력인 노동자·농민보다는 군이 외세와 맞서 효과적으로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다.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박 형 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1. 서론

북한은 2001년 초두부터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실리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경제관리 및 정책상의 변화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이를 '실리사회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 조치 가운데 2002년 7월을 전후하여 취해졌던 임금 및 물가 인상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설, 6월 조선중앙통신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은 한 권위있는 해석에 따르면 '의미 있는 변화'로 간주되었다.

이 글은 과거 소련·동유럽 및 중국에서 사회주의 경제 개혁의 경험과 역사를 1) 스탈린적 고전체제, 2) 부분개혁체제, 3) 사회주의 상품경제, 4)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4단계에 걸친 변화로 요약한다. 이러한 분류에 기준하여, 북한이 2002년 7월을 전후하여 취한 경제 개혁 조치는 계획경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그 효율성과 재산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부분개혁체제로 파악하면서, 특히 1979-1984년 간의 중국개혁과 비교한다.

이 글은 7월조치의 여러 구성항목 중에서도 특히 '번수입 체계'의 도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이 7월조치의 일부인 제도개

편 조치의 핵심이며, 다른 수반 변화들을 유발시키는 원인적 ‘중심고리’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II.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단계별 유형

돌이켜 볼 때, 사회주의 경제개혁 지향은 시기마다 강약이 있었는데 대략 4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첫 시기는 1950년대 중반으로 사회주의 경제개혁 논의가 태동하지만 실현되지 못한다. 둘째 시기는 1960년대 중반으로 소련·동유럽에서 전반적 개혁 파도가 발생하며, 전향적 개혁 실험이 있었다. 셋째 시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로서 후퇴 및 정체기였다. 1968년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략 이후 1960년대 중반의 개혁 개념은 축소되거나 철회되었다. 1970년대의 정체기를 거쳐 1970년대 후반에 위축되고 보수적 경향의 개혁이 재추진되었다. 넷째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사회주의권 개혁 동향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1989-1991년 소련·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가 붕괴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개혁’은 종료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2004년까지도 명목상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우산 아래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¹⁾

1)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역사는 W. Brus, *Geschichte der Wirtschaftspolitik in Osteuropa* (Köln: Bund Verlag, 1987); R. Schlütter (Hrsg.), *Wirtschaftsreformen im Ostblock in den 80er Jahren*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1988); G. Schöpflin, *Politics in Eastern Europe* (London: Blackwell, 1993).

이러한 개혁 경험을 종합해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스탈린적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 → 부분 분권화된 중앙집권 명령경제체제(부분개혁체제) → 사회주의 상품경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의 순서를 밟아 해체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부분개혁체제는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권화하고 상품-화폐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제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는 지령성 계획이 폐지되며, 국영기업이 상업적으로 운영된다. '계획이 폐기된(또는 되어가기 시작하는) 사회주의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국영기업이 주식회사화 등을 통해 비국영화되며, 시장기구가 성숙해 간다. '생산수단이 비국영화된(또는 되어가기 시작하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논쟁의 역사에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경제개혁'이란, 위에서 언급했던 4 단계 중 하나의 경제체제에서 다음 단계의 체제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순차적으로 모든 개혁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으며, 한 국가에서도 전진과 후퇴가 있었다. 각 유형의 주요 특징, 해당 국가와 해당 시기는 아래와 같다.²⁾

2) 이하의 내용은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제』(서울: 해남, 2002), pp. 4-7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국가별 시기별 분류는 다음 서적들에서 해당 서술을 참조했다. J.Kosta, *Wirtschaftssysteme des realen Sozialismus* (Köln: Bund Verlag, 1984); H.Leipold,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systeme im Vergleich* (Stuttgart: Gustav Fischer Verlag, 1988); Hubert Gabrisch e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London: Westview Press, 1988); H. Conert, *Die Ökonomie des unmöglichen Sozialismus*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1990); J. Adam, *Economic Reforms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since the 1960s*

▲ 스탈린적 고전체제

-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경제. 매우 세부적인 계획명령체제
- 경제는 수직위계에 따라 부문별로 관리된다.
- 국가는 지방정부, 기업의 모든 경제 잉여를 중앙에 집중 후, 재분배한다.
- 사례: 1950년대 모든 사회주의 국가, 북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대부분의 시기

▲ 부분개혁체제

- 기본방향: 집권적 계획체제의 기본구조 내에서 국영기업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한다.
- 연합기업소의 설치: 중앙정부와 말단 기업간에 중간관리단위로서 업종별 또는 지역단위로 대형종합기업인 연합기업소를 만들고 의사결정 및 재정상의 권위와 자율권을 부여한다.
- 계획경제를 전제로 효율성·채산성 중시: 계획명령체제를 단순화하고 채산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수정한다. 국영기업 경영에서 '상대적 자율성'이 높아진다. 국가 계획 달성을 전제로 판매량과 이윤을 강조하며, 이윤의 일부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보너스로 사용한다. 기업의 고정자산 및 유동자금 사용에 대한 재정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화폐와 금융의 역할이 상승한다

(London: Macmillan Press, 1989); D. Nohlen ed., *Sozialistische Systeme* (München: R.Piper, 1986); A. Zimbalist, *H.Sherman and S.Brown, Comparing Economic Systems* (New York: H.B.J. Pub., 1989);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러시아소련독립국가연합의 구조와 전망」 (서울: 열린책들, 1992); 박광작, “동독의 『신경제체제』(1963~1971)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2002)의 비교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2003년 3월; 권윤, “베트남의 개혁·개방모델의 특징과 시사점”(2004).

(‘사회주의적 화폐금융관계의 활용’론).

- 표준적 사례: 동독(1963-1970), 소련(1965-1970), 폴란드(1973-1982).
- 보수적 사례: 소련·동유럽에서 1960년대의 전향적 개혁은 1970년대에 후퇴하는데, 1970년대 말 보다 보수적 형태로 정착했다. 소련(1979-1986), 동독(1979-1989), 체코슬로바키아(1979-1989), 북한(1984-1985).
- 전향적 사례: 기본개념은 부분개혁체제에 속하나 부분적으로 기업의 계획외 생산을 허용함으로써, 계획체제의 포괄범위를 부분적으로 축소했다. 중국(1979-1984), 베트남(1980-1982), 북한(2002.7-)

▲ 사회주의 상품경제(시장사회주의)

- 기본원칙: 국가의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을 폐기한다. 국가는 경제적 간접적 수단을 통해 국영기업의 경영방향에 영향을 준다. 국영기업으로 이루어진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와 기업의 경영상의 분리추진: 국영기업 지배인은 기업내부 종업원 선거에 의해 선출되거나, 국영기업의 경영 도급에 관한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채용된다. 기업재정이 국가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기업은 완전한 독립채산단위로 변화한다.
- 사경제의 극적인 팽창: 국영기업이 근간을 이루지만, 비국영기업, 사기업 등이 발전하여 국영 기업과 경쟁한다.
- 시장제도의 초기 발전단계: 소유권 및 계약 등에 대한 법체계, 자본시장과 상업 금융 체계가 발생하지만, 미숙하다. 정

부, 기업 등의 행위와 기능은 시장경제와 유사하지만, 정부는 거시경제 운영 능력, 기업 및 노동자는 시장경제 적응 능력이 미숙하다.

- 사례: 헝가리(1968-1987), 폴란드(1982-1989), 중국(1984-1992), 소련(1987-1991), 베트남(1986-1991),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1997.6-),

▲ 사회주의 시장경제

- 기본 원칙: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국가와 기업을 완전히 분리한다.
- 시장제도의 성숙 단계: 주식 시장, 상업은행 제도,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과 보호의 명확화 등 시장경제 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며, 이를 기초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이 시행된다.
- 사례: 헝가리(1987-1989), 중국(1992-), 베트남(1992-현재)

각 유형의 주요 특징, 해당 국가와 시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시켜서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부분개혁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상품경제로의 이행은 질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고전체제와 부분개혁체제는 공히 지령성 계획경제이지만,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히 '(지령성) 계획'없는 '사회주의경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에 진입하면, 국영기업의 행태는 시장경제의 사기업과 유사해지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도 시장경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과 베트남에서만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경제의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의 근본원칙의 하나인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원칙이 해체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사회주의의 유산(공산당의 일당지배 및 경제구조와 습성 등)에 의해 특징지워진 시장경제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개혁 경험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³⁾ 첫째,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개혁의 실행 여부와 경제적 성공 여부는 반드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경제개혁이 지속적 경제성장과 연계되었다.

둘째, 경제개혁은 국가마다 상이한 시기에 상이한 심도와 폭으로 진행되었는데, 공산당 정치적 지배가 공고한 나라일수록 경제개혁은 진척되지 않았다(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공산주의 지배엘리트가 분열되어있고, 대내정치가 불안정했던 나라일수록 개혁이 진척되었다.(폴란드, 헝가리, 중국)

셋째, 지구상에는 국가마다 다종다양한 '시장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유형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동독과 체코처럼, 원래 고도로 발전한 공업국가였고 서유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일수록 서방형의 안정된 시장경제를 조속히

3) 박형중, 『북한의 체제변화와 개혁·개방론: 비교사회주의를 통해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서울: 해남, 2004 근간예정) 참조.

〈표 1〉 사회주의 개혁 단계와 내용, 국가별 해당 시기

유형	스탈린 고전체제	부분개혁 체제	사회주의상품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
계획과 시장	지시형	계획경제	계획과 시장의 혼합경제	시장주도 경제
	초집중, 몰량 중시	분권화, 재산성 중시	계획체계의 폐지와 시장제도의 성장	시장제도의 성숙, 거시경 제정책 능력 향상
정부와 기업의 관계	지령성 계획을 통한 직접 통제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간접 통제	거시경제정책
	정부와 기업 의 경영일체 화	기업경영의 상대적 자율성	정부와 기업의 경영분리	정부와 기업의 소유권 분리
기업 경영 목표	몰량계획 달성	판매수입계획, 이윤계획달성	상업적 이윤증대와 국가요구 이행	시장수요 충족 및 이윤 극대화
국가-기업 -노동자간 수익배분	실적과 보수 연계 미미	기업 보유 이윤 증가, 이윤량 중 심 분배	소유주 국가에 상업적 이윤 을 상당부분 할애 후, 기업, 노동자 간에 분배	시장경제적 조세 및 임 금 체계 성립
중소 사경제	불허	소비재· 봉사업 부문 중소 상공업 허용	합법화 및 장려	사경제는 성장의 엔진
대외개방	폐쇄 경제	대외무역 확대 또는 특구설치	투자 개방 또는 특구 확대	세계경제 통합
농업	집단농장	집단농장 (부분)해체	장기 토지사용권 인정	
소련		1965-1970 1979-	1987-1991	
헝가리			1968-1987	1987-1989
폴란드		1973-	1982-1989	
동독		1963-1970 1979-1989		
체코슬로 바키아		1979-1989	1966-1969	
중국		1979-1984	1984-1992	1992-현재
베트남		1980-1982	1986-1991	1992-현재
북한		1984-1985 2002.7-현재	1997.6-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법례: 부분개혁체제에 관한 연도 표시 중, 이탤릭은 표준형, 정자체는 보수적 유형, 밑줄은 전향적 유형을 나타냄.

수립할 수 있었음에 비해, 서유럽에서 멀어지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의 국가의 경우에는 비서방형 시장경제('마피아 경제,' '정치적 자본주의' 등)가 성립했다. 중국, 베트남에서는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권위주의와 결합한 국가주도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Ⅲ. 2002년 7월조치의 주요 내용

북한은 2000년 말부터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2001년 초부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을 개선완성하며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한다'는 이른바 '실리사회주의'론이 등장했다. 이어 2001년 10월 3일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 문건은 정책방향과 대강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2002년에 7월에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월조치) 및 기타 후속조치가 취해졌다.

김정일의 문건, 북한 및 친북한계의 신문과 잡지, 북한방문자 및 탈북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2년 7월을 전후하여 북한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논리체계와 실무조치 등은 계획경제를 전제로 효율성·채산성을 높이고자하는 부분개혁체제의 테두리 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계획외 생산과 판매 등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것, 소비재 생산과 봉사업 등의 중소상공업의 자율경영을 허용한 것 등은 부분개혁체제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혁은 논리와 조치에 있어서 중국의 1979-1984년, 베트남의 1980-1982년간의 부분개혁체제와 매우 유사하다.

2001년 초부터 2002년 7월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취해진 조치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이 2001년 10월 문건에서 언급한 것들, 둘째, 2002년 7월의 노임 및 물가 인상, 환율 현실화, 셋째, 7월조치 전후로 기업의 계획수행 평가 지표로서 ‘변수입’ 지표 도입, 넷째, 2003년 5월-7월 간 인민생활공채 발행, 다섯째, 2003년 3월 이후 종합시장 개설, 여섯째, 기타 탈북자 증언, 『조선신보』, 한국의 신문에서 보도 또는 예측된 사항들이 있다.⁴⁾

이같은 다른 곳에서는 비교적 주목받지 않은 ‘변수입지표’ 체계의 도입을 핵심으로 놓고 보며,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한다.

1. 김정일 문건의 내용

먼저 김정일이 2001년 10월 문건에서 밝혔고 대부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조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

- 계획지표들을 중앙과 지방, 웃 기관과 아랫 단위에서 합리적

4) 한국의 일부 신문보도에는 법칙성이 발견된다. 첫째, 7월조치 이후 열렸던 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는 ‘획기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보도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그 시점에 새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이며 이 때문에 새로운 상황전개가 예측된다. 셋째, 보도를 보면, 북한경제에 발생하는 모든 제도적 변화나 조치는 그 성격에 관계없이 ‘개혁’ 또는 ‘시장화로 해석되거나, 이와 같은 해석에 불편을 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는다. 결국, 1990년대 이후 일부 신문기사를 종합하면, 북한은 이미 초고도 시장경제에 접어들어 있어야 한다.

5) 이에 관해서, 박형중, 『핵문제 전개 및 내부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3-37.

분담(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 지표만, 그 밖의 지표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지방경제의 계획화의 경우 국가계획위원회는 도별로 종합지표만, 세부지표는 도, 시, 군들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기 생산물의 몇 프로를 자재보장을 위한 물자교류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
- 계획사업에서 질적 지표 계획의 중시(기술경제적 지표 계획, 특히 원가, 이윤 재정계획을 중시, 돈에 의한 재산체계와 재정계획방법 확립),
- 자력갱생 기지들을 점차 정리하며, 공장, 기업소들을 생산을 전문화하는 원칙에서 조직 발전,
-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기업소의 생산활동과 수입분배를 합리적으로,
- 과학기술 중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 남는 노력을 옹게 조직 동원하여 국토건설, 농촌건설, 도시경영부문에서 방대한 일 해제끼기,
- 일을 더 많이 더 잘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높은 대우를 주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평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노동보수와 분배 몫을 정확히 계산,
- 경제생활에서 공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

2. 노임, 물가인상, 인민공채 발행

2002년 7월 북한은 국영부문의 노임 및 물가, 그리고 달러 환율을 농민시장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노임을 평균 18배 인상, 둘째, 식량·생필품 가격, 교통비·집세·전기세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보조를 대폭 삭감하여, 그 가격이 수십~수백 배 인상됨(예: 쌀 550배, 옥수수 400배 등), 셋째, 달러 환율은 2.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 등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⁶⁾

북한은 이밖에도 넷째, 현물 대 현금 물류유통을 제도화⁷⁾했으며, 다섯째,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3달간 400-500억원 규모의 인민공채를 발행했다. 공채발행은 주로 부유층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할당하여 판매되었다. 북한은 공채판매금을 평양시 개진현대화 공사, 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 보수, 토지정리, 객차현대화 등 주요 경제사업에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2002년 7월 이후 2003년도 전반기까지 물가는 또 다시 3-5배, 환율은 6배가량 급등한 후, 2003년도 후반기부터 안정세에 진입했다.⁸⁾

6) 박형중,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정책 - 2002년 7월초지 이후 9월의 ‘국방공업 우선 발전’론의 대두,” 『아세아연구』, 2003년; 강일천·공선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남성욱, “2002년 북한의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3년 하반기; 7월초지를 주로 경제의 화폐화 측면에서 접근한 서술로 윤덕룡,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조명철 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p. 156-185.

7) 『조선신보』, 2004. 2. 25.

8)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통일정세분석 :

3. 변수입 지표의 도입

2002년 7월을 전후하여 북한은 〈변수입〉 지표를 도입했다. 변수입이 북한에게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⁹⁾ 1995년에 발간된 「재정금융사전」에 따르면, 변수입은 “국영농목장을 비롯한 결산분배를 하는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 창조된 이윤과 노동에 의한 분배원천으로 구성되어있다”¹⁰⁾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국영농목장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변수입 체계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변수입 지표의 전면적 도입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계획수행평가 체계가 물량생산 위주에서 재산성위주로 달라졌으며, 기업이 올린 성과 중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국가는 기업에게 현물계획 또는 생산액 계획을 하달하고, 기업은 생산원가가 어떻든 계획이 요구한 현물종류와 양을 생산해야 했다. 또는 요구된 생산액을 달성하면 설령 생산품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되었다. 또한 기업이 올린 이윤 중에서 거의 대부분(개혁 이전 중국의 경우 총이윤 92.7%)¹¹⁾을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변수입 지표의 도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첫 번째

2004-02), p. 9.

9) 변수입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2002년 7월 이후 북한측 서술을 발견하지 못했다.

10)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538.

11) Sukhan Jackson, *Chinese Enterprise Management Reforms in Economic Perspective*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2), pp. 85-86.

특징은, 생산액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입계획과 변수입 계획을 받으며 그 수행정형에 따라 계획실행평가를 진행한다. 변수입이란 “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댄 원가를 공제한 것”¹²⁾ 또는 “총수입에서 원료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감가상각비, 일반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¹³⁾이다. 그 나머지 부분이란 “생산자들의 생활비, 국가기업이득금, 기업소 이득금”¹⁴⁾으로 구성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해 보면,

$$\begin{aligned} \text{변수입} &= \text{총판매수입} - (\text{원가} - \text{생활비}) \\ &= \text{총판매수입} - (\text{원료자재비} + \text{연료 및 동력비} + \text{감가상각비} \\ &\quad + \text{일반비}) \\ &= \text{생활비} + \text{국가기업이득금} + \text{기업소이득금} \end{aligned}$$

여기서의 ‘판매수입’에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입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물지표별 계획에 따르는 판매수입”과 “계획외 수입”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계획외 생산활동과 그로부터의 수입을 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매수입에 계획외 수입도 포함시키면 현물지표별 계획은 무시하고 이윤이 많이 나는 제품에 치우치는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수입 계획수행 평가에서는 현물지표별 계획수행정도를 고려하여

12)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2003년 제 3호, p. 28

13)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제1호, p. 38.

14) 리영근, 위의 책, p. 38.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⁵⁾

변수입 지표 도입의 두 번째 특징은 ‘변수입에 기초하여 노동에 대한 분배’이다. 북한은 문헌에 따르면, 변수입은 국가기업이익금, 기업소이익금, 생활비 등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즉, “국가기업이익금 규모는 기업소제품판매수입실적에 판매수입계획에 의한 국가기업이익금 납부률을 곱하는 방법”을 통해 책정되며, “제품판매수입실적에 따라 월마다 확정(적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것을 기본요구”로 한다.¹⁶⁾ 생활비는 변수입 계획을 얼마나 실행했는가하는 변수입 계획수행률에 따라 결정된다. 즉 생활비 몫은 “중업원 한 사람당 변수입 기준에 변수입 계획실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¹⁷⁾ 이와 같은 계산에 책정된 국가기업이익금과 생활비 총액을 변수입에서 공제하면, 기업소이익금이 남는다.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보았을 때, 이 기업소이익금은 기업의 자체투자, 기업복리후생증진, 보너스 지급 등에 사용되는데, 북한 문헌은 “기업소이익금 분배에서 중요한 것은 축적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하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이도록 하는 것”¹⁸⁾이라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변수입 지표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이밖에도 경우에 따라 상호 상충되는 서술이 발견되는데, 이는 변수입의 분배 방식이 부문별로 기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⁹⁾ 첫째 서술은 “실

15) 오선희, 앞의 책, p. 28.

16) 리영근, 앞의 책, p. 43.

17) 위의 책.

18) 위의 책.

19) 중국의 이윤유보제, 이윤계약제 등의 경우, 기업의 자율경영 능력, 손익 실태, 부문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차별 방식을 통일하게 일원적 조세체계의 이전이 1983년부터 도입된 이개세계

지 벌어들인 수입에서 국가납부와 기업소가 쓸 자금을 확정하고 나머지로 생산자들의 생활비와 장려금, 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⁰⁾고 한다. 군고구마, 군밤 장사를 하는 낙연합작회사의 경우, “나라에 바치는 이득금과 기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를 정하고 그보다 많은 매상고를 달성하면 종업원의 보수에 돌리도록” 했다. 둘째 서술은 단고기를 파는 의암식당의 경우, “매상고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나라에 상납하고 나머지를 종업원의 로임과 식당 운영에 돌리게 된다”²¹⁾고 한다. 셋째 서술은 국가납부와 종업원의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²²⁾

번수입 체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기업소는 자체 자금 수요를 자체자금과 은행대부금으로 충당하며, 감가상각기금도 자체 자금으로 보장하고, 자체자금을 의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또는 기업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해 생산해 낸 생필공산품을 종합시장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²⁴⁾

이다.

20) 오선희, 앞의 책, p. 34.

21) 「조선신보」, 2003.10.15.

22) 「조선신보」, 2003.10.22.

23) 「조선신보」는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낙연합작회사, 전산케이블을 생산하는 3월26일 공장, 단고기를 파는 의암식당, 식당인 평양대극장봉사소 등의 자체 투자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2003. 11. 8; 2003. 10. 15; 2004. 2. 25

24) 「조선신보」, 2003. 12. 22.

4. 종합시장 설치

북한은 2003년 3월부터 농민시장을 국영기업소인 종합시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과거 농민시장을 양성화하는 한편, 매대를 공식대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농산품 이외 공산품 거래도 허용되며, 개별 주민뿐 아니라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판매매대의 5%가 공장·기업소 몫으로 할당되었다. 2003년 북한은 평양에 40여개, 시군별로 1-2개씩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의 종합시장을 조성해 나갔다. 이 종합시장에서는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 지표 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한다.²⁵⁾ 국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능동적’으로 가격을 조절한다는 것,²⁶⁾ 또는 상품가격을 해당 행정단위에서 그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인식된다.²⁷⁾

공장, 기업소들도 계획외 공간에서 시장에 참여할 것이 승인되었다. 먼저, 공장, 기업소들은 필요한 자재를 서로 주고 받고 조달하는 물자교류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10월경부터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시장활동에 적극 참가하라는 방침이 제시되었다.²⁸⁾ 이와 관련, “국가계획에 따르면, 공장, 기업소는 기본제품의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그중 30%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은 <생산유지

25) 「조선신보」, 2003. 12. 22.

26) 「조선신보」, 2003. 11. 9.

27) 「조선신보」, 2003. 6. 28.

28) 「조선신보」, 2003. 10. 22.

비)로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²⁹⁾고 한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경우, 물자교류시장참가 및 생산 제품 시장제공에 의한 수입은 총수입의 2%이하라고 한다.³⁰⁾

5. 무역에 대한 적극적 관념

무역에 대한 관념이 자급자족론의 소극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주장도 발견된다. 『경제연구』의 한 글³¹⁾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다 자체로 해결한다는 것은 경제적이 못되며 따라서 없거나 부족한 것, 실리가 나지 않는 원료와 자재, 기계설비들을 수입무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리치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비물자의 수입에 대한 전향적 태도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 우리 당은 변화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지금의 경공업제품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 실리가 보장되는 것만 자체로 생산하고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올 데 대한 방침을 취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소비품생산에서 독점적 지표를 설정하여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원료, 자재를 사다가 소비품을 생산하여 쓰는 것보다 소비품을 직접 사다 쓰는 것

29) 『조선신보』, 2003. 12. 22.

30) 『조선신보』, 2003. 10. 22.

31) 리명숙, “현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pp. 34-35.

이 유리한 경우에 수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먹는 문제를 빨리 푸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수확우량종자, 영농물자, 콩을 비롯하여 기초식품생산에 필요한 일부 원자재 등은 수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 기타

이밖에도 지방예산편성개편, 지역별수납체계의 부활, 기업 내부당조직 간소화 조치,³²⁾ 일부 지역에서 개인책임생산제 실시, 무역체계 개편, 경영신용은행설립(2003.1)³³⁾ 등이 7월조치 이후 거론되어 왔다.

Ⅳ. 중국 개혁과의 비교

그 내용의 기초와 구체적 조치들로 볼 때,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론과 7월조치는 중국의 1979-1984년간의 개혁 단계와 개념적으로 동류의 것이다. 즉 '부분개혁체계'라는 것이다.

1979-1984년간 중국 경제 개혁은 중앙계획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즉 중앙계획경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되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었

32) 이에 관해 박형중, 「핵문제 전개 및 내부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변화」, pp. 30-37.

33) 조선합영은행과 신탁은행을 합병하여 설립했다고 한다.

다. 구체적으로 중앙집권체제의 분권화 및 인센티브 체계의 개혁을 통해 각 경제 단위에 재정상의 책임성과 생산 증대의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경제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 시기 중국 개혁은, 기업의 계획외 생산을 인정하며, 농가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향진기업을 육성하는 등, 계획체계를 부분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폐기하는 조치도 동반했다.

이 시기 기업경영과 관련한 중국 개혁을 내용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사천성이 설정했던 14개 항목이다.³⁴⁾ 이는 북한의 7월조치 중 기업경영 관련 주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표 2 참조>

<표 2>중국 개혁 초기 사천성 14개항과 북한 7월 조치의 비교

	중국 사천성 14개항	북한의 7월조치
1	기업은 비용절감과 생산발전에 관한 자체 장기 잠정 계획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수립할 수 있다.	계획지표 수립 분권화,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 지표만, 그 밖의 지표는 해당기관, 기업소에서
2	년간 국가계획을 달성한 이후, 기업은 자율적으로 계획의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기업의 하청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자재공급국이 구매하지 않는 물품도 팔 수 있다.	<번수입지표>체계 하에서 공장, 기업소는 국가공급 이외의 남은 능력을 자체로 활용할 수 있음. 계획에 없는 지표도 생산 가능, 실적으로 인정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3	총임금량과 계획 이윤에 의해 기업 보유분의 크기가 결정되도록 기업소 자금체계를 개선시킨다.	번수입(생활비 +이윤)에 따른 분배의 원칙

34) 이 14개항은 1979년 7월 14일 인민일보에 발표되었다. Jackson, *Chinese Enterprise Management Reforms in Economic Perspective*, p. 66.

	중국 사천성 14개항	북한의 7월조치
4	기업의 기술개선과 장비 갱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고정자산 감가상각금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	대보수 자금(감가상각기금)은 기업 자체로 보장, 기업소 자금에 의한 자체 기본건설 확대
5	생산의 변화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기업의 유동 자금 필요량을 재산정한다. 이러한 재산정은 기업의 감독기관인 재정국과 은행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동자금 수요를 기업 자체자금과 은행대부금으로 충당
6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에 따라 임원과 노동자의 물질적 자극을 개선한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노동보수와 분배 몫을 정확히 계산, 생활비 지급에서 도급제 강화
7	기업은 자체로 임원과 노동자의 승진에 관한 평가절차를 세울 수 있다.	20%범위내에서 인원운영 자율권 부여
8	기업은 생산 노동자의 배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	
9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외무역 협상과 수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큰 기업과 지방들에 무역회사를 조직, 국가의 것을 이양 ³⁵⁾ ,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도 필요에 따라 무역성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무역활동을 벌릴 수 있다. 일반상점의 지배인도 외국무역업자와 거래활동할 수 있다. ³⁶⁾
10	기업이 맺을 수 있는 경제적 계약과 거래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의 감독 당국은 국가계획의 “5개 고정항목”을 기업에 보장하여, 기업의 생산을 안정시켜야 한다.	논리상으로 볼 때, 함축되어 있음(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분화, 부업이 가능, 계획외 생산,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11	일반 고용자를 문제해결에 참여시키는 등, 기업 내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장려한다.	언급없음.
12	기업 당위원회는 중하급 간부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13	기업은 내부 행정체제를 자체 상황에 맞게 조직할 수 있다.	
14	기업은 태만한 임원과 노동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 문책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35) 김용술, “북한경제정책설명,”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10호 (2002,10), p. 45.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1979-1984년간 중국 개혁과 북한의 7월조치를 총괄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979-1984년간 중국 경제개혁과 북한 2002년 7월조치의 총괄 비교

	1979-1984년간 중국	북한의 2002년 7월조치
이데올로기	'계획을 위주로 하고 시장조절을 보충으로 한다'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다 ('실리사회주의')
기업 자율성 확대	기업 자율성 확대 (사전성 14개항)	기업 자율성 확대 (계획의 분권화, 계획의 활동 인정,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재정상의 자율성 증대)
국가와 기업 재정관계	이윤중심의 평가체계 (기업기금제, 이윤유보제, 이개세제)	이윤중심 평가체계(번수입지표)
	국가와 기업간의 이윤배분 홍정	국가, 기업, 노동자간에 임금총액과 이윤총액의 배분을 놓고 홍정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각기 (실적에 따라) 나누어 먹는' 재정관리 시스템	지방정권은 국가납부 몫 우선 납부후 자율로 수입과 지출을 맞춘
은행, 금융	유동자금 부족분, 기본건설투자를 은행 용자로 충당	유동자금은 은행용자로, 감가상각 및 기본건설 투자는 기업소 자체 자금으로,
	국채발행(1981) '상업적인' 전문은행 설치(외환전문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등)	인민생활공채 발행 신탁은행신설, 현금 유통 및 대부계획 수립, 변동환율제 실시, 환전소 설치
사적 부문, 특수경제지대	비국영기업(향진기업) 성장 고무	농민시장을 합법화한 종합시장개설, 공장·기업소의 매대 허용
	광동성, 복건성 개방, 4개 경제특구(심수, 주해, 산둥, 허문)	개성, 금강산, 신의주 경제 특구 설치
무역	소수 지방정부 및 (대외경제관계, 무역성에 속하지 않는) 소수 기업에 수출입권 허용, 인민폐 환율 조정	큰 기업과 지방들에 무역회사를 조직, 국가의 것을 이양, 외화벌이 기업의 외화 자체 활용비용 증대 (20%에서 40%로)
농업	농가생산책임제	협동농장 자율치분권 확대, 개인경작 허용 면적을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개인 생산책임제 시범 실시

36) 「조선신보」, 2003. 8. 23.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보면, 북한의 2002년 7월조치는 중국의 1979-1984년간의 개혁조치와 기초와 구조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서 있지만,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이데올로기적 차원: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 '계획경제하에서 시장조절을 채택한다'는 등 시장에 대한 활용과 지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다'는 논리에 입각, 이데올로기상으로 시장의 위상을 높이지 않고 있다.
- 기업의 자율성 확대: 북한의 7월조치는 중국의 <사천성 14개항> 중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자율성에 관해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성의 14개항은 내부의 인사관리, 노무관리, 행정체계 등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상업적 전문은행 설치: 북한은 중국에 비해 뚜렷한 변화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
- 농업 및 비국영기업 육성: 중국이 이 시기의 개혁 추진 중점을 농촌 부문으로 설정하고 농가생산책임제의 도입과 비국영·비사유 기업으로서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향진기업 육성책을 펴으로써, 큰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현재까지 농가생산책임제라든가 비국영·비사유 기업의 적극적 육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기업과 국가의 재정관계: 북한은 번수입 체계, 중국은 이윤유

보제, 이윤계약제, 이개세제 등을 채택했다.

여기서는 세 가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한다. 첫째, 농업 개혁에 관한 문제, 둘째, 비국영기업 육성에 관한 문제, 셋째, 번수입 체계의 성격이다. 농업개혁 문제는 단순해서 먼저 언급한다. 중국은 개혁 초기 농가생산책임제를 실시했는데, 1981년 이후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개별 농가 수입 중에서 국가세수와 집단소유분을 제외한 후, 나머지 잉여를 해당 농가가 자유처분하도록 한 것이었다(包幹到戶). 북한에서는 2002년 7월을 전후, 협동농장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하고, 실적 분배방식에 변화를 주었으며, 토지사용료 및 농자재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개인경작지 면적을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한 탈북자는 2003년부터 “각 농장원에게 일정 토지를 책임 경작하게 한 후, 생산량에 따라 분배량을 달리하는 개인 책임경작제로 변경하였다”고 증언했다.³⁷⁾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역에 한정된 실험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전국화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 2004년까지도 북한의 농업정책 주요 방향은 우량종자 투입, 토지정리, 농업구조 개선 등 실무기술적 측면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비국영중소기업 육성의 문제이다. 중국 개혁의 경우, 비국영기업 육성은 국영기업에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체적 경제효율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이러한 비국영기업 육성은 개혁 첫 단계인 1979-1984년에 특히 효력을 발휘했다. 이에 관한 북한의

37) 박금란 (2004-10)

적극적 언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7월조치 이후 비국영·비사유 중소상공업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7월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7월조치 이후, 주민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생필품 생산과 봉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령성 계획이나 직접적 경영간섭을 받지 않고, 사실상 시장원칙에 준하여 운영하는 비국영·비사유 중소상공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아직 개인소유 사기업은 인정되지 않지만, 지방정부 또는 기관이 운영하는 형태, 또는 협동조합 기업의 형태, 또는 국영기업의 위탁경영 형태 등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7월조치의 수반현상을 '시장화'라고 해석하는 경우, 이 부문이 유발하는 현상들을 주로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또는 친북한 계열 신문보도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정부단위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대동강구에 위치한 단고기 식당인 의암식당처럼, “〈주민밀착형〉의 식당”은 “구역인민위원회 상업부가 관리하는 구역인민위원회와 상업부가 관리하는 〈종합식당〉에 소속되며 원자재의 조달 등은 자체로 해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규모가 작은 〈주민식당〉은 나라에서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여느 식당과 달리 일꾼들이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다. 식당의 매상고에 따라 원자재의 구입도 좌우된다”는 것이다.³⁸⁾ 그 둘은, 협동조합 형태이다. 다음과 같은 보도가 그 근거이다. 즉 “늙어서 사회활동의

38) 「조선신보」, 2003. 10. 15.

일선에서 물러 선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 가내수공업으로 빵을 비롯한 식료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농민시장에서 판매하곤 하였다. 작년 7월 이후 평양시의 각 구역에 이들이 일하는 생산기지를 꾸리고 각 상점들에 생산물을 도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업은 앞서처럼 구역 당국이 관리하는 협동조합기업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 셋은, 위탁경영 형태이다. 평양대극장봉사소의 경우, 대극장 당국이 “필요한 투자와 경영을 맡아할 책임일군을 찾았다”³⁹⁾고 되어 있다. 이 봉사소는 원자재를 ‘현물 대 현금 유통의 원칙’에서 조달하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체 사업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밖에도 앞서 언급했던, 중대형 기업 내의 생필(품생산)직장들, 또는 ‘계획외’ 상품생산 등이 여기의 비국영·비사유 중소상공업과 거의 동일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변수입 체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변수입 체계를 1978-1984년 동안 중국의 여러 시도와 비교함으로써, 변수입 체계

39) 「조선신보」, 2004. 2. 25.

40)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탈북자의 증언을 참고할 수 있다. 즉 “목욕탕 경영을 원하는 사람은 인민위원회 봉사과에 목욕탕 운영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하고, 신청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이 나오게 된다. 신청자는 목욕탕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자신이 투자로 설비를 개수 확장하고 노동자를 채용할 수도 있으며, 수익은 자신의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장 경영의 경우, 투자를 원하는 자는 인민위원회 상업과에 가서 앞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밟아 공장명예지배인으로 등록이 된다. 초기에는 투자자와 국가간에 수익을 3:7로 분배한다. 시간이 흘러 투자자의 수입이 투자금액을 초과할 시점부터는 투자자와 국가간에는 수익을 5:5로 분배한다고 한다.” 이영훈,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시장화에 따른 일상과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창환, 김진방 외, 「위기 후 한국자본주의」(서울: 풀빛, 2004), p. 555에서 재인용.

가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히 밝혀내기로 한다. 개혁 이전, 기업은 자신이 올린 이윤의 92.7%를 국가에 납부했기 때문에, 기업은 실적 증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중국 개혁의 목적 중의 하나는 기업의 실적이 증대할 때, 기업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첫 조치로 1979-1980년 경 이윤유보제가 실시되었다. 이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한 가지 방식에 따르면, 기업은 '계획된 이윤'의 5%, 초과 계획이윤의 10-30%를 자체 보유하여, 복리후생, 보너스 지급, 자체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⁴¹⁾ 또는 1981년부터 일부 시행되었던 '이윤계약제'의 경우, 국가와 기업은 협상을 통해 기업의 국가예산납부금을 정액으로 결정한 후,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20-100%를 기업이 보유하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국영기업이 그 소유주인 국가에게 기업 이윤의 대부분을 납부한다는 개념, 즉 국가이익금의 예산 납부 개념에 의거했으며, 그 납부금액 책정은 부문별, 기업별로 국가와의 개별 협상에 의거했기 때문에 편차가 많았다. 이는 1983년 이개세(利改稅)제 실시와 함께 변화했다. 이개세제는 '이윤납부를 세금납부로 바꾼다'는 뜻이며, 말 그대로, 이윤납부체계가 조세체계로 바뀌었다. 이개세제의 실시와 함께, 중대형 국영기업은 총이윤의 55%를 법인세로 국가에 납부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7-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⁴²⁾

41) Jackson, *Chinese Enterprise Management Reforms in Economic Perspective*, pp. 86-99, p. 90; 개혁관련 논술들에서, 이윤유보제, 이윤계약제 등에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이 총이윤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수처에 대해서는 자료가 드물다.

42) Hui Wang, *The Gradual Revolution: China's Economic Reform Movemen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1994), pp. 85.

북한과 중국에서 개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은 기업수입 중에서 국가납부를 줄이고 자체 사용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에 원가 절약과 판매액 증가 또는 이윤증가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국가, 기업, 노동자 사이에 분배하는 대상인데, 북한에서는 '변수입'이고, 중국에서는 '이윤'이다. 중국과 비교할 때, 북한의 경우가 국가 측에 심히 유리하게 관계설정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 인센티브 효과의 감소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변수입 배분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국가이익납부금의 규모이다. 북한은 “국가기업이득금 규모는 기업소제품판매수입실적에 판매수입계획에 의한 국가기업이득금 납부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책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이 ‘납부율’에 따라 기업소에 납게되는 수입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그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볼 때, 중국의 이윤유보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는 부문별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기업에서 ‘현물지표별 계획달성에 의한 판매수입’의 크기가 ‘계획외 수입’의 크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그런데 ‘현물 국가계획’의 분야에서 자재구입이나 판매가격 등은 국가 가격에 의해 규제될 것이고 이윤이 없더라도 강제적으로 국가지시에 의한 생산이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그 채산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획외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노력을 경주할 가능성이 많지만, 국가가 그에 대해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begin{aligned} \text{총판매수입} &= \text{물적 생산원가} + \text{변수입} \\ &= \text{현물지표별 계획달성에 의한 판매수입} + \text{계획외 수입} \end{aligned}$$

셋째, 변수입 체계는 기업의 손익과 노동자 임금의 증감을 강도있게 연계하는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이윤만을 국가, 기업 사이에 분배 흥정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구상은 사회주의 국가에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1995년에 발간된 북한의 『재정금융사전』도 이와 같은 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계획경제에서 기업의 총이윤은 통상 '계획이윤'과 '계획초과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⁴³⁾ 계획이윤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남기고, 계획초과이윤은 훨씬 높은 비율로 기업에 남긴다는 통례였다. 1978년 이후 중국 개혁의 의미는 기업이 달성한 이윤 중에서 기업에 남겨지는 이윤이 증가하도록, 국가와 기업간에 이윤 분배 비율을 바꾼 것에 한정한다. 중국의 이윤유보제는 계획이윤의 5%, 계획초과이윤의 10-30%를 자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윤 중심 분배방정식 구상과 변수입 중심 분배방정식 구상의 핵심적 차이는 노동자에 대한 기본급 개념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가하는 것이다. 이윤중심 구상은 기본급까지 경직적 비용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즉 [계획이윤 = 판매수입계획 - 판매될 제품의 원가계획]의 도식이다. 계획이윤과 계획초과이윤은 상이한 비율로 국가기업이익금과 기업소기금으로 분배되고, 기업소기금 중의 일부가 노동자에 대한 추가보수인 상금으로 지급되거나, 복리후생에 사용되었다.

43) 『재정금융사전』, pp. 307-308.

$$\begin{aligned}
 \text{총판매수입} &= \text{물적 생산원가} + \text{변수입} \\
 &= \text{물적 생산원가} + \text{생활비} + \text{국가기업이득금} + \\
 &\quad \text{기업소이득금} \\
 &= \text{물적 생산원가} + \text{임금총액} + \text{이윤총액}
 \end{aligned}$$

※ 여기서 ‘물적 생산원가’는 ‘생활비를 뺀 원가’ 즉 (원료자재비 + 연료 및 동력비 + 감가상각비 + 일반비)를 의미한다.

변수입은 기본급을 경직적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발상이다. [변수입 = 총판매수입 - (생산비용 - 로동보수)]이다. 위의 방정식에서 보이듯이, 변수입은 결국 임금총액과 이윤총액의 합이다. ‘이윤’ 중심 체계에서는 이 둘을 별개로 놓고 보는데 대해, 변수입 체계에서는 이를 하나로 보고 국가, 기업, 노동자 사이에 분배 홍정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윤 체계에서는 홍정이 되는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급 자체가 홍정의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납부금의 크기는 변수입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총판매수입의 일정비율이다. 이러면, 국가납부금의 증감율은 기업의 손익의 크기의 증감비율보다는 완화된 증감율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대체로 일정한 크기의 국가납부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총판매수입의 일정 비율을 국가납부액으로 정하고, 이를 ‘변수입’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면, 국가납부액의 크기는 임금기금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만약 기업이 손실을 내면 국가납부액은 그 손실량보다 작은 비율로 감소하며, 다시 말해 대체로 일정 크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변수입에서 공제된다. 그 나머지 부분 중

에서 우선적으로 기업 운영자금이 공제되며, 그 잔여액을 노동자가 다시 나누어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변수입 체계는 노동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부문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윤' 중심 체계에 비하여 아무래도 국가에 더 유리할 것으로 추론된다. 그 이유는 변수입 체계에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이 결국 우선적으로 임금기금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역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은 기업과 노동자에게 국가보다 더 큰 비율로 배당된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손실기업인지 이윤을 내는 기업인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국가가 여전히 상대가격 책정, 임금 수준책정, 일부 사실상 배급제 유지⁴⁵⁾ 등 기업경영 환경이 되는 경제변수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는 어떤 기업의 손익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즉 기업의 손익이 기업 자체의 책임이 아닌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동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특히 중대형 기업의 경우 손실 기업이 많을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중대형 기업보다는 시장관계에 더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인민

44) 또는 손실개념이 다르거나 없다. 기업소의 판매수입이 국가기업이익금과 기업소운영자금의 합 수준이면, 생활비는 전혀 지불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에 부채는 없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의 기본급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으면, 그만큼 기업 부채가 발생한다.

45) 「조선신보」 6월 28일자 보도에는 자랑스럽게 '지금 우리집에서도 나라에서 공급되는 쌀을 먹지, 시장의 비싼 쌀을 사먹을 필요가 없다' 는 언급이 나온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 북한은 한국이 차관으로 공급한 쌀을 Kg당 46원에 주민에게 판매한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2003년 7월 장마당 쌀값은 180원으로 알려졌다. 국영상업망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주민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재와 봉사업 부문의 중소형 상공업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윤’ 중심 체계에서는 기업이 보유하는 이윤량으로 조성되는 기업소 기금이 자체투자, 복리후생, 상금기금 적립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는 임금은 [기본급 + 상금] 체계로 된다. 그러나 변수입 체계에서는 생활비는 ‘종업원 한 사람당 변수입 기준에 변수입 계획실행률을 곱하여’ 단일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소기금의 사용은 자체투자과 복리후생 두 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섯째, 변수입이란 결국 ‘임금총액 + 이윤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물적 생산비용의 저하(이윤율의 증가) 그리고/또는 판매량 증대에 의한 판매수입의 증가(이윤량의 증가)의 두 가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윤’이 핵심연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윤’이라는 개념 사용을 회피하고 ‘변수입’이라는 지표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보인다. 내용상으로는, ‘이윤’이라는 ‘자본주의’적 개념의 사용을 회피하는 한편, 조치의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V. 북한 개혁의 진행 방향

요약하면, 2002년 7월 이후 북한 개혁은 계획경제의 근간을 그대로 두고, 그 효율성과 채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개혁체제이다. 이는 중국의 1979-1984년간 개혁과 기본 개념에서 일치하지만, 미

흡한 점이 있다.

이를 볼 때, 북한의 개혁은 앞으로 계속 진척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것이다. 단중기적으로 1979-1984년 중국 개혁과 비교하여 미비한 조치들을 추가로 취할 것이다. 중장기적(5년?)으로 국가의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을 폐기하고, 시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계획과 시장의 혼합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장기적으로(10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북한이 앞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조치를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면조치〉

- '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금기 완화: 2003년 3월말부터 학술논문, 신문보도 등에서 '시장'을 '사회주의적 유통의 한 형태'라는 등의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비중있는 공개 문서들에서 아직 공식 이데올로기체계에 완전히 통합시켜내었다고 할 수 없다.
- 기업 경영 관련: 계획외 생산부문의 확대 허용, 기업 잔여 이익 확대(번수입 중 국가기업이득금 비율의 감소), 비국영기업 장려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 산업정책: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중대형 국영기업 중 정상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퇴출하여, 자원과 노동력을 방출하고, 그 발생자원을 중소형 수출산업으로 전환한다. 또

한 외부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여 현대화한다.

- 상업적 전문은행의 신설: 7월조치의 여파로 경제활동의 전반적 화폐화가 강화되면, 구래의 국가재정 중심의 금융체계로는 적극적으로 소화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앞으로 상업적 전문은행들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 비국영기업의 경영활동의 적극적인 장려: 국영기업의 계획외 생산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생필품 생산에서 비국영기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기타 농가생산책임제의 도입 등 농업부문에서도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조치〉

개혁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중국의 1984-1992년 사회주의 상품경제 단계의 개혁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97년 6월부터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은 앞으로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전국화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 계획명령의 폐기: 기업관리와 관련,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은 관할기관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즉, 기업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자체로 계획권, 생산권, 판매권, 가격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 자영소기업 허용: 가내봉사업(자영업)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지대 안의 주민들은 자체적 요구와 의사에 따라 급양봉사, 가공 및 수리 봉사, 관계 및 수매 봉사와 같은 가내편의봉사와

간단한 가내수공업, 개인부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도 식량배급제가 폐지되었고, 외국환과 북한원화의 교환비율이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환율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지대에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과 합영기업 등 외자기업이 1997년 중반 현재 56개에 달했으며, 원정교 자유교역시장 등 자유교역시장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북한경제체제의 점진적 진화는 <표 1>에 요약되었던 바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일반적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조치들에서는 지리적 인접성, 동시대성, 경제적 성공 등의 이유로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표 4>의 중국 개혁의 단계별 비교에 나타난 바와 같은 변화는 북한 경제 개혁의 미래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중국 개혁의 단계별 비교

	1979-1984	1984-1992	1992-이후
	부분개혁체제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데올로기	계획을 위주로 하고 시장 조절을 보충으로 한다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경제하에서의 상품경제이다	계획수단보다 시장조절수단은 사회자원을 유효하게 배분할 수 있다
	계획우세	계획과 시장공존	시장 우세
개혁 중점	농촌 (농가생산책임제 및 향진기업 발전)	개혁은 농촌에서 도시로,	재정세무, 금융-은행, 외환관리, 국영기업 (회사법), 사회보장

	1979-1984	1984-1992	1992-이후
기업 자율성 확대	기업 자율성 확대 (사친성 14개항)	도급제 경영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대형 국유기업의 회사화 (현대기업제도, 재산권 확정, 주식회사형 기업 지배구조 설립)
국가와 기업 재정관계	기업기금제, 이윤유보제, 이개세제 국가와 기업간의 이윤배분 홍경	이개세제의 전면 확대 후 기업경영도급제도 실시	현대적 기업 조세제도 (세법통일, 공평납세, 세제 단순화)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각기 (실적에 따라) 나누어 먹는다' 재정관리 시스템	재정도급제.	분세제 (현대 시장경제국가 보편적 예산제도)
은행, 금융	유동자금 부족분, 기본건 설투자를 은행융자로 충당		자본시장에서 동원
	국채발행(1981)	채권시장 출현, 예금증서(CD) 출현	채권시장 발전, 자본시장발전
	'상업적인 전문은행 설치 (외환전문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등)		중앙은행 거시경제 수단 사용 (자금유발, 대출금리변동, 공개시장조작) 정책성 은행 설치, 상업적 은행 발전 (예금금리 자유결정)
사적 부문, 특수경제지대	미국영기업(항진기업) 성장 고무	경제개방지구 확대(양자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복진, 광동의 하문, 장강, 전주 및 교동반도, 요동반도), 해남성 경제특별구	상해포동지구 개발, 장강양 안을 대개방지역으로, 개방 지역을 내륙성으로 확대
	광동성, 복진성 개방, 4개 경제특구(심수, 주해, 산 두, 하문)		
무역	소수 지방정부 및 (대외경제관계, 무역성에 속하지 않는) 소수 기업에 수출입권 허용, 인민폐 환율 조정	국가무역독점해체, 지방별, 기업별 무역 계약도급제, 대외무역중시업체의 점차 증가, 인민폐 평가절하 및 환율제 도입, 재정보조 제거, 외환보유제 실시	
농업	농가생산책임제	농지 임차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Ⅶ. 평가시 고려 사항

'실리사회주의'론을 평가할 때, 현실적으로 북한에는 또 하나의 경제정책 노선이 존재함을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선군시대의 경제노선'에 입각한 '국방공업 우선'론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선신보』를 비롯, 한국의 전향적 평가자들은 '실리사회주의'를 분석함에 있어서, '선군시대의 경제노선'인 '국방공업우선'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노동신문은 배타적일 만큼 후자에만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정책 방향에서 어느 추세가 지배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실리사회주의'를 북한의 '시장화'의 증거로서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 '실리사회주의'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현대사회민주주의 경제이론의 반동성'에 대한 북한의 논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방공업우선'론과 '실리사회주의'론

7월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김정일은 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한다.⁴⁶⁾ 이 이후의 경제정책 방향은 '국방공업 우선 발전'론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신문과 『경제연구』에 수차례에 걸쳐 다루어

46) 『조선신보』, 2003.4.11.

졌다. 『경제연구』의 글들에 따르면, “국방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는 련관 부문들이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특수한 경제구조”⁴⁷⁾라고 하며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위한 혁명 정신인 혁명적 군인정신은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가장 위대한 원동력이 된다”⁴⁸⁾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방공업우선’론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주장은 매우 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실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공업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었던 2003년 1월 중순의 내각회의에서도 평양, 남포, 함경북도 등 기존의 군수 관련 공업지대를 주요 대상으로 국방공업에 주력할 것을 구체적 내용 없이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신규 군수산업 시설의 대대적인 건설보다 기존 관련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를 통해 군수품 지원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 회의(2004.3.25)에서 내각 총리 박봉주는 보고⁴⁹⁾에서, ‘선군시대 경제건설 로선의 요구’대로 ‘군사선행, 국방중시의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벌일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방도로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군인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 보장사업을 1차

47) 박명혁,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선군시대 경제건설에서 그의 구현,” 『경제연구』 2003년 3호, p. 9.

48) 조옥술,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추동력,” 『경제연구』 제3호, p. 5.

49) 내각 총리 박봉주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 92(2993)년 사업 정형과 주체 93(2004)년 과업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04.3.26.

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북한은 국가예산 중 국방비 비중에 관하여 2003년 15.7%를 사용했고, 2004년 15.5%를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⁵⁰⁾ 이러한 비중은 물론 높은 것이지만, 북한의 과거 국가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에 비할 때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놓고 ‘국방공업 우선’론은 주어진 자원 한도 내에서 국방공업이 우선적으로 ‘정상’ 가동되어야 함을 의도하고 강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⁵¹⁾

둘째, 『경제연구』의 논문들에서 볼 때, ‘국방공업 우선’론과 ‘실리사회주의’론은 서로 접점이 없이 별개로 놓고 있다. ‘선군혁명노선’에 따른 ‘국방공업중시’론을 주장하는 논문에는 ‘실리사회주의’론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역의 현상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실리사회주의’에 관한 한 글⁵²⁾은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자는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

50) 재정상 문일봉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 92(200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 92(200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04.3.26.

51) 최근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경제정책의 총괄방향으로서, 2002년도에는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것’을 설정했고, ‘국방공업우선’론이 최초로 새해 공동사설에 등장했던 2003년 ‘국방공업 중시론’만을 명시했으나, 2004년도 새해 공동사설에서는 경제정책 총괄 방향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과 ‘인민생활보장’의 양대요구를 동시에 설정했다.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옥,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통일연구원, 統一情勢分析 2004-01) 참조.

52) 류운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자,”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p. 7.

킨다는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갈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의 해결”이며, ‘가장 큰 실리는 얻는다’는 “사회의 인적 및 물질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실리사회주의’론과 ‘현대사회민주주의 경제이론의 반동성’

이 글은 북한의 7월 개혁은 부분개혁체제로의 이행이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분개혁체제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로 이행한다고 했다. 이 단계에 속하는 경우는, 헝가리(1968-1987), 폴란드(1982-1989), 중국(1984-1992), 소련(1987-1991), 베트남(1986-1991),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1997.6-) 등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시기 각 국가에서는 그 성격이 동일한 조치들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유독 소련의 사례만을 언급하면서, “1980년대 중엽에 이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를 비롯한 사회주의 배신자들에 의해 발생한 현대사회민주주의경제이론”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부인”하는 ‘반동성’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⁵³⁾ 주요 논점을 대비해 보면, 아래와 같다.⁵⁴⁾

53) 두광률,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부인하는 현대사회민주주의경제이론의 반동성,”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pp. 52-53.

54) 서영수,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이 설교한 <완전독립채산제>의 반사회주의적 성격,”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pp. 49-50.

〈표 5〉 '실리사회주의'론의 '현대사회민주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론	'현대사회민주주의'의 경제이론
기본입장	국가와 기업소 사이의 관계는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경제지도와 국가에 대한 기업소의 임무수행관계.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거부하고 기업소의 독자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관리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반사회주의적 주장
계획성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유일한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 공장, 기업소들이 제각각 세우도록 한다면 경제발전이 지연발생을 피게되어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목적의식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매 기업소들이 자기 계획을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승인할 뿐 아니라 그 수행을 위한 생산경영활동안도 독자적으로 채택하도록 함. 그리하여 국가의 지령성 계획을 없애고 일부 중요한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는 국가주문형식으로 나머지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주문, 말하자면 시장형편에 기초하여 계획을 자체로 세우도록 함.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가 필요	개별적 집단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기업소의 경영활동 결과의 많은 부분이 그 지배 하에 있어야 함.
자체보상제, 자체용자	국가만이 모든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할 수 있음.	기업소가 모든 자원 즉 물질적, 로력적, 재정적인 자원을 전적으로 자체로 보장함.
자치제	경제관리의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집체적 의사에 따라 경제관리의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경제를 지도관리. 기업소의 개별적인 로동집단을 단위로 하는 자치제에서는 사실상 경제관리의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음.	자치제에 의해 관리의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음. 기업소의 로동집단에서 간부들을 선거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선출하며 기업소에 재정, 제품판매, 노력조절배치, 대외무역과 같은 분야에서 실로 많은 권한을 줌.
경제적 경쟁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집단적 창조력에 기초한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열의. 사회주의 국가의 유일가격제도를 없애고 상품화폐관계의 이용을 절대화함으로써 자본주의시장에 복귀하려는 반사회주의적 입장	소비자에 유리한 최종결과를 위해서는 기업소들 사이의 경쟁성 필요, 다양한 가격체계, 상품화폐관계의 보다 완전한 이용 필요

Ⅶ. 맺는말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첫째, 7월 조치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기업소자율성 증대라고 하는 종류의 조치의 종합이라고 보아야 한다. 1970년대말 중국경제는 이미 성장궤도에 들어 서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했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 조치는 주로 ‘국영기업의 자율성 향상’을 축으로하는 제도개편에 집중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제도개편과 거시경제안정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7월조치를 평가하는데서,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물론 7월조치 이후에 고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에 내재하는 거시경제불균형은 제도개편의 단기간의 효과가 극복해 낼 수 없는 만큼 원천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 개편의 측면은 일반적으로 ‘개혁’ 또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이란 일반적으로 긍정적 어감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어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보면, 북한의 7월조치는 마지못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며, 미래의 다가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7월 조치의 기본개념은 소련·동유럽에서 60년대 중반에 등장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8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40년 또는 20년 뒤져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론 또는 '선군시대의 경제노선'은 상당히 보수적 이데올로기적 언술을 통한 방어적인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적응('개혁')이 마지못하고 방어적 적응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셋째, 북한의 7월조치는 '적응과 개편'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적응'의 의미는 행위자가 주관적 의지에 반하더라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새로운 자세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새로운 자세와 행동이 매우 역겨울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세와 행동에서의 변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변수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여 '이윤'이라는 개념의 사용을 회피하면서도, 결국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를 취했는가를 보았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현대사회민주주의의 경제이론'의 '반동성'에 대해 격렬히 비난하고 있지만, 이미 나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취해진 '현대사회민주주의'적 조치들을 철폐하지도 않았고, 중국의 동류의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7월조치 이후 주민생활 관련 중소상공업 부문에서 비국영·비자유 유형의 시장적 상업기업을 허용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북한도 앞으로 불가피 '현대사회민주주의의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경우에도 적어도 외견상 '우리식' 대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선전할 수 있는 묘안을 발견해 내게 될 것이다.

넷째, '적응과 개편'을 초래한 가장 큰 추동요인은 국가재정의

고갈에 따른 국가행위능력의 저하이다. 1990년대 말에 오면 북한의 국가재정능력은 1980년대 말의 60%로 저하했다. 거의 모든 행위가 국가행위였던 북한에서 국가재정능력의 감소는 거의 정비례로 국가행위능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자신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구조조정'함으로써, 자율성을 신장시켜주거나 후견으로부터 거의 해방시켜 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 7월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가는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잔여 '국가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한편, 구조조정예 의해 자율성이 신장된 부문들에서 그 자율성 증가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면, 그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된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해방되거나 자율성이 신장된 부문들은 이미 획득한 수준의 자율성을 고수하는 한편 확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재편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는 일이 잘되어 가는 경우이다. 일이 안되어 가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적응과 개편'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증대하지 않으며 국가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는 생산이 증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강경책에 호소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른바 '약탈국가' 또는 '흡혈국가'의 등장이다.⁵⁵⁾ 이와 같은 '약탈'은 국가의 강제적 조세 징수 증대에

55) 축적의 위기, 그로 인한 국가재정능력의 저하에 따른 '적응과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북한의 7월조치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붕괴'에 직면했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Alex Thomson, *An Introduction to African Politics* (London: Routledge, 2000), pp. 165-188.

의한 '공적 약탈'과 공적 권력을 남용한 관료들의 '사적 약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약탈'은 전통적으로 '비사회주의적'으로 간주되던 부문에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즉 텃밭경작이라든가 장사 행위 또는 합법적인 '개인생산책임제,' 비국영·비사유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도, 생산량과는 관계없이 무거운 공적 사적 '약탈'이 행해질 수 있다.⁵⁶⁾ 그러나 국가는 과거처럼 하부 단위에 대한 통제와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56)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7월조치 이후 소토지(텃밭)에 대해 소출보다 많은 세금(평당 12-13원)이 부과되고 경작을 포기할 경우 원상복구 명목으로 나무(묘목당 20원)를 심고 3년간 키우도록 하여, 소토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영심, 2004-7), 한 인권보고서는 '공권력과 공권력 빙자 폭력'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례는 우연치 않게 주민의 생계활동에 개입한 중간간부의 '약탈' 행위에 대한 서술이다. 좋은 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정토회, 2004.2), pp. 94-101.

김정일 정권 10년
- 북한의 사회변화 -

서 재 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사회변화

1. 서론

북한을 분석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이란 분석대상은 하나의 북한이 아니라 공식세계와 비공식 세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간극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공식세계란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 공식이념, 공식노선 및 정책 등이다. 주로 최고지도자의 연설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공식 미디어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북한이다. 북한의 공식 세계에 나타난 이미지는 북한이 항상 정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서 비공식세계란 북한의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나 북한의 당국이 직면해 있는 실제의 모습이다. 이 두 세계를 구분하는 시각이 없으면 북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양극적인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의 원인도 이 두 세계의 어느 한 편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세계에 중점을 두고 보면 북한은 아직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비공식세계를 중심으로 보면 북한은 많이 변화하였다고 평가하게 된다. 어느 것이 북한의 실제 모습이냐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북한의 정책을 알기를 원하면 공식세계의 북한을 보아야 할 것이며, 북한 사회의 실상을 알기를 원하면 북한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제 모

습을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 사후 지난 10년간의 북한에 대하여 평가할 때 공식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비공식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탈북자의 증가, 대량 아사 현상 등이 북한 주민의 삶의 실제 모습의 하나이다. 이런 경제난이 북한체제의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그런 시각에서 북한의 공식세계도 자세히 보면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했다든지, 신의주 특구를 설치했다든가, 개성공단 건설에 호응하고 있다든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했다든지 하는 것 등이 증거가 된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이를 개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 논문은 북한의 사회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지난 10년간의 변화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부문이 사회부문이다. 사회부문은 북한주민들이 실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영역이어서 북한 지도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비공식 부문의 영역이 많은 부문이기도 하다.

〈변화의 동인〉

사회부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변화를 촉진시킨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직후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시작으로 자본주의세계체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동함에 따라 변화를 시작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 물자

와 정보가 유입되기도 했으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보따리장수가 북한에 중국의 물건과 정보를 유입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김일성의 사망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의 사망 시점이 식량배급이 중단되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절망에 빠진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사망을 통하여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김일성마저 죽은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주민을 먹여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생존의 자구책을 개인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북한체제와 북한사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는 중앙계획경제 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의 결정론적 기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사회주의적 통치 체제의 두 가지 기둥은 중앙계획경제체제와 당조직인데 경제는 당조직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자금을 대는 부문이다. 중앙계획경제체제는 당조직 내에서 충성과 규율을 관리하도록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당조직 통치의 경제적 토대로써 기능을 한다.¹⁾ 중앙정부는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당조직의 정치적 위계에 따라 물질적 혜택을 달리하고,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직책을 할당해 준다. 공산당의 권력과 권위는 생산수단에 대한 당의 소유권과 재화 및 직업 배분에 대한 독점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중앙계획경제의 기능이 쇠퇴하면 하위 관료와 인민 대중의 행위양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월더²⁾는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와 체제

1) Daniel Chirot, "What Happened in Eastern Europe in 1989?," in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s of 1989*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p. 4.

변화는 중앙계획경제 체제와 당조직의 통치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헝가리와 중국의 경우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왈더에 의하면 중앙계획경제 체제의 쇠퇴는 자원 획득과 출세 기회의 배분체제를 바꾸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야기시킨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정권의 건강성은 당기구의 규율과 응집력 및 조직화된 정치적 저항을 분쇄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그런데 만약 경제가 부실하여 당 국가기구의 규율과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쇠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당간부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이나 배급이 작아지거나 중단되면, 배급에 의존하던 시민들에게 암시장 또는 시장과 같은 욕구충족의 대안적인 통로가 생기게 되어 당의 규율과 응집력은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당간부가 그들의 욕구충족을 시장기구와 시민들에게 결탁하는 구조로 변화할 때는 더욱 약화되는 것이다. 즉, 강력한 중앙통치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³⁾

경제난은 당조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난은 일반 주민들에게 미치는 타격이 매우 즉각적이며 치명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경제난이 체제의 여러 부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거나 더 파괴적이지는 않다. 시장제도에서는 개인들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보다는 훨씬 큰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지난 50년간 쌓아올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2) Andrew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3) Andrew Walder,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pp. 5-7.

원형을 순식간에 침식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10년간의 북한의 변화는 김일성 생전동안 구축한 북한체제의 원형을 침식한 연대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난은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정치교육과 물리적 통제를 통하여 구축한 사회주의체제를 급속히 침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의 사회부문에서 일어난 변화를 사회구조, 사회의식, 행위양식, 사회갈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회제도의 변화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의 사회구조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치영역은 사회주의적 통치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생활 영역은 자본주의에 유사한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 근거의 일부는 사회보장제도가 변화하였다는 사실, 노동보수제도가 변화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경제에서 시장화와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제의 변화: 국가보장제에서 시장제도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은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배급제도였다.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란 식량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을 국가가 (무료로 또는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배급해주는 제도라고 인식할 정도이다. 실제로 배급제도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배급제도가 식량과 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복, 주택 등의 기초 생필품을 포함하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제도하에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배급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폐지된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이다.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194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나아가서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배급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1990년대 들어서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상당부분 붕괴되었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⁴⁾ 식량배급이 제대로 안되자 북한 주민들은 암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공식경제가 작동하지 않자 북한주민들은 암시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90년대 북한경제의 계획 메커니즘이 마비되기 시작한 이래 국영상점 혹은 배급소에서 물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비공식부문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식부문에서는 계획경제라고 하면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된 반면,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7월경제

4) 이0철(함북 온성군 양정사업소 검열지도원),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001.9.

관리 개선조치와 관련한 북한의 내부 문건은 “솔직히 말하여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면서 달러화는 중요한 교환수단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북한의 비공식부문에서 통용되고 있는 달러화의 규모는 6억-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다.⁵⁾ 북한이 7·1조치를 취한 중요한 배경의 하나가 바로 암시장 경제를 억제하여 공식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급제는 식량공급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획득의 방식은 국가 배급제에서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식량이 부족하여 식량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2002년의 7·1조치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였던 것이다.

7·1조치가 취해진 직후에는 장마당의 개인장사는 모두 국영상점에 물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개인장사를 금지했으나 이 조치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7·1조치는 경제의 정상적인 가동을 전제로 하여 취해진 조치로써 각 기업소에서 생산한 만큼 월급을 주도록 했지만 공장 가동율이 20-30%에 불과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암시장에서 개인장사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고 북한 당국에

5) 정연호, “최근 북한의 달러화 사용금지 조치의 배경 분석,” 『KDI북한경제리뷰』 2002-12월호 (KDI, 2002), p. 9.

서도 이를 묵인하여 2002년 11월에 들어서는 국영상점의 물건을 다시 개인에게 환원해 주었다고 한다. 북한의 전 주민 중에서 농민들과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사해서 먹고 산다고 한다. '95년 이후 산 사람은 모두 다 장사해서 먹고 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생필품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자 북한당국은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국가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7·1조치로 배급제를 폐지한 이상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부분의 부분적 양성화 조치는 생필품 공급 증대,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장을 양성화하였다.⁶⁾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에 이어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업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기능을 확대한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회계법이 채택되고 농민시장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되었다"면서 "경제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농산물 등 토산물 뿐 아니라 공업품까지 사고 팔 수 있는 종합시장이 북한전역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평양시내 11곳에 서구식 시장이 건설중에 있으며 평양 통

6) 정연호, "최근 북한의 달러화 사용금지 조치의 배경 분석," p. 29.

일거리에 건설중인 '통일거리(종합)시장' 건물 사진이 중앙일보에 보도된바 있다.⁷⁾

종합시장은 장마당과는 달리 건물의 지붕이 있고 국가가 물자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 운영된다고 한다.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장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2. 국영상점의 사영화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비공식 경제 부문은 생산과 유통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식량배급이 중단되자 텃밭이나 폐기밭을 개간하여 개인농을 실시하였으며, 식량과 공산품까지의 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암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암시장의 발달은 국영시장도 암시장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7·1조치로 각 개별 기업소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국영상점이 사영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지배인 또는 개인이 국가에는 이득금만 내고 나머지 이익금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영상점이지만 국가가 상점에서 판매

7) 「중앙일보」, 2003. 6. 26.

할 상품을 보급해주지 못하고 상점 지배인 개인의 개인적 수단으로 상품을 확보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직매점, 백화점은 결국 개인 운영으로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의 상품이 모두 개인 상품이기에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은 개인의 몫이 되고 대신 국영상점을 사용하는 대가를 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즉, 형식은 국영상점이지만 실제 내용은 개인상점이다. 식당 중에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식당은 거의 없으며 모두가 개인이 운영한다고 한다.⁸⁾

7·1조치 이후 대부분의 국영상점 또는 식당들을 개인이 접수하였다. 소유는 국가이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누구 소유든 아무 상관 없다고 한다. 세금 즉 ‘리득금’만 내면 된다.⁹⁾

이 밖의 다른 업종에서도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가령, 바닷가에서 배를 소유한 개인이 여럿 있다고 한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개인에게 팔기 때문이다. 개인 소유의 배를 가진 사람은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여 개인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국가보장제에서 시장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였으나 이제는 개인이 시장논리에 근거한 자력갱생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기만 하면 생계가 보장된다고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 시장에서 돈을 벌고 구매해

8) 탈북자 황0국의 증언. 2003. 7. 3.

9) 탈북자 박0섭, 황0국 증언.

야 하는 상황으로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유사해진 것이다.

3. 분배제도의 변화: 정액현물 배급제에서 임금노동제로

북한에서 공식적인 분배제도는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되는 노동임금제이다.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지불한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데 생활비계획, 장려금계획, 상금계획 등에 따라 작성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은 직급에 따라 노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임금은 일반노동자가 70-80원 규모이며, 공장기업소 지배인은 150-200원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액수는 북한에서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을 위한 것이고 실제 생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량 등의 기본 생필품은 현물 배급제에 의하여 배급으로 주어졌다. 식량과 주요 생필품은 직업에 따라 품목과 양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생산성에 관계없이 정액제로 되어 있었다. 가령, 성인 남자는 800g, 학생은 500g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급제는 식량부족으로 중단되었고 노동임금은 암시장에서는 휴지나 다름없는 액수였다. 쌀 1kg에 40여원의 가격에 비하면 노동자의 80원 월급은 의미없는 액수였다.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존의 분배제를 전면 개혁하였다. 배급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고, 임금은 생산성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였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다는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실리보장’이라는 개념 하에 화폐에 의한 유통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임금체계는 직급별로 기본급을 정하고 개인별로 노력하고 생산한 만큼의 성과급을 합하여 지급된다고 한다. 새로운 임금체계는 자본주의 임금노동제¹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분배제도가 이렇게 변화된 배경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식량배급을 계속할 정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한 것이며, 임금노동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동원 체제의 개혁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보수체제는 현물배급제로서 저렴한 가격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무상에 가까우며 이 무상배급제도는 노동의 양과 질에 거의 무관하게 1인당 정액의 배급을 받는 것이다. 이제도 때문에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끼었다. 열심히 일을 하든 않든 상관없이 정액제의 배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분배의 원칙은 북한의 용어대로 '평균주의'였다.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생활비를 줄 때 기업소가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고 하여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 적게 한 사람인가, 기본 로력인가 보조부문 로력인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똑같이 계산해서 주었으며, 협동농장원들인 경우에도 농장에 나가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가동일수만 보장하면 한해 식량을 가족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똑 같이 주었다.¹¹⁾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시행을 지시한 김정일의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0) 임금노동제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자본주의 노동보수제의 핵심이며 칼 맑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자본주의의 특징을 임금노동제로 파악하였다.

11) 명미상의 북한의 내부분건으로서 북한의 7.1조치 관련 강연자료.

- 사회주의 노동생활의 기풍을 확립해 건달을 부리거나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야 한다.
- 물질적 평가에 정치적 평가를 잘 결합시켜 노동량과 질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 정치적으로 응당 평가를 받게 하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 현실의 변화발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분배방법을 연구 도입해서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를 더욱 개선하고 완성시켜야 한다.
- 경제생활에서 공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무상 공급, 국가보상 기타 혜택들도 검토해서 없을 것은 없애야 한다.¹²⁾

김정일 지시내용의 핵심은 지금까지 국가가 공짜로 주던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짜로 먹여주고 대신에 열심히 일하도록 사상적으로 독려하던 제도가 작동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며, 놀고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보수체계를 이념에서 물질로 개혁하는 것이며, 노력한 만큼 벌어서 현금으로 구매하라는 것이다. 생계수단을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수입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12) 「조선신보」, 2002. 7. 26.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보수제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를 폐기하고 임금노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가 탄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절대로 공짜, 평균주의가 없다. 누구나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제 값으로 사먹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해 온 낮은 가격에 의한 식량공급제는 194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 노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생활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은 불과 3.5%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만 일하면 한달 식량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애써 일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되어 있었다. 일할 수 있는 많은 가정부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서 열성을 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히 최근 년간에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직업마저 버리고 장사나 하면서 자기 개인의 리속을 채우는데로 나갔다.¹³⁾

이러한 분석에 유사한 관찰이 박재규 전통일부장관의 방북 조사에서 이루어졌다. 2002년 9월 KBS와 북한 합동연주회에 동행했던 박재규는 방북기간 동안 접촉했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배경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북한 관리들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3) 명미상의 북한의 내부문건으로서 북한의 7·1조치 관련 강연자료.

14) 박재규, “6·29 서해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통일IT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2002.9.23, 프레스센터).

북조선 성립이후 인민들이 초기에는 열심히 일하였으나 점차 게을러졌다. 농민, 광부, 어부 할 것 없이 모두 게을러졌다. 노동생산성이 아주 침체되었다. 매년 새해 시작시에는 엄청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연말에는 모두 가짜 허위보고로 끝냈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모두 똑같이 분배받았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한의 병이다. 이 병을 치료하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이번의 조치이다. 김정일의 명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 채택된 조치가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이처럼 북한의 7·1조치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개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채택한 임금노동제는 분배제도에 있어서 사실상 자본주의의 본질에 가까워진 것이다. 칼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임금노동(wage labor)으로 규정하고 임금노동이 노동자 착취의 개념을 담고 있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배급제 폐지 및 임금노동제에 근접하는 보수체제 도입은 북한의 기존 사회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며, 자본주의적 보수체제에 근접한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Ⅲ. 사회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북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도 등 구조적 요인이 자연스럽게 형성시킨 사회의식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바람직한 인간형으로 인위적으로 학습시킨 사회의식이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이

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계획경제가 가동되고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기만 하면 장래가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되었지만, 공식경제체제가 마비된 이후 생계획득의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주민들의 사고방식도 변화하였다. 변화의 유형은 사회주의체제 원형의 의식유형에서 시장주의체제에 근접하는 의식으로 변화하였다.

1. 사회주의는 정당하다는 인식에서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인식으로

북한주민들의 사회의식을 형성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착취계급이 청산되었고 평등하며, 국가의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인 배급제에 의하여 생계가 보장된다는 인식이다. 교육과 의료 등 주요 사회 서비스가 모두 무상으로 국가에 의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의 본질은 곧 배급제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가동되는 한 가장 좋은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배급제도가 지난 50여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주민에게 배급제는 곧 사회주의를 의미하였고, 사회주의는 곧 배급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런 배급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의 양이 줄거나 중단될 때에는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다시 원상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없

어졌다. 북한에서 7·1조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하게 배급제도가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 장사없고 배급타는 제도

비사회주의 = 장사로 돈을 벌어서 사는 제도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주민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현실에 대하여 “낮에는 사회주의하고 밤에는 자본주의한다”는 식으로 표현한다.¹⁵⁾ 그렇다면 김일성 사후 배급을 안주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비사회주의로 먹고 살았던 셈이다. 북한에서는 장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사회주의 그루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것을 보아도 장사는 곧 비사회주의이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대부분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 대안은 사회주의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의 개념이 변경되고 있다. 최근 30권짜리 『조선대백과사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집단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사회이며, 그 내부의 협동적 소유, 국가적 소유 상관없이, 집단적 형태로 운영되면 사회주의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사회주의의 본질 및 기본속성은 집단주의라는 것이다. 시장요소 = 자본주의, 북한의 시장화 = 자본주의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다. 북

15)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7.18.

한은 사회주의를 소유의 여부로 정의하지 않고 집단주의 여부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의 1994년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연설이 사회주의를 집단주의로 재정의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력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사회 발전의 역사적 총화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극소수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 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집단주의는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으며 자주적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¹⁶⁾

2. 사상 중시에서 물질 중시로

원래의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은 국가의 배급에 의하여 충족이 된다. 국가, 당, 최고지도자에

1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논문, 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54-455.

충성을 하기만 하면 배급이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국가의 배급에 대한 대가로 충성을 결심하게 되며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바로 사회주의체제와 지도부를 지지한다는 ‘사상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주민의 가치의식에서는 물질은 2차적이고 사상이 1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교육을 받고 사회화되어 있으며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문제가 없는 체제인 셈이다.

그런데 배급제도가 폐지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되었으며, 종합시장제도가 도입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이전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면 생계가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체제가 변화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현물배급제에서 화폐경제로 완전히 이행함에 따라 돈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사상이나 이념은 2선으로 후퇴하고 물질우선의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월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월급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이전의 월급은 용돈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계비 개념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배급체제 하에서는 현금이 별 의미가 없었던데 비하여 이제는 화폐경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입당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출세를 할 수 있는 관문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일반주민들에게는 당원자격이 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당에 별 관심이 없다. 이전에는 결혼에 있어서도 성분과 당원 여부가 큰 조건이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재산과 돈이 더 큰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가치의식 변화로 나타난 제도변화의 전형적인 예의 하나는 군대기피 풍조이다. 북한 청년이 군복무를 선택하는 기본 동기는 입당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입당해서 당원이 되어도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길고 고생스런 군생활을 거치기 보다는 돈을 쉽게 버는 길을 선택하는 추세이다. 북한당국은 식량난과 군대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복무기간을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전민군사복무제를 채택하였다.¹⁷⁾

3. 국가의존적 사고방식에서 자력갱생 의식의 확산으로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일반적 사회의식의 하나는 국가의존적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일방적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을 노동에 동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배급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사회의식이며 국가가 의도한 방향이기도 하다.

각 개인에게는 계획을 하거나 생산수단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계획하는 것은 고위간부

17) 정영태, 박형중, 「북한의 병력감축설 및 전민복무제 채택의 의미와 대책」 (서울: 통일연구원, 정책건의서, 2003).

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으며 개인들이 이러한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셈이다.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주의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주민들 개인들은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중요한 정치구호의 하나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이다. 사회주의는 곧 국가 의존적 의식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과거의 국가의존적 의식이 이제는 장사를 통하여 스스로 생존하는 자구책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7·1조치 이후 주민의식의 변화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생계를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는 등의 국가의존적 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제가 호전되면 배급이 될 것으로 인식하던 인식이 배급제 공식 폐지 이후에는 경제가 호전되어도 배급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배급제가 폐지되고 장사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배급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배급을 타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력갱생의 의식은 장사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은 대부분이 공식부문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길은 장사를 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는 인식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로서의 장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평양의 군고구마 장사와 같이 기업형의 장사가 나타나고,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을 설치하는 등의 양성화 조치도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장사를 지속하기 위한 논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사를 해도 집단적 기관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면 된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보답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사회주의 장사는 자본주의 장사와 다르다는 논리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하여 북한 관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대세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며, 장사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어졌다고 한다. 북한 간부들이 7·1조치에 대하여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공급이 안되어 가격이 상승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경제개혁’이라고 칭해도 좋다고 김정일이 지시했다고 한다. 김용순이 비공개석상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나가서 개혁이라는 말을 써도 좋다고 허가받았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¹⁸⁾

그런데 보위부는 장사에 대하여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 요소 통제가 기관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8) 정창현(중앙일보 기자), 통일연구원에서의 간담회 내용. 2003. 7. 10.

4. 공적 부문의 소극적 노동의식에서 사적부문의 적극적 노동의식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이 국유화되고 국가의 계획에 따라 개인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체제이다. 더욱이 동원된 노동에서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배급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의 순위와 연령에 따라서 배급량이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열심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정치적인 범죄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업이나 사보타지를 하는 등의 의식적 노동기피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텃밭이나 폐기밭 등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암시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

7·1조치를 도입한 목적의 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의욕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관한 한 7·1조치는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이 낮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7·1조치의 성과가 없지만 가동이 가능한 농업 및 광업분야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과 광업 분야는 생산성과 만큼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7·1조치가 성과를 발휘하여 경제가 회생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농민의 경우 생산량의 15%를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85%를 농장에서 자체 분배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욕이 높아졌다고 한다. 광업의 경우도 석탄생산량이 증가하여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고 북한의 전기사

정도 호전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이러한 행위양식이 야기시킨 변화의 하나는 국영상점을 사영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영상점이나 식당 등의 서비스업종의 경우 영업형태가 대부분 건물은 국영상점이나 판매되는 물건은 모두 지배인 개인의 능력 끝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 이윤은 개인의 몫으로 남는 사영화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기업주의 영업태도는 자본주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매출액에 상응하여 월급을 받는 종업원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는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달라졌다. 북한을 방문하는 많은 방북자들은 7·1조치 이전과 이후의 태도를 비교할 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가령 평화자동차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한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이후 노동의욕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7·1조치를 취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노동의욕의 창출에 있다고 본다면 그 정책은 성공한 셈이다.

5.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북한의 공식이념은 주체사상이지만 그것은 이론적 상징에 불과하며 실제로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규범은 집단주의이다. “전체는 하나로 하나는 전체로”라는 구호가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구호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노동동원을 위하여 집단주의

이념이 필요하며, 수령에 대한 이상숭배와 정치적인 동원을 위해서도 집단주의의 이념은 필요하다.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과는 거리가 멀지만 북한체제를 위한 사상교육의 핵심의 하나가 집단주의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규범인 집단주의는 국가에서 배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배급이 중단되고 개인들이 각자 능력대로 수단대로 장사, 밀수, 부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인주의는 생존의 원리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주체사상의 핵심명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명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이제는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북한주민들에게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공식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탈북자들이 탈북동기에 대하여 주체사상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결행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집단주의가 북한 사회주의의 핵심 규범이라면 집단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는 핵심적인 규범을 침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6. 사회의식 변화 유형의 도식화

위에서 논의된 북한에서 7·1조치 이후 변화된 사회의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회주의 체제 원형’(맨 좌측열)이 ‘원형의

사회의식'(2째열)을 형성하였는데 이것이 '7·1조치이후 변화'(3째 열)하였다. '7·1 조치이후에 변화'된 사회의식은 '변화된 북한체제'(맨 우측열)의 구조적 산물이다.

사회주의체제 원형	원형의 사회의식	7·1조치이후 변화된 사회의식	변화된 북한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정당하다	→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비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의존성	→ 장사를 통한 자력갱생	계획경제의 붕괴
배급제	사상성 중시	→ 돈 중시 및 물질주의	배급제의 붕괴
명령경제	소극적 노동의식	→ 적극적 근로의욕	경제의 사영화
행위규범	집단주의	→ 개인주의	자생적 행위규범

Ⅳ. 사회심리 및 행위양식의 변화

1. 이중적 행위양식의 심화

식량난 이후 배급은 중단되었지만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성된 사회 현상의 하나는 국가의 권위를 냉소하고 조소하는 사회심리를 더욱 조장하였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감시가 없는 곳에서는 회의하고 반발하는 행위양식을 조장하였다. 억압적 체제에서 발달하는 사회적 성격의 하나는 실제 감정을 숨기고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허위감정을 표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유형은 이중의 도덕적 기준, 또는 제2의 사회의식,

이중적 사고, 분열된 인격, 또는 이중적 도덕률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모든 용어는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공적 생활에서는 공식규범에 순종하지만, 개인적 일에서는 전혀 다른 자기방식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공식세계에서 광범위한 대중들이 공적 권위를 냉소하고 있다는 예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하여, 피지배자는 지배자에 대하여, 대중들은 정권에 대하여 “우리” 대 “그놈들”이라는 이분법적인 계급의식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의식의 근저에 있는 것은 거부 의 심리이다.¹⁹⁾ 그러나 이 상태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대안적 이념을 찾는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목소리 큰 저항자라 하더라도 비판은 공식 정치 용어를 사용하며 그 내용은 더 나은 진정한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언어는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심은 공적 권위에 대한 무시와 냉소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주민들은 억압적인 체제로부터의 정치적 처벌을 피하고 개인주의적 이익을 실현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세계에서는 공적 원칙을 따르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공적 세계에서는 복종하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비판한다는 면중복배(面從腹背)의 현상인 것이다. 사회주의에 특징적인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개념으로

19) Yanqi Tong, “Mass Alienation Under State Socialism and After,”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2, pp. 215 ~ 218.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²⁰⁾

북한주민들은 통치이념인 주체사상도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정치학습 교원의 말끝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연결시켜주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주민들은 노동당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등 노동당이 운명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명제는 “한마디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운명을 개척해가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다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식량구입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²¹⁾

지배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허위의식적 구호를 본질로 인식하고 각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 · John Harsanyi, “Advances in Understanding Rational Behavior,” i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21) 서철영(청진철도국 남양분국 세천역 신호원, 1999.8.14 귀순) 증언.

2. 현상탈출 심리의 심화

식량난이 심화되자 북한주민들에게 확산되는 행위양식의 하나는 파괴적 현상 탈출심리이다. 단순히 심리적 이반에 그치지 않고, 김정일에 대한 불만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언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현상도피적인 심리가 표출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쟁이나 팍 나버려라”라는 언행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적 심리이다. 이것은 전쟁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대안찾기 심리이며, 지배계급에 대한 복수심리가 묻어 있는 언행이다. “굶어죽으면 어떻게 총 맞아 죽으면 어떻게, 지금보다는 나올 것이다, 누가 이기든 먹고 살자”라고 말하곤 한다고 한다.²²⁾

많은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이와 같이 이판사판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월 대로 되라, 망하고 싶으면 망해라, 전쟁하겠으면 전쟁하라, 전쟁 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튀겠다”는 식의 심리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4년경부터라고 한다. 1980년대는 “왜 이런가” 정도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너무 속아서 살아 왔다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심이 방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³⁾

황장엽 전 당비서도 그의 자서전에서 비슷한 심정을 표출한 바 있다. “나 역시 대부분의 주민들처럼 때때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나 이놈의 세상, 빨리 끝장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22) 정석영(23세, 함북도 인민학교 교원, 1999.1 귀순) 증언.

23) 이임영(36세,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1997.12 귀순) 증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다”고 진술했다.²⁴⁾

주민들이 “전쟁이나 나 버려라”라고 생각하는 배경은 북한 당국이 사회통합을 유지하고자 전쟁분위기를 많이 고취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항상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도부에서 지속적으로 전쟁 준비를 시키고 전쟁하면 이긴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는 것이다. 고위급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니 전쟁이나 하자고 주장한다.²⁵⁾

북한 당국은 “이 고난은 미국 탓”이라고 반미교양을 함으로써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한다. 즉,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항복하여 우리가 미제의 노예로 살아서 되겠느냐고 반미감정을 부추긴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그러면 전쟁이라도 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곤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첫째는 “이 체제가 확 망해버려라”는 체제에 대한 반항심이며, 둘째는 “미국이 우리를 못살게 구니 진짜 한번 해 보자”라는 반미감정이라고 한다.²⁶⁾

백성들은 “이 정권이 꼭 무너져라”라는 심리가 많지만 함부로 그런 식으로는 감정표현을 못하고 “전쟁해서 미국놈 몰아내자”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²⁷⁾

2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황장엽회고록, (서울: 한울, 1999), p. 277.

25) 임복신(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26) 김철대(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27) 김철대 증언.

두 번째 유형의 현상탈출 심리는 실제 국외로 탈출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하러 월경을 한다. 북한 주민들의 많은 수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은 식량 구하기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함흥에서 온 한 재중 탈북자는 국경을 한번 넘으면 초등학교 졸업, 두 번째 넘으면 고등중학교 졸업, 3번째 넘으면 대학 졸업, 4번째 넘으면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당국이 지금까지 계속 인민들에게 거짓말만 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중국에서 돌아오면 가족과 친구, 친척들에게 외부의 소식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재해석을 하게 한다.²⁸⁾

탈출(exit)은 단순히 떠나는 행위이다. 한 사람이 탈출하면 다른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탈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탈출이라는 대안이 있으면 불만표출(voice)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1989년 동독의 경우 exit와 voice의 상호작용이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²⁹⁾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이라는 탈출구가 식량 구하기 이상의 역할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8) Andrew Natsio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IP Special Report August 2, 1999*, p. 20.

29)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vol.45, no.2, Jan., 1993, p. 177.

V. 범죄 및 일탈의 심화

1. 범죄

집단주의적 사회보장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공식 이념은 집단주의지만 경제난 이후 주민 생활은 집단주의라기보다는 이기주의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실제 백성들 속에서 자기 가족이 굶어죽는 현실에서 집단이 자기를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기 외에 아무도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결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양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이기주의는 자력갱생의 수준을 넘어서 매우 사회일탈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기주의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마찬가지이다. 중앙당, 기층 당조직까지 모두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간부들이 국가의 혁명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철저한 개인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당간부들이 개인주의로 살기 때문에 보위부, 안전부도 그렇게 살며, 군대도 그렇게 산다고 인식하고 있다.³¹⁾

30) 김철대(47세, 1997.8. 탈북, 1999.1. 귀순,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증언.

31) 임복신(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이기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범죄이다. 극단적인 결핍상태에서는 범죄를 통하여 생필품을 획득하게 된다. 절도, 강도가 가장 흔한 범죄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범죄는 기승을 부렸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범죄는 자본주의의 유산이며 사회주의에는 범죄가 없는 것으로 선전했었다. 범죄는 사회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쇠퇴했으며 공산주의와 더불어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았다. 교리와 현실간의 모순 때문에 소련국가들은 범죄를 거론하는 것을 기피했다.³²⁾ 그러나 일반 주민은 물론 당간부, 안전기관의 간부들이 범죄조직과 결탁해 있었다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범죄정책의 변화 이후 드러났다. 고르바초프는 보수적인 권력 엘리트들을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죄의 실상과 엘리트의 부정부패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글라스노스트 이전에는 소련 학자들은 범죄는 과거 부르조아 시대의 유산이며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외부의 탓으로 돌렸으나³³⁾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고르바초프 시대의 소련 학자들은 사실을 말하였다. 어려운 생활여건이 알콜중독, 가족갈등을 야기시키고 범죄와 일탈행위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가정환경,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일탈행위, 알콜중독, 아동학대가 일상적이다. 범죄 실상을 공개하기 전에는 범죄 문

32) Louise I. Shelley, "Crime in the Soviet Union," in Anthony Jones, Walter D. Connor, David E. Powell eds., *Soviet Social Problem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33) Louise I. Shelley, "Crime in the Soviet Union," p. 255.

제의 정도라든지 당간부와 범죄 조직이 연계된 사실 등을 잘 모르고 있었다. 범죄 문제의 공개 이후 시민들이 사회안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으며, 체제의 통합문제도 의구심을 갖게 됨에 따라 소련 당국은 사법기관을 정당화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 범죄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은 사회주의 우월성의 이념을 여지없이 분쇄시켜 버렸다.³⁴⁾

북한에서 범죄문제는 소련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범죄가 경제난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인 1995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사회질서는 매우 문란해졌다고 한다.³⁵⁾ 경제난에 기인하여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범죄 현상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가재산에 대한 줌도독질 또는 절취행위이다. 북한 주민들은 공장 제품을 훔쳐먹는 유형을 넘어서 공장기계와 설비를 뜯어서 팔아먹고 있다고 한다. 개인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지만 국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범죄의 증가는 생존경제 차원의 자구노력이자 결핍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써 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절도, 사기, 밀거래 등의 범죄도 급속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평양 거리도 저녁 8시만 되면 여자들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치안상태가 문란하다고 한다.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도둑놈처럼 보이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이 주어지는 평양이 농촌보다 먹고 살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³⁶⁾ 평양 주민들도 살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북한에서 범

34) Louise I. Shelley, "Crime in the Soviet Union," pp. 254-255.

35) 이철원(무산광산 선광사업소 노동자, 1998.3. 귀순) 증언.

36) 김진유(평양 지방공업총국 자동차사업소 노동자, 1998.4. 귀순) 증언.

죄의 1순위는 군대이며, 2순위는 젊은 층이라고 한다. 극한적 상황에서 참을성 없는 젊은이와 무서울 것 없는 군인들이 마구 날뛰는 것이다. 군인들에 의한 도적질, 살인, 강간, 차치기 등의 범죄가 많다고 한다.³⁷⁾ 공포감을 주는 강력한 포고령이 많아졌으나 사회적 일탈은 지속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식량난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탈은 어쩔 수 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2. 일탈

일탈은 범죄보다는 가벼운 행위로서 사회규범의 위반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면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일탈의 하나는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이기주의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족 해체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이 부족하여 어른들이 각자 흩어져 식량을 구입하려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되기 일쑤이며, 집에 남은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꽃제비가 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난으로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이혼율이 상승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귀순한 김산^o도 식량난의 결과 가정파탄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³⁸⁾

37) 임복신(48세, 제지공장 책임기사, 1998.10. 귀순) 증언.

38) 김산^o (무역회사 근무, 2002년 입국) 증언.

북한의 북부 변경지역에는 가족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사는 집이 많지 않다고 한다. 한가족이 한집에 모여 사는 집이 많지 않으며, 생활이 향상될 때까지 각자 뿔뿔이 헤어진다고 한다.³⁹⁾

Ⅵ. 사회갈등의 심화

1. 사회적 불평등 심화

어떤 사회든지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불평등이다. 절대적으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할 때 불만이 발생하고 불만이 집단화되면 사회갈등으로 발전된다.

북한에서 1990년대 들어 배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의 생필품 확보의 방식이 암시장 기능에 의존하게 되었고 생필품에 접근하는 수단과 권력의 차이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간부들이 공장의 차량이나 인맥을 이용하여 횡령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많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병가를 얻어서 장사에 전념하여 돈을 버는 경향이 많으며, 장사하는 수완이 없는 사람들은 아사를 당하는 등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지하경제의 확산과 더불어 심화된 이러한 불평등은 2002년의 7·1조치를 통하여 엘리트층과 비엘리트층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7·1조치는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39) 김0희 (43세, 함북 청진시 선전대 근무) 증언.

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며 또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간에 월급 수령 여부에 큰 차이를 낳았다.

제 때에 월급 타는 사람들은 ‘시당 간부, 법다루는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재판소 사람들, 군인들’이라는 것이다. 당간부, 책임비서, 조직비서들의 경우 돈을 내고 배급을 받기는 하지만 양정사업소에서 매달 100kg씩 공급이 된다고 한다.

공장 기업소는 가동률이 20-3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장기업소 종업원의 20-30% 만이 월급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과 군인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월급 액수의 차이를 떠나서 월급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로 된 것이다. 탈북자 박00의 경우 다니던 피복공장에서는 아무도 월급을 못받았다고 한다.⁴⁰⁾ 공장의 간부들도 월급이 없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산다는 것이다.

결국 평양은 대부분 국가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인 반면 지방 도시들은 공장 기업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정상 출근 하는 부문의 종사자들은 7·1조치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의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암시장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장 기능에 적응한 사람과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있

40) 김0희 증언.

다.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정상출근하여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례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장사는 영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지방의 주민들은 불만이 더 많아졌다. 절대적인 빈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지방 주민들은 월급도 없이 땅 뒤져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중국 왔다갔다하면서 먹고 산다는 것이다.⁴¹⁾ 그에 반해서 농촌의 농민들은 토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우며, 의식의 차이가 많이 난다. 농민은 중국 가면 죽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순종적이다.

2. 계급간 갈등의 심화

북한에서 계급간의 갈등을 조장시킨 요인은 크게 보아 두가지이다.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숭배 전략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위하여 사용한 전략중의 하나가 김일성과 김정일은 무오류의 지도자인데 반하여 경제난 등의 문제 책임을 하위 간부들에게 전가했는데 이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극도로 우상화한 반면, 경제난 등 문제의 책임을 모두 하위의 간부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의 세도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을 지속적으로 질타한 결과,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즉, 김일성과 김정일만 혼자 신성하고 나머지 간부들이 대신 욕먹기식이다.

41) 탈북자 박0섭의 증언. 2003. 7. 18.

1970년대 후계구도 준비할 때만 해도 김일성이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이 세상입니다”라고 말하면 북한주민들이 이 말을 수긍했으나 1980년대 들어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 세상은 간부들의 세상”이라고 말한다고 한다.⁴²⁾

둘째, 최근 경제난의 상황에서 희소한 가치를 둘러싸고 간부와 주민간의 생존경쟁이 더 심화된 결과 두 계급간의 적대의식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자 권력이 많은 지배 계급은 정당한 방법과 부정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희소가치를 독점함에 따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10% 정도는 권력 있고 잘 사는 계층, 40%는 장사·밀수해서 그럭저럭 먹고사는 계층, 나머지 절반은 매우 어렵게 사는 계층이다. 북한 주민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간부와 비간부가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간부와 인민 대중간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주민들이 “최근 3년이 해방 전보다 살기 힘들다, 원한에 사무친다” 라는 등 절대적 빈곤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계층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간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의 불만은 주로 김정일 이하의 하위 간부들에게 지향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셋째, 북한의 간부들은 일반주민들에게 매우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간부들에게 대한 적대감이 더 심하다. 가령,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철도안전원의 단

42) 이철승 증언.

속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 북한 주민들은 철도안전원 시장을 기동순찰하는 안전원을 제일 미워한다고 한다. 군인들도 주민들의 기피대상이다.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닳치는 대로 흠쳐 간다고 한다. 이러한 군인을 토비라고 부른다고 한다.⁴³⁾

이런 이유로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간부에 대한 적대감이 심한 편이다. 주민들은 간부들에 대해서 내놓고 욕은 못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심하게 욕을 한다고 한다. 간부들에 대해서 거의 다 도둑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아첨으로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로 평가한다고 한다.

또한 백성들은 간부들을 죽일놈이라고 말한다. 백성들은 조금만 장사해도 뺏고 단속하지만 간부들은 더 크게 장사해도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간부들은 기존의 제도와 조직을 활용하여 장사를 하는데, 사무실의 전화로 리의 창고장, 작업반장들에게 쌀 몇가마를 보낼테니 차로 실어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면 밑의 사람들이 지시대로 들어준다고 한다. 장사를 해도 공식기관을 활용하여 장사를 몰래하되 신사적으로 장사한다. 국가의 제도에 기생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북한주민들은 간부들을 ‘지주같은 새끼’, ‘서림’ (임직정에 나오는 간신배) 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우리나라는 중간다리가 문제야” 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면 간부 욕하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 정면에서는 반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당일군과 싸우면 당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받기 때문이다.⁴⁴⁾

43) 김난애(과학기술위원회 국가품질감독원 사무원, 1997.10. 귀순) 증언.

44) 김정훈 (라흥철도공장 직맹위원장, 2003.4. 탈북) 증언, 2003. 10. 27.

간부들의 허위보고 때문에 못산다고 간부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간부들이 개인 출세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잘되었다고 허위 보고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이러한 적대감 때문에 간부들은 주민들을 두려워한다고 한다. “모든 인민이 반동으로 느껴진다”며 거주지역에 쇠창살과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일반 주민들의 불만 고조에 따른 신변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간부들은 주민들에게 맞아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당간부, 보안기구들의 가족 등 400만-500만 핵심계층 엘리트들은 북한에 변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남쪽으로 도주할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에서 조직적인 저항은 일어나기 힘들지만 개인적 차원의 복수는 이미 곳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안전일꾼, 보위일꾼, 당일꾼들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간부들은 밤시간이 되면 밖에 다니는 일이 없다고 한다. 함경도 지역 일부에서 사보타지도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간부에 대한 적대행위의 예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외교부 관료들이 간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 때문에 출근시 적위대복을 입고 출근했다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한다.

탄광의 경우 중앙당에서 간부들이 선전교양 나오면 돌아가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고 한다. “쌀을 가져와서 내 목에 묻은 석탄가루나 씻어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중앙당 일꾼들이 해당 지방에 가서

45) 이관문(33세, 함북 평산군 원자력공업부 남천화학기업소 10·19광산 노동자, 1998.5.12. 귀순) 증언.

선전사업을 할 경우 인민들의 반감이 심한 정도가 마치 일제시기 직후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당 선전사업은 비공개적으로 요소 요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핵심 일꾼만 모아 놓고 강연하는데 그친다고 한다.⁴⁶⁾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반감 때문에 농촌위원회 부위원장들이 농촌 현지에 나가지가 무섭다고 한다. 인민들의 반감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밑에서 잘 집행되지 않는다. 책임진 사람만 추궁을 받게 되므로 먹을 것이 있는 자리가 아니면 간부도 잘 하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간부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간부들이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김정일은 자기 정책은 옳은데 하위 간부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한다고 간부들을 자주 숙청한다고 한다. 결국 위에서 억누르고 밑에서 저항하기 때문에 간부를 해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⁴⁷⁾

북한의 권력 엘리트층은 백성들의 이러한 불만과 잠재적 폭발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폐쇄주의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일부의 복잡 군중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인민 대중에게 동시에 기대된다. 북한의 권력 엘리트층은 자신들의 배타적 특권 행사와 백성들에 대한 억압정책이 야기시킨 사회갈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6) 이수동(이탈리아주재 북한 공관원, 1998.2. 귀순) 증언.

47) 강국인 (회령, 전동기공장 자재 인수원, 2003.2. 귀순) 증언, 2003. 7. 3.

Ⅷ.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김일성 사후 지난 10년동안 북한 사회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변화의 주요 동인은 경제난이다. 사회주의체제의 토대 구실을 하던 중앙계획경제가 붕괴하자 상부구조의 사회주의체제의 원형이 무너져내리고 있는 셈이다.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되자 주민들은 생계의 자구책으로 암경제를 발달시켰고, 암시장 경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암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공식부문으로 양성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조치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인데 7·1조치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사회 변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제도 면에서 경제난으로 형클어진 경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취한 7·1조치를 통하여 유명무실하던 배급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보수제도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제와 유사한 노동보수제를 도입하였다. 주체사상과 같은 이념과 도덕적 인센티브로 노동을 동원하던 과거의 정책이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둘째, 사회의식의 면에서 당과 수령에 충성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배급을 기대하던 북한주민들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가치관의 정의라고 본다면 북한주민들이 과거에

는 당에 충성하여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사회심리의 면에서 배급도 주지 못하는, 정당성 없는 체제를 소리내어 비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체제를 이반하고 있는 면중복배의 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쟁이라도 나서 이 모순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발달시키고 있다.

넷째, 생계를 위한 사회일탈과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간부들로 대표되는 지배계급과 일반주민들의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 갈등이 북한사회 갈등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북한의 간부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간부들이 부패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간부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권력으로 희소가치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숭배를 위하여 경제난 등 체제문제의 책임을 하위간부에게 전가하는 수법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간부들은 위와 아래에서 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는 제도는 자본주의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양식은 시장주의적 실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인주의 자구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된 현실에서 가장 아이러니컬한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명제에 대한 주민들의 변화된 인식이다. 과거에는 정치적 구호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노동해서 번 돈으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자기자신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는 것이다. 지배이데

올로기의 허위의식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허위의식적 구호를 본질로 인식하고 각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사회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사회 변화의 주 동인은 경제난이지만 북한의 경제난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셈이다. 사회주의적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7·1조치가 북한 내부의 요구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남북관계에서의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북한 당국에게 경제지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하고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당국에게는 북한이 7·1조치 및 경제성공을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7·1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수혈이 필수적이며 대외적 수혈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내부정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설득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 10년

- 북한의 문화예술 -



임 순 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정권 10년 : 북한의 문화예술

I. 머리말

196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의 문화예술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문예부문은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나타내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지도체제화는 그가 1960년대 후반 이래 전개된 문예부문에 대한 혁명을 주도하면서 본격화된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김정일은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문예이론 저술 및 담화¹⁾ 발표, 작품 창작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북한의 문예혁명을 이끌었으며, 그 결실로써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읊긴 혁명소설, 혁명영화와 <피바다>식 가극, <성황당>식 연극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된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지도체제가 공고화된 것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대내외적으로 공식화되면서부터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문예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보다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지적’이

1) 김정일이 1964년 4월부터 1973년 사이에 발표한 전체 저작의 76%(83편)가 사회문화 관련 문건이며 이 가운데 68편이 문예관련 문건으로 이 시기 전체 저작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김병로, 「김정일저작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49-50 참조.

빈도수를 더해감에 따라 문예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단일 지도체제 공고화가 뚜렷하게 가시화되며, 이후 김정일의 문예부문에 대한 지도 내지 지적이 곧 당의 문예정책과 문예창작의 기본원리로 절대화 되기에 이른다.

196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 온 김정일의 문예부문에 대한 지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된다. 이는 김정일이 저술했다고 하는 「무용예술론」, 「미술론」, 「음악예술론」, 「주체문학론」 등의 이론서를 통해서이다. 이 저술들은 무용, 미술, 음악, 문학 등 예술의 각 장르를 주체사상과 주체미학에 입각하여 재구성한 이론서들이며, 특히 「주체문학론」은 대표적인 문예이론 저술이다. 「주체문학론」에는 1980년대 후반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 속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가 견지해야 할 주체문예 창작의 기본과제 및 원칙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와 함께 당·정·군에 걸쳐 명실공히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기까지 김정일은 위에서와 같이 당의 선전선동 및 문예부문 장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문예부문 장악에 주력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예술적 취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문예부문 장악에 힘을 쏟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후계체제 구축 및 공고화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당·국가의 선전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찬양 및 우상화 도구로서 문예 활용 가치의 극대화를 노린 때문이며 북한

의 문예작품 실태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김일성 사후 10년을 돌아볼 때 북한의 문예부문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사실상 1960년대 중반 이래 30여년에 걸쳐 김일성 유일체제 및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북한의 문화예술이 적극 활용되었으며, 그와 같은 문화예술을 주도한 장본인이 김정일이라고 할 때,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종래 고수해 온 문예이론 및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할 만한 설득력 있는 명분도 없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기존의 문예이론 및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는 그 자체가 김정일 스스로 '위대한 사상·문예이론가'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겪어 온 크고 작은 정치·사회적 변화는 문예부문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김정일 정권 10년 동안 북한의 문화예술 동향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II. 김정일 시대 북한의 문화예술 실태

1.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북한의 문화예술은 북한주민의 사회화의 주요 매체로 지배가치의 정당성 지지와 대중선동 및 대중동원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문학에

술인들은 ‘당과 인민의 이익의 옹호자,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인민들을 교양하고 공화국을 사수하는 투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문학예술인들에게는 “당의 정책적 요구와 정세의 흐름을 똑똑히 알고 그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또한 북한 문예창작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는 당의 영도이다. 문예창작에 있어 당의 영도란 작가, 예술인들이 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북한의 문예작품은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임을 뜻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북한의 문예작품은 당 정책을 지지, 홍보하고 당 정책과 관련된 정치·사회적 실상을 반영한다.

위와 같은 북한 문화예술의 기능 및 문예창작에 대한 당의 영도를 논거로 하여 이 글은 김정일 정권 10년 동안의 북한 문화예술 실태를 논하기에 앞서 같은 기간에 나타난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시대 개막

1994년 7월 김일성의 예기치 못한 사망은 북한 사회에 대해 충격 그 자체였으며, 당시 국제사회는 대체적으로 북한 정권의 조기 붕괴를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전망은 항일무장 투쟁이나 주체사상 창시 등과 같은 ‘위대한 업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도 지니지 못하였고 군 경험도 없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예견되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개연성 높은 군부의 반발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3년의 유혼통치기간을 통해 김정일은 신격화된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그 영향력을 사회·체제 안정 및 후계체제 공고화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었고 1998년 9월 헌법개정과 함께 국방위원장에 공식 취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후계수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

김일성 사후 이래 김정일이 수령의 후계자, 후계수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 강화하는 데 있어 적극 활용된 기법은 김일성과의 동일시 및 김일성과의 차별화이다. 북한은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생전에 김일성이 지녔던 수령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부여하는 한편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을 다양하게 개념화함으로써 김일성과의 차별화를 피하며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시키었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새로이 개념화된 정치방식이란 선군정치, 음악정치, 과학중시정치 등을 말한다.

〈선군정치〉

1998년 9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직후 김정일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공식화된 선군정치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며 “선군정치는 단순히 군사를 위한 군사,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정치”로서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정치, 일석다조의 현명한 정치”²⁾로 되어 있다. “주체사상의 탄생만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20세기의 위대한 철학”³⁾으로 규정되기도 한 선군

정치는 “제국주의와 반제자주 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투쟁의 시대”에 즈음하여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 속”에서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된 통치전략 차원의 정치방식이라 하겠다. 또한 선군정치의 구현에 있어 강조점은 전체 인민이 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인 바, 이는 곧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데서도 제일이고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데서도 맨 앞장에 서며 온 사회에 혁명적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세워나가는데서도 제일기수로 되고 있는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전체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 매진할 것을 뜻한다.

〈음악정치〉

북한은 2000년 2월 7일, 김정일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성 발표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보지 못한 우리식의 특이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노래로 이겨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김 총비서의 ‘음악정치’가 가져온 자랑찬 결실”⁴⁾이라고 밝힘으로써 ‘음악정치’를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으로서 공식화하였다.⁵⁾ 북한은 김정일이 “음악과 정치, 총대와 음악을 완전무결하게

2) 『조선중앙방송』, 1998. 10. 20,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읽기』 (서울: 지식공작소, 2000), pp. 124-126 에서 재인용.

3) 최길상, “새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1.4), p. 5.

4) 『연합뉴스』, 2000. 2. 8.

5) ‘음악정치’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의 문예잡지에 등장하였다.

결합시킨 정치지도자”이며, “한편의 노래를 통하여 선군의 사상으로 천만심장을 격동시키고 그 정서적감화력으로 시련의 폭풍우를 몰아낸 그이의 선군음악정치는 참으로 위대하다”고 주장하며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한다.⁶⁾ 또한 북한은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노래는 “수천수만의 총포”와 같았고 “몇천몇만 톤의 식량”을 대신함으로써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노래를 통해 혁명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였는 바, 김정일의 음악정치는 곧 ‘인간사랑의 정치’라고도 한다. 김정일의 음악정치는 “인민들의 감정 정서에 맞고 인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좋아하는 음악, 인민들이 즐겨부를 수 있도록 쉬운 곡조로 만들어진 노래”를 창작, 보급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혁명의식 약화 및 사상이완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안된 정치방식이라 하겠다. 또한 북한은 “자신의 첫 사랑은 음악”이라고 한 김정일의 예술적 재능을 정치와 연계시킴으로써 김일성과 차별화된 ‘영도의 예술가’로서의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기 위한 의도에서 음악정치를 개념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김정일의 음악정치에 있어 핵심은 ‘선군혁명의 나팔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이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과 ‘조선인민군협주단’에 대한 김정일의 배려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중시정치〉

과학중시정치는 1996년 11월 “나는 과학을 중시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 이후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과학중시정치는 강

6) 김강혁, “힘있게 나뭇기라 선군시대 음악정치의 기폭어여,” 「조선예술」(2003. 1), p. 9.

성대국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그 의의를 더해갔으며, '조선중앙방송'(2001.5.19)은 정론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를 통해 정보산업 발전을 역설하면서 '주체의 과학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위에서와 같은 정치개념들 외에도 김정일의 정치방식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자주정치' 등으로 호칭되며, 김일성 생전에 김정일의 정치방식으로 공식화된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그 의의를 발하고 있다. 한 예로 '평양방송'(2001.9.10)은 김정일의 광폭정치로 민족대단결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시대에서 화해시대로 전환된 것은 광폭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 식량난과 사회적 파급현상

주지하듯이 199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은 극심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사자가 발생 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종래와 마찬가지로 군중운동을 전개하였는 바, '고난의 행군', '사회주의 강행군', '제2의 천리마대진군', '사회주의붉은기진군' 등이 그것이다. 2001년 들어서도 북한은 '강성부흥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군중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락원의 봉화', '대흥단정신', '대흥단기풍', '대흥단 일본새'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파급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와 동요계층의 증대,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양의 급증과 이에 따른 주민 상호간 정보유통의 증대,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남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방북이 잦아짐에 따라 야기된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식량난이 초래한 공식 배급체계의 붕괴와 이에 따른 장마당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가부장적 국가관에 바탕을 둔 통치이데올로기의 정당성 상실, 공식 배급체계의 기능 약화로 인한 사회 통제 이완, 장마당에서의 상호 접촉 및 정보 교환 증대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파급현상들 가운데 특히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는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과 함께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려한 북한당국은 1990년대 말 이른바 ‘모기장’론을 강조하기에 이른다.⁷⁾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도 이른바 ‘모기장 전략’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소련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한 ‘모기장 전략’은 자본주의 풍조가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7) ‘모기장론은 1999년 6월 1일자 「로동신문」의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논설의 요지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는 세계제패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자본주의 황색비람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튼튼히 치고 “사회주의사상문화전선을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가자”는 것이다. 요컨대 ‘모기장론은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라 자본주의 황색비람이 들어올지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르주아사상문화(제국주의사상문화)의 사소한 요소(모기)도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면, 1990년대 말에 나온 ‘모기장’론은 부분적 체제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 주민의 혁명성·이념성 약화를 우려하여 강조된 것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장’론은 북한 주민들이 부분적 체제개방 확대에 따른 외부사조·문물과의 접촉 과정에서 겪을 수도 있는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예방책으로서의 의의도 엿보이고 있다.

다.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 개선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50여 년 동안 극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를 유지해 온 남북관계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남북정상이 합의하여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지향하겠다는 남북 정상의 결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비록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2000년 6월 이래 남북관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인적교류의 규모가 확대되고 빈도가 높아감에 따라 상호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고 있음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물론 남북한간 인적교류는 주로 남측사람들의 방북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나 문예부문과 체육부문, 경제부문 등에서는 북측사람들의 방남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04년 3월 현재 9차례에 걸쳐 성사된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남북한간 이념적 적대감 해소에 기여한바 적지 않으며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에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1년 초 김정일은 “지금은 1960년대와 다르므로 지난

날의 낡은 일본새로 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선 것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는가 하면, 중국 상해시 방문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기도 하였다. 이후 김정일의 ‘신사고’로 상징되는 북한사회의 변화는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으며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라.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악화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은 유럽연합국가들과의 연이은 수교로 외교적 고립은 어느 정도 면했으나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미·일과의 관계개선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01년 출범한 미국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에 따라 북미관계는 극도의 대립양상을 보였으며, 2002년 10월말 이래 심화된 북핵문제로 인해 북미대결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반미사상 교양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3년 6·25전쟁 발발 53주년 때에는 100만명이 참석한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대북압박을 규탄하는 반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대표적 반미영화인 ‘월미도’를 재상영하는가 하면 대동강에 전시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와 신천전쟁박물관을 단체관람 시키는 등 대미적개심 고취 및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문화예술의 주요 동향

가. 새로운 개념의 문학 등장

〈추모문학〉

김일성 사후 북한은 문학부문에 김일성의 업적 및 위대성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며 김일성을 추모하는 작품을 양산하였는바, 이와 같은 작품들을 총칭해 추모문학이라고 한다. 추모문학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의 영생을 기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추모문학 작품들 가운데에는 김정일이 김일성과 동일한 수령이므로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여 김일성의 유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추모문학은 김일성을 추모하기 위해 새로이 개념화된 문학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통성 확립 및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념화된 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김일성을 극적으로 찬양하고 신격화하며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내용의 추모문학이 특히 김일성 사후 3년간의 유훈통치기에 문학예술부문에 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단군문학〉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단군을 크게 부각시키었으며 김일성 사후에도 평양에서 발굴됐다는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복원하고 평양을 민족사의 시원지로 선전하였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정권의 민족사적 정통성 확보와 이를 통한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의도에서이다. 또한 북한은 수령 김일성을 단군과 비견하는 건국 위인, 곧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추앙함으로써 수령과 후계수령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김일성 사후 3년에 걸친 유훈통치기의 북한문학을 특징짓는 새로운 개념인 단군문학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의도가 북한 문학작품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태양민족문학〉

태양민족문학은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새로이 개념화된 문학이다. 북한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모시여 드디어 태양문학의 시원을 맞아 주체사실주의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에 의해서만 빛나게 계승되며 태양문학은 태양위업의 계승속에서만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수 있다. 우리 민족문학은 태양위업계승의 위대한 향도의 태양,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를 맞이하여 태양민족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며, “우리 작가들은 태양의 위성작가, 태양민족문학의 창조자들이다. 태양민족문학은 위대한 령도자의 문학, 강성대국의 문학이며 주체의 인간학”이라고 한다.⁸⁾ 태양민

죽문학에서 창작의 기본과제는 ‘수령형상창조’이며, 특히 ‘백두산 3대 장군’,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위인상을 최상의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형상할 것을 촉구한다.

〈선군혁명문학〉

북한 문헌에 따르면 선군혁명문학은 선군정치시대를 반영한 문학이며 김정일의 선군영도업적을 반영한 영도자의 문학이다.⁹⁾ 선군혁명문학이 새 형의 문학으로 태동하여 형상을 펼친 것은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 20세기 마지막 연대의 6년”이라고 한다.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전례 없이 주체문학의 성과를 높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군혁명문학의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선군혁명노선을 구현하는 선군혁명문학의 주요 형상대상은 첫 번째가 김정일이다. “선군혁명문학의 기본의 기본” 역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형상창조’, 곧 ‘수령형상창조’라는 것이다. 김정일을 형상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고 그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김정일의 위대성과 업적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형상대상은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를 형상하는 데 있어서는 ‘인민군인들의 혁명의 수뇌부 사수정신,

8) “2천년대가 왔다 모두다 태양민족문학건설에로!,” 『조선예술』 (2000. 1), p. 4.

9) 선군혁명문학은 새로운 사조의 반영이 아니라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며, 김정일이 사상과 이념, 영도업적에 의하여 그 특징과 성격이 규정지어지고 명명되는 독창적인 새로운 문학이라고 한다. 최길상,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2001. 1), p. 5.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 등 혁명적 군인정신¹⁰⁾을 잘 그려내야 한다. 특히 수령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와 혁명적 투쟁기풍, 도덕적 품모를 잘 형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형상대상은 인민들이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 그리고 원군기풍을 잘 형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선군혁명문학은 비전향 장기수의 투쟁, 조국통일, 반제계급교양, 군대와 관련된 공산주의 미풍 등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을 강조한다.

선군혁명문학은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해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이 불리하게 조성됨에 따라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통치전략 차원에서 채택된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를 문학부문에서 구현하고자 개념화된 새로운 문학형태이다. 또한 선군혁명문학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동하여 전례 없는 창작성과를 나타냈으며 선군문학혁명의 기본과제 역시 김정일의 위대성 형상이라고 할 때, 김일성 사후에 새롭게 등장한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등과 마찬가지로 선군혁명문학 역시 고난의 행군기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즈음하여 최고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위상을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하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념화된 문학형태라고 하겠다. 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그리고 선군혁명문학은 모두가 한결같이 '수령형상창조'¹¹⁾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

10) '혁명적 군인정신' 은 선군혁명시대의 사회주의조선의 시대정신으로서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의해 창조된 사회주의 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는 정신이라고 한다. 리현순, "문학예술에서의 선군혁명로선의 구현," 「조선예술」(2001. 4), p. 17.

고 있으며 특히 선군혁명문학에서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구현한 작품 창작을 핵으로 하고 있음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나. 인민군대의 문화예술 활동 강화

선군혁명문학예술은 ‘고난의 행군’시기 혁명군대에서 창조되고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 새 시대의 문학예술이라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일 정권 10년 동안 북한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난 인민군대의 활동은 괄목할 만하다. 이를 보면 인민군 소속 작가들이 대거 부상하였으며 인민군 소속의 ‘4·26영화제작소’ 공연팀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특히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의 대부분이 인민군 소속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것이며,¹²⁾ 잘 알려진 작품인 경희극 〈편지〉, 〈동지〉 등의 제작팀도 인민군 소속 ‘4·26영화제작소’ 공연팀이라고 한다. 또한 1995년 12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전문 합창단으로 독립한 예술단체로서 ‘선군시대 나팔수, 선군시대 문학예술 창조의 전위대’라고 하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은 김정일의 각별한 배려 속에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일의 빈도 높은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 공연 관람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최근 북한 최고의 예술단체로 부상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은

11) 북한은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수령은 인류 력사에서 오로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뿐”이며 문학부문에서의 첫 번째 과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형상창조사업이라고 한다. 김려숙,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속에서 위인형상을 부각하는 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 「조선문학」 (1997. 2), p. 63.

12) 한윤남, “주체적 문학예술의 대화원 속에 활짝 꽃피난 90년대 영화예술,” 「조선예술」, (2000. 1), pp. 11-12 참조.

주로 김정일 업적 및 위대성 찬양, 김정일에 대한 충성 다짐 등을 노래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003년 창작 발표된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이 있다.

북한은 특히 선군시대가 펼쳐진 1990년대 말, 인민군대 안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군대와 인민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수령절대숭배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기념비적 명작들을 다량 창작함으로써 선군시대의 기수,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였는 바, “조선인민군 창작가, 예술인들이 발휘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것은 창작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강조한다. 또한 「로동신문」(1998.6.5)은 “군대예술활동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결사옹위정신, 명령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이 그대로 맥박치는 예술활동”인 바, “군대예술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강화될때 온 사회에 혁명적 량만이 넘친 문화정서생활을 꽃피워 나갈수 있다”고 하며 특히 각 기관·단체들이 군대예술활동을 따라 배우기 위한 예술소조활동을 더욱 강력히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선군사상 구현 작품 창작

북한의 문화예술이 김일성 사후 등장한 김정일의 선군사상·선군혁명영도·선군정치를 반영한 선군혁명문화예술을 표방한 이래 북한의 문예작품들 가운데 대다수는 선군사상·선군혁명영도·선군정치를 구현한 작품들이다. 이는 특히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그러하며, 2003년 만들어진 영화의 대부분도 선군시대의 군인정신을 구현한 내용이다.¹³⁾ 선군사상을 구현한 영화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혁명적 군인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함양토록 하는 내용의 영화들로 “총폭탄정신, 육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예술적 형상으로 일반화하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무적의 힘과 용맹을 안겨 준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충성심을 형상함으로써 선군시대의 현실과 정신을 구현한 작품들 가운데는 경희극이 새로운 경향으로 부각되었으며 주요 작품들로는 〈약속〉, 〈편지〉, 〈동지〉, 〈웃으며 가자〉 등이 있다. 또한 음악부문에서도 선군사상을 구현한 작품들이 대량 창작, 발표되었으며 대부분이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장군님 뵈고 싶습니다〉,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등과 같은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김정일의 위인적 품모와 김정일에 대한 숭배심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특히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은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한 작품으로 “수령송가 창작에서 최대절정을 이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명작”¹⁴⁾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 외에 선군사상을 구현한 미술품들로는 “백두산 3대장군의 업적과 덕성을 형상한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조선화〈세기를 이끄신 2만 5천리〉,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의 운명〉,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선전화〈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등이 있다.

13) 특히 선군사상을 훌륭하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은 4·25예술영화촬영소의 〈녀병사의 수기〉는 2003년 북한 영화계의 최고 화제작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영화를 네 번이나 관람하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녀병사의 수기〉에 대한 평가는 한룡숙, “체험과 탐구가 낳은 열매-예술영화 〈녀병사의 수기〉가 성공한 비결을 찾아보며,” 「조선예술」(2003. 8), pp. 28-30 참조.

14) 리학범,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에 대한 반향: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명작-불멸의 혁명찬가,” 「조선예술」(2003. 4), p. 49.

라. 고난 극복 투쟁 독려 작품 창작

김정일 시대에 창작, 발표된 문예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주민들에 대해 고난 극복 투쟁을 독려하는 작품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고난의 행군을 진행하는 당원·근로자들의 투쟁모습,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당의 경제전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투쟁모습 등을 담고 있으며, 고난의 행군시절을 돌아보며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고 새로운 정신, 일본새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나아가자는 내용, 경제난과 ‘미제의 반 공화국 고립 압살책동’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혁명적낙관주의’로 극복하고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해 나가자는 내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⁵⁾ 이와 관련된 영화작품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강당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 나가는 자강도 인민들의 투쟁 내용을 담은 예술영화〈자강도 사람들〉, 고난의 행군시기에 청년영웅도로를 건설한 청년 건설자들의 투쟁 모습을 담은 예술영화〈청년들을 사랑하라〉(1·2부), 그리고 고난의 행군시기에 제작된 최고의 영화로 평가받는 인민상 수상 작품 예술영화〈대흥단 책임비서〉 등이 있다. 또한 감자혁명 중심지인 양강도 대흥단군의 아이들 이름을 ‘대흥’과 ‘홍단’으로 짓게 된 사연을 담

15) 2001년부터 주민사상교양의 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텔레비전 연속극의 소재는 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내와 기술혁신, 자력갱생 강조 등 실리사회주의를 다룬 것들이며 특히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는 대규모의 염소목장 건설(래일의 개척자들), 토지정리사업(뜨거운 평야), 외국과의 합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조국땅 한끝에서), 컴퓨터기술 강조(1번수) 등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최근 조선중앙 TV 연속극 제작 및 방영내용 분석 평가” (2004. 2. 21).

은 노래 〈대홍이와 홍단이〉, 자력갱생의 표본인 자강도와 대홍단을 노래한 가요 〈자강도는 내나라의 자랑도일세〉, 〈대홍단은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일이 더 고아〉, 〈준마처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등도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며 고난 극복 투쟁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들이다.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학작품으로는 서정시 〈끝나지 않는 행군길〉이 있으며, “인민의 어려운 생활난을 정서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출근부에 도장을 찍으며〉가 있다.

마. 통일주제 작품 창작 강화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새로운 신심과 낙관”으로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바, 조국통일주제 문예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 지향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비교해 볼 때 이전에는 남한을 소재로 한 문예작품들은 주로 남한 정치·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다루는 편이었으나, 정상회담 이후로는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 창작에 있어서는 〈통일무지개〉, 〈별보러 가자〉, 〈남해가의 붉은 꽃〉, 〈승리의 열병식〉 등과 같은 김정일에 대한 “전 민족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 무한한 충성심”을 반영한 가요들과 〈민족 대단결의 노래〉, 〈범민련가〉, 〈민족의 단결로 통일을 이루자〉 등과 같은 전 민족의 대단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통일주제 가요들을 더 많이 창작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통일주제 가

요들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의 구성”인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두다 태양을 따르면 통일이 됩니다”(〈우리의 단결은 통일입니다〉), “꿈과 같이 만났다 우리 헤어져가도 해와 별이 찬란한 통일의 날 다시 만나자”(〈다시 만남시다〉) 등이 그러하다. 통일주제 영화작품의 하나인 예술영화 〈봄날의 눈석이〉(1,2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민족의 대단함은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따를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소망도 그 길에서 성취할 수 있음을 격이 있게 확증”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⁶⁾ 미술부문에서도 통일주제 작품들이 양산되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대형조선화 〈범민족대회〉의 속편들과 선전화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 등이 있다.

바. 기타 주요 동향들

위에서와 같은 주요 동향들 외에도 지난 김정일 정권 10년에 걸쳐 북한 문화예술계에는 다음과 같은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개인전시회 및 개인발표회 점증 추세

북한에서는 미술, 음악 등의 부문에서 개인 전시회, 또는 개인 발표회를 갖는 것이 특별하고도 드문 예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는 이전보다 빈도 높게 개인 전시회 및 발표회가 개최되는 추세이며 작곡집, 시집 등과 같은 개인 작품집

16) 심영택, “민족대단합만이 조국통일의 지름길임을 밝힌 품위있는 형상세계,” 「조선예술」(1999. 8), p. 56.

도 발간되고 있다. 또한 「조선예술」, 「조선문학」 등 문예잡지에 개인 신상에 대한 글이 수록되는가 하면 과거에 ‘4·15문학창작단’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작품들을 1990년대에 복간하면서 개별 작가들의 이름을 명시하기도 한다.

둘째, 새로운 예술 장르의 성립

김정일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예술장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합창조곡’ 등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1999년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기존의 집단체조에 예술적 공연을 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집단체조에서 파생하여 성립된 새로운 공연예술 장르이다.¹⁷⁾ 첫 작품은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다룬 〈백전백승 조선로동당〉(2000)이며, 2002년에는 ‘민족을 키워드로 삼아 북한의 역사를 다룬 〈아리랑〉이 공연되었다. 특히 〈아리랑〉은 외국인의 관람을 전제로 한 ‘대외공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양상을 보인 것을 평가되고 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인 ‘합창조곡’은 “절가화된 송가와 장중하면서도 호소력이 풍부한 관현악과 합창형식이 배합된” 것으로 기존의 위인 송가 음악 형식을 벗어난 새롭고 독창적인 수령송가창작 형식이라고 한다.¹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이 창작한 합창조곡

1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공연예술의 변화양상 연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중심으로」(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참조.

18) 리선영, “선군음악포성은 오늘도 장엄하다,” 「조선예술」(2003. 12), p. 22.

〈선군장정의 길〉이 있다.

셋째, 대미 적개심 고취 및 체제결속 강화 작품 창작

남북분단 이래 북한의 문예작품 속에서 ‘미제’는 언제나 반대 구탄의 대상이었으므로 최근에 창작, 발표된 많은 작품들이 대미 적개심 고취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새로운 동향일 수는 없다. 그러나 “미제의 반 공화국 고립 압살정책”이 원인이라고 하는 경제난이 악화되고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대미 적개심 고취 및 체제결속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작품 창작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대표적인 반미영화인 〈월미도〉를 재상영 하는가 하면,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압박을 비난하고 대미결사항쟁의 의지를 밝힌 기록영화 〈조선의 대답〉과 북한 주민들을 “반제반미 투쟁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서 인식교양적 의의가 큰 영화”라고 하는 예술영화 〈승냥이〉를 제작, 발표한 바 있다.

위에서와 같은 동향 외에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1996년 10월 창단된 인민보안성 산하 여성취주악단이다. 이는 백 수십명의 여성 나팔수로 구성된 북한의 첫 여성취주악단이라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또한 1990년대 말 이래 「조선예술」, 「조선문학」 등 문예잡지에 서구 사조·문물 및 문화예술계를 소개, 해설하는 난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내용도 비교적 객관적·긍정적인 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체제 개방 확대와 함께 서구 사조·문물과의 접촉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충격 내지 갈등 완화를 위한 일종의 예방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Ⅲ. 김정일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적 양상: 지속과 변화¹⁹⁾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김정일 정권 10년을 돌아볼 때 북한 문예부문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북한은 여전히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 정립, 구체화된 ‘주체의 문예관’과 ‘주체사실주의’ ‘종자론’ 등을 창작 실천의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김정일이 저술한 문예이론서들을 “우리 시대 문학예술창조의 백과전서적인 교과서이며 명작창작의 불멸의 대강”²⁰⁾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김일성 사후 새로이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예술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수령형상창조’ 작품이다.²¹⁾ 음악부문에서의 수령형상창조 작품은 주로 가요로 창작된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김일성의 업적과 위대성을 찬양하며 영생을 기리는 내용의 노래, 유훈관철의 의지를 담은 노

19) 앞 장에서 북한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동향을 논하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밝히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문예작품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20)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으로 선군시대를 빛내이자,” 「조선예술」(2002, 5), p. 6.

21) 북한은 정치사업의 핵심 수단인 당의 노선과 정책은 무오류성을 지닌 수령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의 구현이기 때문에 문예정책에 있어 수령형상창조는 최고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백두산3대장군’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 창작을 주요과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작품창작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형상대상으로 하고 있다.

래, 탄생(태양절)을 기념하는 노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다짐하는 노래들과 김정일을 찬양, 우상화하는 노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 등이 창작, 보급되었으며 특히 유훈통치 기간에 발표된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음악에서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여 수령의 후계자 형상을 창조한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최근 김정일의 탄생을 기념하여 창작, 보급된 <선군장정의 길>(2003.2)에 대해 북한은 위인 송가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기악음악분야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교향곡분야에서 수령형상창조문제를 보다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주체기악음악의 혁명적 성격을 높이었다고 한다. 관련 작품으로는 교향곡 <경례를 받으시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항일대전의 승리>, 현악4중주 <해빛같은 미소 그립습니다>, 관현악 <정일봉의우뢰소리>, <조선의 장군> 등이 있다.

영화부문에서의 수령형상창조 작품은 기록영화와 예술영화로 다량 제작,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수령의 위대성 형상’과 ‘혁명적 수령관 구현’이 핵심주제인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100부작을 목표로 제작, 보급되고 있다. 연극부문에서도 혁명가극 <피바다>를 비롯해,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고 하는 <꽃파는 처녀>,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사랑의 바다>, <어머님의 당부> 등이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 또한 미술부문에서도 두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후 이래 창작되고 있는 ‘수령영생주제선전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작품은 김정일이 높이 평가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문학부문에서의 수령형상창조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김정일과 김일성을 동일시하여 형상한 작품이다. 이는 북한의 시작품들에서 잘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김일성 사후에 창작된 시작품들은 김일성이 김정일을 통해 영생하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화신이라고 형상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치를 강조한다.²²⁾

김일성 사후에 개념화된 선군혁명문학예술에서는 김일성보다 김정일의 업적과 '위대성'을 형상한 '수령형상창조' 작품들이 다량 창작·보급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장군의 노래>, <장군님 뵈고 싶었습니다>,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등과 같은 "위대한 어버이로서의" 김정일의 "위인적 품모"와 김정일에 대한 숭배심을 노래한 혁명송가, 조선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운명>,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선전화<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예술영화 <우물집녀인>과 <나를 부르는 소리>는 이른바 '복잡계층'에 대한 김정일의 은덕과 배려를 형상함으로써 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찬양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선군혁명문학예술 작품의 다수는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 군인정신의 핵이라고 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수령절대숭배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작품들이며, 영화부문의 대표작으로는 예술영화 <비행사 길영조>, <명줄>,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최현편>(1-5부), <우리 정치위원>,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충성심을 형상한 경희극 작품들로 <약속>, <축복>, <동지> 등이 있다. 음악부문에서도 북한은 1980년대 최고

22) 임순희,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78-81 참조.

가요라는 〈동지애의 노래〉를 김정일의 애창곡으로 소개하였으며 1970년대 가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노래가 21세기 영원한 동지애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창조”되었다는 선군문화예술에서는 반제계급교양 주제의 작품과 혁명전통교양 주제의 작품도 비중 높게 창작, 발표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 문예부문에 있어 이론 및 정책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10년에 걸쳐 창작, 발표된 문예작품의 내용면에서는 감지될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징적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

가. 작품의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

지난 10년 동안 창작, 발표된 북한의 문예작품은 모든 장르에 있어 주제 및 소재가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악부문에서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는 1990년대 들어 현저하게 증가한 생활가요의 창작·보급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²³⁾ 생활가요의 창작·보급

23) 1990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사상 교양을 위한 노래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생활적인 노래들을 많이 창작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김정일선집」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63; 북한의 생활가요는 비교적 사상성이 적은 가사와 빠른 템포, 경쾌한 곡조가 특징이며 북한사회의 ‘밝고 건전한 시대정서’를 강조한다.

이 강화됨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노래,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때의 축하노래, 청춘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등 다양한 주제의 가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북한가요에서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는 〈평양은 우리의 고향〉, 〈평양랭면 제일이야〉 등의 평양찬가, 〈농장 벌의 기계화 부부〉,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의 농촌찬가,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일세〉, 〈대홍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등의 지역찬가에서도 나타난다. 이 외에도 조국통일 주제가요,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담은 가요 등이 있으며, 특히 “선군시대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라고 하는 군민일치사상의 구현을 강조한 가요 창작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영화부문에서도 작품의 주제 및 소재가 다양해졌다. 선군시대 청춘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 〈기다리는 처녀〉, 세계 정상에 오른 여자 마라톤 선수 정성옥을 형상한 예술영화 〈달려서 하늘까지〉, 역사물 주제의 영화 〈임진왜란〉, 민간의 전설로 내려온 고려 말의 야담을 계급사관으로 해석하여 영화화한 괴수영화 〈불가사리〉 등이 그것이며, 이 외에도 고아를 양육하는 처녀들의 미담, 최전선 초소 근무 군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집단 탄원한 처녀들의 미담 등 공산주의 미풍을 주제로 한 영화가 제작, 발표되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모교 사랑을 강조한 내용의 예술영화 〈두 제자〉, 대학을 포기하고 버스 운전사가 되어 사회에 봉사하는 청년을 형상한 예술영화 〈사랑의 거리〉, 고유한 미풍양속을 살려 나가는 김치연구사들을 소재로 한 예술영화 〈우리의 향기〉 등도 공산주의 미풍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또한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한 작품으로 예술영화 〈뽕따는 처녀〉, 〈제일바이올린수〉 등이 있으며, 원군기풍을 형상한 예술영화〈기다리는 처녀〉, 〈고

향의 편지》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월남자가족을 소재로 한 작품과 이산가족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종래 월남자가족과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북한의 정책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며 관련 작품으로는 예술영화 〈혈육〉, 〈금희와 은희의 운명〉, 〈우물집녀인〉 등이 있다.

예술영화 〈살아있는 영혼들〉도 특기할 만하다. 이 영화는 1945년 8월 패전한 일제가 광복을 맞아 ‘우키시마마루’를 타고 귀국하던 조선인 5천여 명을 배를 폭파시켜 수장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으로 북한 영화의 새 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 작품이 그동안 제작된 북한 영화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가 소요된 작품이며, 컴퓨터 그래픽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작품이고, 특히 기존의 반일영화작품들과는 달리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소재로 하지 않았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속극 〈수평선〉과 〈평양은 아리랑을 노래한다〉는 이산가족문제를 다룬 작품이며, 연속극 〈열두살〉은 10대의 컴퓨터 수재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산업시대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또한 가정의 불륜을 소재로 한 연속극 〈가정〉은 이혼문제를 다룬 최초의 작품이며, 연속극 〈갈매기〉는 수중발레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부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여성 관련 작품 창작이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군, 여성과학자, 여성 당간부, 여성지배인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권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난 타개를 위한 유능한 여성인력 활용 등을

의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련 작품으로는 연속극 〈귀중히 여기시라〉, 〈엄마를 깨우지 말아〉, 〈따뜻한 우리 집〉, 〈불타는 노을〉 등이 있다. 문학부문에서도 다양한 소재 및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기할 만한 작품으로는 통일이 되고 난 후 남한과 북한 사람이 함께 직장 일을 하는 모습을 경쾌하게 그린 1995년 발표작 단편소설 〈찬란한 아침〉이 있다. 최근 들어 스승과 모교에 대한 사랑을 형상한 작품이 여러 편 발표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며 관련 작품으로는 시 〈나의 모교여〉, 〈나의 선생님〉 등이 있다.

지난 10년에 걸쳐 북한의 문예작품에서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가 추구된 것은 정치성·사상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식적인 체제·수령 홍보 위주의 기존 작품들이 수용자인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함에 따라 대중의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취해진 전략적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0년대 말 이래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및 문물의 침투와 경제난 등으로 인해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며 욕구가 다양해진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사상성·혁명성을 앞세운 기존의 작품들이 사상교양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게 됨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문예작품의 주제 및 소재의 다양화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부분적 체제개방 확대와 그에 따른 외부 사조·문물의 유입을 염두에 둔 대비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한 및 미·일을 비롯한 대서구관계 개선으로 인한 외부사조·문물과의 접촉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문화적 충격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완화 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취해진 대비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 서정성·오락성·대중성 강화

김일성 사후 북한의 문예작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적인 양상은 전반적으로 정치성·사상성이 약화되고 서정성과 오락성·대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서정성은 여성의 생활과 정서를 담은 노래, 어린이에 대한 노래, 젊은이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 등과 같은 생활가요에서 잘 나타나며, 북한의 보통사람들의 생활과 현실을 주제 및 소재로 한 영화작품과 문학작품에서도 잘 나타난다. 문예작품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혁명성과 뜨거운 인간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여 사람의 문화정서교양에 도움을 주자면 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적인 술어나 구호 같은 것을 라렬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²⁴⁾

북한은 생활가요 창작·보급의 의의와 중요성을 퇴폐가요의 침습 방지에 두고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일면 ‘부르조야’ 문예사조의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은 김정일의 언급이 시사하는 바, 문예작품에서의 서정성 강화는 정치사상교양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정서교양 수단으로서의 예술의 기능을 크게 인식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24) 김정일,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0; 북한은 선군영화 제작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영화들은 생활소재의 특성으로 하여 자칫하면 형상이 딱딱하고 메마를수 있는 조건이 다분” 하므로 “반드시 화면과 장면을 시적으로 그려야 한다.” 고 강조한다. 남원철, “선군영화에서 시적화폭창조문제,” 「조선예술」(2003. 3), p. 73.

도 볼 수 있다.

북한 문예작품에서의 오락성·대중성 강화는 생활가요 및 전자악기를 사용한 경음악과 가요의 창작·보급 강화에서 엿볼 수 있으며, 영화작품에서의 오락성 강화와 남녀 애정문제 부각 및 남녀 애정관계의 감각적 묘사²⁵⁾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5년 국립희극극단 창단과 함께 빈도 높게 공연되고 있는 경희극 역시 북한 문예작품의 오락성·대중성 강화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은 문예작품의 서정성 및 오락성·대중성 강화 경향이 북한 문예작품에서의 사상성·혁명성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오랜 동안 변함없이 반복·재생되어 온 사상성·혁명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식적인 작품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거부감으로 인해 사상교양 수단으로서의 문예작품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른 방법론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래와 다름없이 사상성·혁명성을 작품의 핵으로 하면서 다만 작품의 수용자인 주민들에게 사상성·혁명성을 전달, 주입시키는 방법을 간접적·우회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 및 의도는 김정일의 한 담화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세태를 반영한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순수한 생활이나 사랑만을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잡다한 사랑도 혁명의 한길을 함께 걸어가는 청년들의 건전한 사랑일것만큼 그 어떤 순수한 인간생활이나 청년들의 사랑을 묘사하는것은 주체의 창작원칙에 맞지 않습니다.²⁶⁾

25) 특히 2002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황진이>(홍석중)는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남녀간의 성적 접촉을 비교적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Ⅳ. 결론: 전망

북한 문화예술의 기능과 문화예술을 주도해 온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북한 문화예술의 이론 및 정책상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예부문 장악을 통해 후계체제의 구축 및 공고화를 도모한 김정일이 자신이 만들어 공식화한 ‘주체의 문예이론’에 본질적인 수정을 가한다는 것은 후계체제의 정통성 내지 정당성에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의 문예창작은 종래와 같이 주체의 문예이론 및 정책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 및 대외관계의 변화, 체제개방 확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상교양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략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문화예술계는 21세기에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이며, 21세기 문학예술혁명은 곧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선군혁명문학예술이 가능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주의 수호전”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체제수호 역할은 최근의 북·미 대립관계로 인한 체제위기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문예작품 창작의 모든 역량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구현에 집중될

26) 김정일, “음악창작과 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46.

것이며 수령형상창조가 선군혁명문학예술 작품 창작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하였듯이 지난 10년에 걸쳐 북한의 문화예술부문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적 취향 내지 수요를 갖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양상 및 추세로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문예작품 창작에 있어서도 서정성·오락성·대중성 등을 가미한 외피적인 변화를 가함으로써 사상교양 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부분적 체제개방으로 인한 외부 사조·문물의 침투라고 할 때, 북한의 체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토론

◆ 사회: 최완규(경남대)

◆ 발표:

- ◎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실리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박형중
- ◎ 『김정일 정권 10년의 북한사회 변화』…서재진
- ◎ 『김정일 정권 10년: 북한의 문화예술』…임순희

◆ 토론:

- ◎ 박순성(동국대학교)
- ◎ 김병로(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 신울(명지대학교)

토 론

박순성교수(토론)

박형중박사의 발표문은 1)비교를 통해 분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2)박형중박사는 거시경제안정화정책, 기업소 자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북한을 부분개혁시기로 들어었다고 판명하고 있다. 이 두가지 관점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3)그리고 박형중박사의 의견대로 개혁과 성장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파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교사회주의적 분석과 2)의 박형중 박사의 입장에 대해 토론하겠다. 비교사회주의적 분석이 북한연구에 유효한가와 이런 틀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분석이 유효한지에 대해 논평하겠다. 비교사회주의적 분석 틀에 너무 맞추다 보면 북한의 여러 변화와 여러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다양화를 간과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분에 있어 이 두 경제 체계 사이는 경제구분보다는 정치적 구분으로 보여지며 질적인 구분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분개혁체계에 들어선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이며, 돌아간다고 해도 정체상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 개혁에 치중하여 북한경제를 분석하다 보니 대외개방에 대한 측면이 간과될 수도 있다. 북한경제가 체제전

환의 선택을 했는지 했다면 되돌아갈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거시경제안정화정책분야에서 가격체계(밑에서부터 변화)와 (체제전환의 필수적 검토상황이므로)개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병로교수(토론):

본 학술회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분야는 변화가 더디지만, 그럼에도 많은 변화의 모색들이 그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본다. 반면 사회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재진박사의 발표논문에서는 북한의 비공식 분야의 달러화가 6~10억 달러 등 구체적 자료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 수준이 높은 논문이라고 본다. 논지전개도 경제난이라는 변화의 동인이 경제사회제도변화를 발생시키고 북한주민 의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일으키며 불평등심화로 계층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3가지 관점에서 토론하겠다.

- 1) 여러사회영역에서의 변화에서 질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양적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양적분석도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2) 경제난이 북한사회 변화의 강력한 동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경제난에 대해서만, 내구력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남북한 관계변화, 중국의 변화로 인한 정보유입 등에 대한 분석이 소홀한 측면이 있음. 본인은 북한 내부붕괴보다는 중국으로의 탈출현상의

가속화가 북한의 모멘텀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난이 push요인이라 하면 중국은 pull요인이 될 것이다.

- 3) 북한이 변화되는 부분 중에서도 사회변화가 더딘 부분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산가족정책에 있어 남한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위로부터의 정책은 실현되고 있으나 일반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이산가족을 반동으로 보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대남의식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분단구조 속에서의 더딘 인식변화와 실제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인식들이 부딪히는 부분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신울교수(토론):

북한 국내정치적 구조와 그에 맞는 사회적 변화와 변환에 대해 잘 서술된 논문이다. 그러나 이론적 틀이 좀더 보충되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권적 차원이 강조되다보니, 국제사회적 변화동인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어(개방화정책과 맞물려서)아쉽다. 국제정치 사회적 변화를 동인으로 두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변화는 없으나 상당한 변화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휴대폰이 함경도지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되고 있다. 북한 측의 커뮤니케이션 양태에서 변화가 이미 상당수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방법론상의 변화라는 것에는 동감하나 방법론상의 변화만으로 폄하하기보다는 일반민

중들이 사상성 혁명성에 대한 거부감 증가라는 변화를 더 크게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은 북한이 상당부분 변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변화에 대한 긍정성, 부정성을 떠나) 예컨대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살펴보면 연변가요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박형중박사(답변):

일반적으로 북한변화를 분석·판단할 때 북한연구학자들의 개념 정의나 방법론적인 이론이 너무나 빈곤하다고 생각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틀만 보지 말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사이에는 몇가지 단계가 있다고 살펴보자는 것이다. 샘플을 여러 개 놓고 판단해야 현재의 현상이나 다음 단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해진다고 본다. 시장경제의 틀로 북한경제를 분석하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주로 화폐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시장경제에서 약한 부분이 제도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의 7.1경제개혁조치 분석시에도 대다수 연구자들이 가격체제 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가 볼 때는 국가와 기업사이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분석요인이라고 본다. 이 관계분석이 이뤄지면, 임금, 가격들의 변화는 그 안에서 이뤄진다. 북한을 살필 때 체제 전체의 변화상을 봐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개방문제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북한의 변화 비교 시 중국식, 베트남식 개혁개방과 비교하는데 제도변화의 차원에서 보면, 동구 헝가리 등도 비슷한 단계를 거

쳤다. 다만 중국은 희귀하게도 성공하였기 때문이고 중국과 베트남만 현재에 존속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비교의 틀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부분개혁체제(계획이 폐기된 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계획없는 사회주의 경제, 생산수단이 더이상 국가소유아님) 두 체제는 유의미한 경계선이 있다. 북한이 이런 식의 분류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서재진 박사님의 논문과 제 논문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본인은 북한의 현재까지 공식적 체제를 분석한 것이다(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북한 현실은 아님. 그러나 이것이 북한현실의 도면인 것임). 서박사님은 북한의 현실을 분석한 것이다.

박순성 교수(재토론)

제도론적 접근에는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도론적 접근의 핵심은 패턴의 주요요소들을 밝혀내고 이들 사이에 정합성과 모순성을 파악하고 경로이전성과 다양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박박사님의 네 가지 단계론은 제도론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제도론에서는 경제 행위자들의 행위원인부터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가격체계가 오히려 더 우선되어 연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경제가 과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계획이 없는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만약 서박사님과 다르지 않다면 현실에서 인민들의 경제작동의

들이 함께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재진박사(답변)

김병로박사님이 보완점을 잘 지적했다.

- 1) 사회변화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양적변화에 주문했으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안적 접근으로서 집단별 지역별 차이를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실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어느 지역, 어떤 집단이 더 많이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예컨대 경제개혁조치로 평양지역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 공기관으로 일과시간대로 근무하고 임금을 전액 보전받고 있다. 반면 지방은 공장가동률이 20~30퍼센트에 불과하여 오히려 20-30퍼센트에 불과한 임금만 받는 상태로 불평등의 심화로 볼 수도 있다. 농촌지역은 탈북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통편의 부족으로 이동성이 부족하고 농촌은 공장과 달리 가동이 계속되며(토지에 묶여있음), 중세의 농노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가장 구속이 심한 계층이므로 농민들의 의식이 타계층보다 보수적이다. 반면에 가장 깨여 있는 계층이기도 하다. 토지개혁(1946년)의 최대수혜자이자 최대박탈자(1958, 협동농장화)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식량난 완화는 토지의 개인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 2) 변화의 동인으로 경제난을 가장 크게 보고 다른 변수들은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변화가 미친 영향도 매우 크다. 그러나 이것도 평양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변수

영향도 중요한 데, 이것도 경제난과 연결되어 있어 자세한 상호 작용은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경제난으로 발표했다.

- 3) 탈북의 심리 매우 중요하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은 북한 변화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슷한 예로 1989년 동구붕괴의 작은 원인중 하나가 한국올림픽이라는 말도 있다.
- 4) 변화하지 않는 대남의식 부분은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북한주민들이 속마음을 가장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국 보따리장수들이 북한에 가서 남한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양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중국접경지역의 상당수 주민은 남한에 대해 알고 있다.

사회자 코멘트) 탈북자들의 답변에 편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구원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

임순희박사(답변):

변화의 요인들을 분석했다면 그것들도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컴퓨터 보급실태와 인터넷 사용실태는 아직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혜택보는 계층의 경우, 사상성, 혁명성 약화가 가능하나 일부의 변화가 북한 문예작품의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회의적이라고 본다. 주민의식 변화는 경제난과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의 침투에 의한 변화라고 본다. 북한주민가치변화는 북한 주민사상성혁명성약화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당의 공식가치 주입 시 방법상의 변화를 통해서 오락성, 서정성을 뒤집어 씌워

서 접근한 것이다. 북한소설에는 청춘남여주인공이 등장하고 애정을 진행시키나 그 핵은 여전히 수령에 대한 충성이다. 다만 그전과 달라진 것은 연예모사에 있어 손잡는 것과 껴안는 것 정도에서 끝났으나 요즘에는 감각적 표현과 묘사가 확대되고 진전되었다(황진이-장편소설-노골적인 성접촉 묘사). 결론적으로 지적하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북한문예작품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신울교수(재토론)

임박사님 분석을 부정할 의사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 특정 인터넷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당장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그 변화는 피치 못하게 개방하여 변화했다는 것이다.

김병로교수(재토론)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존 암시장 가격 현실화(쌀 550배, 옥수수 400배)를 이론적 틀에 놓고 최소화하지말고 실제 사회주민들이 느끼는 변화로 추적해보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 건 공식체제와 비공식체제의 거리가 크고 왜곡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만 봐도 북한사회 현실을 추정 이해할 수 있다.

일반토론

질문1) 발표자와 토론자가 북한경제 분야를 분석하는 관점이 다르다. 경제변화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들 요소들이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충분조건은 가격의 자유화, 생산수단 사유화, 의사소통 수평화 등 계획이 있는가 없느냐 등으로 계획에 대한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도 가격자유화가 제일 중요한데 가격자유화는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박박사님의 분석은 이중적 구조에 놓여있는데 국가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주민행동양식은 시장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박형중)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체제전환과 관련한 설명모델로는 A에서 B가되었다는 예컨대 남녀사이의 성전환 모델로 설명하기 보다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체계가 설명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비교론을 통한 단계론적 고찰이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체제전환설명보다 훨씬 분석이 용이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메카니즘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 어느 특정패키지 안에서 국가와 기업관계, 가격체계가 함께 움직인다고 본다. 286국가구조 안에서 486가격체계가 존재할 수는 없다. 단계별로 조율하는 가격체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가 변화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행태도 하루아침

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몇 단계의 제도가 존재하고 그 몇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1-01	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전성훈	저	10,000원
2001-02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황병덕	저	6,000원
2001-03	중·러간 전략적 협력강화와 한반도	신상진	저	4,000원
2001-04	남북 통합과정에서 기업인과 이산가족 교류의 역할	최의철	저	7,500원
2001-05	일본의 북한위협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3,500원
2001-06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김학성·최진욱	공저	6,500원
2001-07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협력 : 첨단기술산업 포함	김영윤	저	6,500원
2001-08	일본의 국가 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저	4,500원
2001-09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및 속도와 동태	박형중	저	8,500원
2001-10	통일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규	저	5,000원
2001-11	「김정일 선집」 분석	이교덕	저	7,500원
2001-12	김정일 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분석	전현준	저	8,000원
2001-13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재진	저	7,000원
2001-14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	임순희	저	5,500원
2001-15	북한문학의 수용실태조사	이우영	저	6,000원
2001-16	남북한 재난관리 협력방안	이금순	저	5,500원
2001-17	북·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	박중철	저	4,000원

2001-18	남북한 에너지분야 교류·협력 발전방향	김규륜	저	3,000원
2001-19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이현경	저	6,000원
2001-20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4,000원
2001-21	러시아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푸틴의 한반도정책	여인곤	저	6,500원
2001-22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김국신	저	4,500원
2001-23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동북아 활용방안	최수영	저	4,500원
2001-24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박영호	저	5,000원
2001-25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	허문영	저	6,500원
2001-26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김성철	저	5,500원
2001-27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조한범	저	4,500원
2001-28	“남북환경공동체” 형성 방안	손기용	저	4,000원
2001-29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임강택	저	8,000원
2001-30	남북한 이념통합의 방향과 과제	조민	저	5,000원
2001-31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함의	저	5,000원
2001-32	김정일연구	오승렬	저	5,000원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김성철 외	공저	10,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전성훈	저	8,0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손기용	저	8,5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협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력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의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접진적 시나리오)	조한범의 공저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행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5,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1	최의철·서재진·이금순 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1</i>	최의철·서재진·이금순 외	공저	6,500원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1~2002	5,000원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1-01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7,500원
2001-02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	7,500원
2001-03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	5,500원
2001-05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5,500원
2001-07 분단국 통합과 평화협정	6,000원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200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0권 2호 (200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0, No. 1 (2001)	8,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0, No. 2 (200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1-01 남북연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5,500원
2001-02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10,000원
2001-03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평화공존의 제도화 추진방안	9,000원
2001-04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4국 협력유도 전략	8,000원
2001-05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방안	6,000원
2001-06 북한의 경제전환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9,500원
2001-07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6,000원
2001-08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연합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10,000원
2001-09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방안	8,500원
2001-10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여성정책 추진방안	9,500원
2001-11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구축방안	6,500원
2001-12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10,000원
2001-13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연계방안 연구	8,000원
2001-14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세부실행계획	10,000원

2001-15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연구			6,500원
2001-16	2001년 협동연구 요약집			7,500원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환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가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인쇄/2004년 6월 11일

발행/2004년 6월 14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박영규

편집인/기획조정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1 팩시밀리 901-2541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ISBN 89-8479-244-1

10,000원